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韩半岛统一愿景和韩中关系的未来

2013.11.20 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2013.11.20 星期三 首尔大学 湖岩教授会馆

주최 主办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후원 协办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
韩半岛统一愿景和韩中关系的未来

2013.11.20 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2013.11.20 星期三 首尔大学 湖岩教授会馆

주최 主办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후원 协办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ogram

11.20 (수)

* 한 · 중, 중 · 한 동시통역 제공

개회식 9:00-09:30
환영사: 박명규 (朴明圭, 통일평화연구원장)
개회사: 김학준 (金學俊,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축　사: 윤병세 (尹炳世, 외교부장관), 오연천 (吳然天, 서울대 총장)

기조연설 9:30-10:30
한국측: 하영선 (河英善, 서울대)
중국측: 진찬룽 (金灿荣, 인민대)

제1회의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한중관계 10:40-12:30

사 회 송민순 (宋旻淳, 前 외교통상부 장관)

발 표
-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대와 전망 천펑쥔 (陈峰君, 북경대)
-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대와 전망 전성흥 (全聖興, 서강대)
-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동북아 지역질서 진창이 (金强一, 연변대)

토 론 이문기 (李文起, 세종대), 장샤오밍 (張小明, 베이징대), 신성호 (申星浩, 서울대)

- **오찬: 크리스탈룸** 12:30-14:00

제2회의 한중관계의 미래비전과 한반도 통일 14:00-16:00

사 회 장달중 (張達重, 서울대)

발 표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진징이 (金景一, 북경대)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안정: 비전과 과제 전재성 (全在晟, 서울대)
- 동북3성과 한반도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 퍄오동쉰 (朴東勛, 연변대)

토 론 조성렬 (趙成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시엔둥 (韓献棟, 중국정법대학),
정형곤 (鄭衡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면기 (洪冕基, 동북아역사재단)

- **휴식** 16:00-16:20

제3회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 소통과 협력 과제 16:20-18:20

사 회 진징이 (金景一, 북경대)

발 표
- 동북아 역사인식의 전환적 과제 박태균 (朴泰均, 서울대)
-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장즈창 (張志强, 사회과학원)
-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강명구 (姜明求, 서울대)

토 론 진쥔 (金俊, 절강공상대학), 백지운 (白池雲,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왕린창 (王林昌, 인민일보), 박장배 (朴章培, 동북아역사재단)

- **만찬: 릴리룸** 18:40-20:30

11.20 星期三

* 提供韩-中，中-韩 翻译

开幕式 **9:00-09:30**
开幕词: 朴明圭 (首尔大学 统一和平研究院 院长)
开会词: 金学俊 (东北亚历史财团 理事长)
祝　词: 尹炳世 (外交部 部长), 吴然天 (首尔大学 校长)

几条演讲 **9:30-10:30**
韩方: 河英善 (首尔大学)
中方: 金灿荣 (人民大学)

第一场　中美 新兴大国和韩中关系　10:40-12:30

主 持　宋旻淳 (前外交部 部长)

發 表
- 朴槿惠政府的对中国政策: 期待和展望　陈峰君 (北京大学)
- 习近平政府的对韩半岛政策: 期待和展望　全圣兴 (西江大学)
- 中美新型大国关系和东北亚区域秩序　金强一 (延边大学)

讨 论　李文起 (世宗大学), 张小明 (北京大学), 申星浩 (首尔大学)

- 午餐: Crystal Room　**12:30-14:00**

第二场　韩中关系的未来愿景和韩半岛统一　14:00-16:00

主 持　张达重 (首尔大学)

發 表
- 对于韩半岛统一的中国的认识和对应　金景一 (北京大学)
- 韩半岛统一和东北亚的和平稳定　全在晟 (首尔大学)
- 东北三省和韩半岛经济协力愿景和课题　朴东勋 (延边大学)

讨 论　赵成烈 (国家安保战略研究所), 韩献栋 (中国政法大学),
郑衡坤 (对外经济政策研究院), 洪冕基 (东北亚历史财团)

- 休息　**16:00-16:20**

第三场　为东北亚和平所需要的韩中间沟通和协力　16:20-18:20

主 持　金景一（北京大学）

發 表
- 为了东北亚历史认识的转换　朴泰均 (首尔大学)
- 为了加强韩中人文纽带的课题展望　张志强 (中国社科院)
- 为了进一步韩中文化交流的课题和展望　姜明求 (首尔大学)

讨 论　金俊 (浙江工商大学), 白池云 (首尔大学 统一和平研究院),
王林昌 (人民日报), 朴章培 (东北亚历史财团)

- 晚餐: Lily Room　**18:40-20:30**

Contents

06 • 환영사
08 • 기조연설

제1회의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한중관계
第一场 中美 新兴大国和韩中关系

23 • 朴槿惠政府的对中国政策: 期待和展望 陈峰君 (北京大学)
34 •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대와 전망 천펑쥔 (陈峰君, 북경대)
37 •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대와 전망 전성흥 (全聖興, 서강대)
54 • 习近平政府的对韩半岛政策: 期待和展望 全圣兴 (西江大学)
57 • 中美新型大国关系和东北亚区域秩序 金强一 (延边大学)
68 •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동북아 지역질서 진창이 (金强一, 연변대)

제2회의 한중관계의 미래비전과 한반도 통일
第二场 韩中关系的未来愿景和韩半岛统一

73 • 对于韩半岛统一的中国的认识和对应 金景一 (北京大学)
86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진징이 (金景一, 북경대)
91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안정: 비전과 과제 전재성 (全在晟, 서울대)
105 • 韩半岛统一和东北亚的和平稳定 全在晟 (首尔大学)
107 • 동북3성과 한반도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 퍄오둥쉰 (朴東勛, 연변대)
124 • 东北三省和韩半岛经济协力愿景和课题 朴东勋 (延边大学)

제3회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 소통과 협력 과제
第三场 为东北亚和平所需要的韩中间沟通和协力

129 • 동북아 역사인식의 전환적 과제 박태균 (朴泰均, 서울대)
140 • 为了东北亚历史认识的转换 朴泰均 (首尔大学)
141 • 为了加强韩中人文纽带的课题展望 张志强 (中国社科院)
151 •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장즈창 (張志强, 사회과학원)
153 •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강명구 (姜明求, 서울대)
155 • 为了进一步韩中文化交流的课题和展望 姜明求 (首尔大学)

157 • 프로필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반도통일과 한중관계의 미래'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하영선 교수님, 발제를 위해 글을 작성해주시고 먼 길을 와주신, 진징이 교수님을 비롯한 중국의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옥고로 함께 참여해주시는 한국의 연구자들께 주최측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축사를 해 주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님, 오연천 서울대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님, 장달중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동주최기관이자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지난 6월에는 양국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양국의 협력관계 확대와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국 간에는 매우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관계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양국을 오가는 유학생의 숫자도 매우 많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적지 않은 수의 중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도 매우 많습니다. 오고가는 항공기의 숫자만큼이나 상호기대와 협력의 기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높은 만큼 현실의 벽도 높습니다. 흔히 말하듯 '아시아 패러독스'의 현실이 한중간에도 놓여있어서 상호신뢰와 문화적 이해의 수준은 경제협력과 사회교류의 실상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오늘의 회의는 한국과 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넘어서 건설적으로 협력하면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쟁점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한중 간에의 학술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고 20세기 이후의 변화도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한중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역사 화해와 교류 확대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발전적 담론을 개발하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는 한중간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자칫 그것을 가장 어렵게 만들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고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가 전지구적 쟁점이 되어 있고 이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는 국제적으로 널리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조치를 얻어내는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경제난, 많은 잠재적 갈등을 안고 있는 북한문제가 중국 및 동북아 전체의 중대한 과제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큰 화두는 단순히 한국민족의 오랜 숙원을 이룬다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 불안구조를 해소하고 21세기 평화와 공영, 발전과 신뢰의 지역을 만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중미래비전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양국간 다양한 협력의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그 가운데 "인문협력"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간의 전략대화가 있었고 어제 19일에는 "제1차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현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한결같이 주변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노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인문교류, 문화교류, 학술교류는 단기적인 현안 해결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상호신뢰와 공동발전의 21세기를 여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중 간에 진지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의 공감과 지혜를 모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1세기 미래에는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날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중추적 행위자의 하나인 한국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향후 바람직한 학술협력의 한 모델로 자리매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박 명 규**

기조연설

미 · 중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과 한반도 복합그물망 통일*

하영선 (河英善, 서울대)

한반도 역사는 항상 주변 열강들의 커다란 영향 속에서 전개되어왔다. 한반도의 분열과 통일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 천하가 통일과 분열을 거듭하는 틀 속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했지만, 19세기 산업혁명에 이은 본격적인 서세동점의 문명사적 변화와 더불어 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근대국민국가 건설에 실패해 망국의 뼈아픈 체험을 했다. 1945년 이후 미소 중심의 냉전질서 속에서 한국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으나 분단된 불구국가로서 통일국가의 꿈을 쉽사리 현실화할 수 없었다. 탈냉전의 변화를 겪은 후 복합의 세기로 접어들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통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해야 할 역사적 변환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천하 질서와 한반도 통일, 국제질서와 한국의 망국, 냉전질서와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간단하게 되돌아본 다음에 21세기 미중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과 한반도 복합그물망 통일 문제를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1. 천하 질서와 한반도의 통일[1)]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는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천하예의지방(天下禮儀之邦)이라는 문명표준에 익숙해져서 살아왔다. 천(天)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B.C. 11세기 중국의 은 왕조에 이은 주 왕조의 등장과 함께였다. 주나라 초기 대표적 금문(金文)인 대우정(大盂鼎)에 새겨진 명문(銘文)은 위대한 문왕은 천명(天命)을 받았으며 무왕은 사방(四方)을 보유했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천자가 다스리는 천하국가가 있고 그 속에 제후의 나라인 국이 품어져 있었으며, 동시에 변방의 이적국가들도 이러한 위계질서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천하국가의 중심무대는 예(禮)의 무대였다. 예(禮)라는 글자의 풍(豊)이 본래

* 이 글은 하영선 "남북통일의 역사적 전망: 미 · 중시대의 복합그물망 통일," 윤영관 편, 『한국통일』 (서울: 늘품플러스, 2013)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하영선, 『동아시아질서건축사: 천하에서 복합까지』 (근간); 하영선, "동아시아질서의 역사적 변환: 고대천하에서 미래복합까지," EAI 사회과학대강좌 (2012); 〈http://www.hayoungsun.net〉

제기(祭器)를 나타내는 것처럼, 예의 기원은 하늘이나 귀신들에 대한 제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면 인간관계전체를 규율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천자와 제후 간에는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의 예를 교환하는 군신관계를 맺었으며 권외의 야만인 '오랑캐'와의 관계에도 이 예를 준용했다. 이러한 무대에서 천하예의지방의 기본 행동원칙은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자소사대(字小事大)였다.

진한시대에 이르러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이래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천하를 통일하고, 한 제국은 주변 세력들에 따라서 군사적 정벌, 정치적 기미(羈縻), 회유(懷柔)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사대자소의 예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아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 천하질서를 형성했다. 그 이후 당 제국은 천하질서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하였고, 명청 제국들은 보다 복합적인 천하질서를 건축했다. 이러한 천하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원칙적으로 중국에 사대의 예를 지켰으나 때로는 중국과 갈등과 전란을 겪으면서 통일된 삶의 단위체를 유지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에 오랫동안 속해 있기는 했으나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는 독특한 역사를 이끌어 왔다.

2. 근대국제질서와 한국의 망국[2)]

천하예의지방을 오랫동안 문명 표준으로 삼고 살아왔던 동아시아에 19세기 중반 뒤늦게 역사의 태풍이 불어닥쳤다. 중국 중심의 전통 천하질서가 구미·중심의 근대 국제질서로 탈바꿈하는 문명사적 대변환을 맞이했다. 주인공은 천하국가에서 국민국가로, 중심무대는 예(禮)에서 부국강병으로, 연기(演技) 원칙은 자소사대(字小事大)에서 자강균세(自强均勢)로 바뀌게 된다.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 구미의 국민국가들은 부국강병의 무대에서 자강균세를 넘어서서, 아시아를 포함하는 전 세계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제국적 경쟁을 벌였다. 새로운 근대국제질서와의 본격적 첫 만남에서,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전통적인 척사론의 시각을 넘어서서 새로운 외적에 대한 정보 수집과 방어책을 고민하는 해방론(海防論), 서양 근대국제질서의 작동 원리인 만국공법과 균세지법을 활용하여 서양세력을 다루되, 이러한 서양국제사회의 작동원리를 새로운 문명표준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고대의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존재했다는 원용부회론(援用附會論)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을 거치면서 천하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감국(監國)정치를 감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구미 열강들과의 근대적

2) 하영선, 『한국 근대국제정치론』 (근간)

국제관계를 추진해 보려는 양절체제론(兩截體制論)의 어려운 시도를 했다. 청일전쟁(1894-1895)에서 패배한 중국은 천하질서 대신 근대국제질서를 새로운 문명표준으로서 받아들여야 했다. 한국도 갑신정변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명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한 자강균세론을 뒤늦게 모색해야 했다.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근대 국민부강국가라는 새로운 문명표준을 과감하고 재빠르게 받아들인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겪은 삼국간섭의 수모를 와신상담 외교로 극복하고 러일전쟁(1904-1905)을 승리로 이끈다. 일본의 승리는 한국이 희망하는 자강균세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일본 주도의 지역제국 질서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새로운 지역질서 개편을 위한 명분으로서 일본 주도의 아시아 연대에 기반을 둔 동양평화론을 본격적으로 주장했다. 한국은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론과 준비론의 갈등 속에서 일본형 동양평화론의 허구성을 일사불란하게 드러내지 못하였고, 동양과 한국이 동시에 평화로운 한국형 동양평화론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지도 못한 채 1910년 국망의 비극을 맞이한다. 식민지 기간에 한국의 준비론, 외교론, 무장투쟁론의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서 광복의 불빛은 쉽사리 찾아지지 않았다.

3. 냉전질서와 한반도의 분단

한국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함에 따라 식민지의 질곡에서 해방되어 다시 전후 국제정치무대에 서게 됐다. 그러나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전후 세계냉전질서의 주전장이 됨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한국전쟁을 겪었다. 전쟁 이후 분단은 본격적으로 고착화되어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냉전 한반도는 1972년 남북한의 7.4 남북공동성명과 함께 데탕트의 기대와 좌절의 역사를 겪는다.[3] 한국은 1970년대 초 미·중의 데탕트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3중 생존전략을 세우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했으나 한반도 데탕트의 꿈을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초 지구적 탈냉전의 시작과 함께 핵무기를 포함한 3중 생존전략을 마련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했으나 한반도에 탈냉전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21세기를 앞두고 소련의 해체에 따른 지구적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 분단의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한반도는 탈냉전의 실험을 뒤늦게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3)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 Project, Woodrow Wilson Center,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A Critical Oral History"; 〈http://www.wilsoncenter.org〉

세계질서의 변화는 한국 현대국제정치의 힘겨운 변화를 훨씬 앞서가고 있다. 21세기 세계질서의 주인공, 무대, 연기의 변화는 거의 19세기 한국이 겪은 문명사적 변환을 방불케 하고 있다. 국민부강국가가 그물망지식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부강국가들의 생존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동시에 국내정치사회의 민주화도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냉전분단체제의 못 푼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은 복합 변환의 세계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4. 21세기 신문명표준과 복합화

세계 전체가 빠르게 복합그물망화되어 가고, 동아시아도 마소 중심의 복합질서가 형성되는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기존의 근대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시각을 넘어서서, 복합그물망의 형성이라는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국내의 통일담론은 아직도 근대적 통일론을 본격적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60년대 이후 북한의 남북연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리고 한국의 국가연합, 연방제 통일방안은 모두 근대적 안목의 통일 모색이다. 국내 진보그룹의 국가연합, 연방제안이나 북한의 연방제안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판단은 21세기의 변화를 긴 역사의 안목에서 읽으면쉽게 가능하다. 그리고 19세기 동양의 전통국가가 서양의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문명 표준을 따라잡지 못해서 겪었던 커다란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의 정치체를 구축해야 21세기 무대에서 생존과 번영이 가능한가를 주목해야 한다.

'복합의 세기'라는 21세기에는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 등장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냉전이 해체되면 탈냉전의 시대, 평화의 세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온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 변화는 주인공, 무대, 연기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양의 전통 질서에서 천하국가가 기본 단위였다면 19세기에 우리에게 다가 온 서양의 근대 국제질서에서는 국민국가가 주연급 주인공이었다. 국민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주인공은 무대에 오를 수가 없었다. 21세기에는 근대 국민국가의 모습만으로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기 어렵고, 늑대거미처럼 그물망 국가(network state)의 이중 모습을 갖춰야 한다. 무대도 바뀌고 있다. 전통 천하질서의 기본 무대는 예(禮)였으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무대의 모습은 부국강병, 곧 군사와 경제가 중심이 되었고 21세기에는 복합무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부국강병 중심의 근대무대는 환경과 문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첨단 기술혁명과 함께 지식이 새로운 기층무대로 등장했다. 그리고 3층 복합무대의 상층무대로

통치무대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평면적인 부국과 강병의 두 무대에서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주인공이 되려면 다보탑 같은 3층 복합무대에서 동시에 활약해야 한다. 연기의 내용도 갈등과 협력 그리고 공생의 복합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도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다운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 또한 복합 그물망의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와 지구촌,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질서와 새롭게 만나야 하고 동시에 국내 그물망 질서를 갖춰야 한다.

5. 미 · 중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

복합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의 삶터인 동아시아에도 신질서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정책의 기본 설계에 맞춰서 본격적인 개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신형대국관계의 실험장으로서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두 정책이 서로 어떻게 얽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힐라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1년 10월 "미국의 태평양세기"라는 글에서 재균형 정책의 핵심 6원칙으로서 안보동맹 강화, 중국을 포함한 신흥대국과 관계 강화, 지역 다자기구의 관여, 무역과 투자 확대, 광역 군사력 배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했다.[4]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2012년 3월에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기성세력(established power)'과 '신흥 세력(emerging power)'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반드시 군사적으로 충돌했으나, 미국과 중국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싸우지 않는 새로운 대국관계를 건설해 보겠다고 연설했다.[5]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013년 11월 CSIS 강연에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장기적 도전의 복합화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균형된 대응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추진하며, 군사력은 선도적 역할이 아닌 외교, 경제, 문화적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6]

한편 중국도 시진핑 국가부석이 2012년 2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미·중이 협력해서 21세기 신형대국관계를 건설하자는 연설을 했다.[7] 후진타오

4) Hilary Rodham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Magazine (October 11, 2011).
5) Hilary Rodham Clinton "Remarks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China Conference Remarks," (March 7, 201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2/03/185402.htm〉.
6) Chuck Hagels, "Global Security Forum," (November 5, 2013); 〈http://www.defense.gov/speeches/speech.aspx?speechid=1814〉
7) 習近平 "在美國 友好團体歡 迎午宴上的演講" (2012. 2. 16.)

국가주석은 2012년 5월 제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최대발달국가인 미국과 최대발전국가인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를 강조했다.[8] 왕이 외교부장은 2013년 9월20일 부르킹스 연구소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함께 이기는 협력’으로 요약한 다음에 신형대국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쌍방의 핵심이익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하고, 구체적 사례로서 대만문제를 들었다. 둘째, 중국과 미국이 공동 노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뜨거운 문제에서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야 하며, 구체적 사례로서 북핵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들었다.[9]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정책을 종합해 보면, 우선 미국이 신흥대국 중국의 부상에 따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하되 중국을 파트너로 일단 인정하고 있고 중국도 향후 1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최대한 군사적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려 하므로, 미·중이 군사무대에서 충돌할 위험성은 낮다. 그러나 경제무대에서는 협력과 경쟁이 진행될 것이며, 특히 새로 부상한 환경, 문화, 정보기술/지식 등의 무대에서는 새로운 표준질서 마련을 위한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질서에서는 중국이 국내 체제의 안전을 위한 국내안보, 주권이나 영토를 지키는 국제안보, 지속적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안보의 3대 핵심이익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의 경우에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국은 핵심이익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며, 일본의 아베 정부도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함께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관찰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보상하지 않으며 북한이 새 노선을 택하면 도울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반도 안정, 반도 비핵화,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3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서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이 경제 핵 병진로선을 유지하는 한,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2005년 ‘9.19’ 합의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8) 胡錦濤 “在第四輪中美戰略与經濟對話開幕式上的致辭.” (2012. 5. 4.)
9) 王毅 “如何构建中美新型大國關系,” 美國布魯⊠斯學會 (2013. 9. 21.).

6. 북한의 변화: 경제 비핵안보 병진로선 2.0으로 가는 길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새로운 문명표준 모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는 북한의 경제 비핵안보 병진로선 2.0을 위한 공동진화(coevolution)다.[10)] 지금까지 남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여러 모색을 해 왔는데 크게 보면' 햇볕'과' 제재'의 양극단적인 시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은 어느 것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햇볕론자들은 오랜 노력 끝에 햇볕의 열매를 얻으려는 때에 새 정부가 정책전환을 해서 망쳐버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10년의 햇볕정책이 제한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가져오긴 했지만 북핵실험을 막지 못한 현실이 잘 말하고 있듯이 북한체제의 핵심인 핵선군정치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단순한 제재론도 답은 아니다. 북한은 전 세계 어느 체제보다도 제재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체제다. 따라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바꾸기는 어렵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과 밖에서 공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햇볕론은 북한 내부의 변화 가능성의 어려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햇볕이 언젠가는 정치 군사영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반대로 제재론은 모든 책임을 북한의 체제적 속성에서 찾고, 이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안과 밖이 서로 맞물려서 공동진화하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를 가져 오기란 어렵다. 중요한 것은 안의 진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밖의 진화를 어떻게 동시에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2010년대 초반 북한의 진화 과정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리더십의 변화다. 지난 60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은 1950년대에 한국전쟁처럼 무력통일을 시도했으며, 60년대에 들어서서 3대 혁명역량강화로 통일을 모색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는 선군정치를 강조했지만 통일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60여 년의 역사적 과정에서 북한 정치 권력의 변화는 지도자의 사망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등장이라는 세 번 뿐이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20년 만에 찾아 온 중요한 기회다. 북한의 새 지도자가 핵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21세기무대에서 정상국가로 연기(演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새 지도자가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핵선군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신국가안보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 2천만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로동당 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적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 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있지만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적 요구에

10) 하영선 조동호 공편,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서울: EAI, 2010).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했다.[11]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2013년 5월 2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견에서 병진로선대신에 북한식 화평발전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12]

병진로선 2.0의 선택은 단순히 정치구호나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새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실천할 정치권력이 기존의 선군정치 주도세력에 이어 김정은 체제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김정은 체제가 신생존전략을 추진하려면 국내적 정통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국내안보, 핵문제를 포함한 국제안보, 그리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제안보의 3대 난관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야만 한다. 문제의 어려움은 아버지 김정일처럼 어려운 숙제를 다시 한 번 핵선군정치로 풀어 보려고 하는 경우에 부딪치게 될 제2의 고난의 행군은 북한을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식물국가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죽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병진로선 2.0의 진화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 핵 병진로선 1.0을 벗어나서 경제 비핵안보 병진로선 2.0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북한 못지않게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북핵 문제의 논의과정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므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선군정치의 과잉 안보론이다. 김정은 체제가 기존의 과잉 안보론 대신 적정 안보론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경우에, 미국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새 체제에 적대적이 아니라 비적대적 모습으로 비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새 체제가 추진하는 '선경(先經)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북한 병진로선 2.0을 위한 협력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 북한에 자본주의의 '황색바람'이 불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리라는 공포감을 주지 않도록 해서 김정은 체제가 조심스럽게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990년대 중반 김일성 후계체제가 선군정치 대신 개혁개방으로 왜 가지 못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새 김정일 체제는 새로운 정책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통치'에 따라 결국 핵선군정치에 머물렀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또 다시 아버지의 유훈통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것인가를 주목해야 한다.

---

11) "조선로동당 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의" (2013. 3. 31.);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보고,"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12) 习近平会见金正恩特使崔龙海(2013-05-24) "崔龍海說，朝方眞誠希望發展經濟，改善民生，需要營造和平的外部环境.朝方愿与有關各方共同努力，通過六方會談等多种形式的對話協商妥善解決相關問題，維護半島和平穩定，朝方愿爲此采取積极行動"

21세기 세계무대의 문명사적 변환에도 불구하고 새로 등장한 북한의 감정은 체제가 앞으로 30년 동안 핵선군정치를 계속한다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거쳐 식물국가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북한의 새 리더십이 선진화 1단계로서 중국의 개혁개방처럼 북한형 개혁개방을 추진해서 근대적인 기본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매진하고 선진화 2단계로서 21세기에 맞는 복합그물망까지 추진할 수 있다면 남북한의 복합그물망 통일은 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발전은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한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의 공동진화 속에서 가능하다.

북한의 선진화와 함께 남북은 근대적 만남을 넘어서서 복합의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야 한다.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합적 형태로 얽혀야 한다. 근대적 의미의 통일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 문제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복합그물망의 모델에 맞게 남북관계를 진화시켜 나가려면 현재 보다 훨씬 복잡한 건축물을 구상해야 한다. 한반도의 남북한 차원에서 지식기반 무대를 어떻게 마련하고 또 중심층의 안보, 번영, 문화, 환경 무대를 어떻게 짜야하며, 마지막으로 통치무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새롭게 궁리해야 한다. 그 일차적인 출발은 북한 내부의 선진화다. 동시에 북한에 3층 복합탑 쌓기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3층 복합탑 쌓기가 함께 공진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 진화과정을 통해서 남북한은 비로소 21세기 복합통일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7. 복합그물망 통일과 동아시아신질서 공진

한반도는 21세기 통일 과정에서 동아시아와도 새롭게 연결돼야 한다. 우선 21세기 동아시아의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은 비현실적이다. 공동체와 사회는 개념사적으로 보면 유럽의 커뮤니티(community)/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나 소사이티(society)/게젤샤프트(Gesellschaft)의 번역어이다. 사회는 이해와 가치를 같이 하는 인간 집단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사회의 '사(社)'는 원래 글자의 역사를 찾아보면 '시(示)'에다가 '토(土)'를 합친 것이다. 전통 농경 집단은 풍년을 위해 땅에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명백히 이해관계를 같이했다. 원래 '사(社)'의 모습은 먹고 살기 위한 모임이다. 하지만 공동체는 단순히 이해나 가치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identity)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마음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고 가슴으로 함께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21세기동아시아 현실과 맞지 않다. 역설적으로 19세기 동아시아의 공동체적 요소는 서양의 근대 국제사회적인 요소가 전파되는

속에서 해체되었다.

21세기 한반도의 복합네트워크 통일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질서도 공동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직 갈 길이 먼 목표다. 공동체의 형성은 원칙적으로 가슴과 가슴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져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연방이나 유럽의 국가연합처럼 이중 정체성을 만들어야하며 우리 경우에는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국가, 한반도, 동아시아의 3중 정체성이 필요하다. 사회의 형성은 상호 이익과 가치를 위해 집단적 모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형성은 아직 ‘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를 마련하려는 초보 단계에 있다.[13)]

이러한 초보 단계에서 우선 풀어야 할 숙제는 21세기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마중 중심의 동아시아 복합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통일을 이루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 같은 기존 우방을 비롯하여 중국과 같은 새로운 우방을 아우르는 ‘복합그물망 치기의 국제정치’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복합거미줄을 치면서 한국이 병행할 것은 기존 동아시아 그물망의 심화다. 핵심은 한 · 미동맹이고 보조망은 한일 협력이다. 한 ·미동맹은 1950년대 냉전시대에 국가 생존을 위한 군사적 협력에서 시작됐고 21세기에 들어 전략동맹에서 복합네트워크적 동맹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새로 쳐온 한중 그물망이다.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로 표현되고 있는 한중관계는 상호 정치경제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도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20세기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적대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시에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21세기 한중 협력그물망은 반드시 한·미동맹 그물망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21세기 복합화 시대의 거미줄은 이중으로 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을 신흥대국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지정학적 특수성 속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더 이상 냉전시대처럼 적대관계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21세기 마중 복합화 시대에서는 한국은 한·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중국 거미줄을 충분히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간의 복합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한일 복합네트워크관계를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한중의 전략적 우호 협력관계를 21세기형 동맹관계로 키워 나가야 한다.

13)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의 구축』 (서울: 한울, 2011).

21세기 한중관계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의 '2049 프로젝트'다. 현재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평발전'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일정 단계를 넘게 되면 '핵심이익'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군사력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핵심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 당사국들은 이러한 현실이 다가오기 전에 중국이 동아시아와 지구 거미줄 속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향후 30년은 21세기 세계질서의 사활을 결정하는 '긴박한 30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당사국들과 함께 동아시아 신질서를 본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안보, 번영, 신흥의 세 무대를 복합적으로 동시 건설하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8. 한국의 천하 복합그물망 짜기

한반도의 복합그물망 통일을 위해서는 동시에 21세기 천하통일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핵심에는 전통적 자원력(resource-power)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력(network-power)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경영학 연구들은 네트워크력의 세 원천을 강조하고 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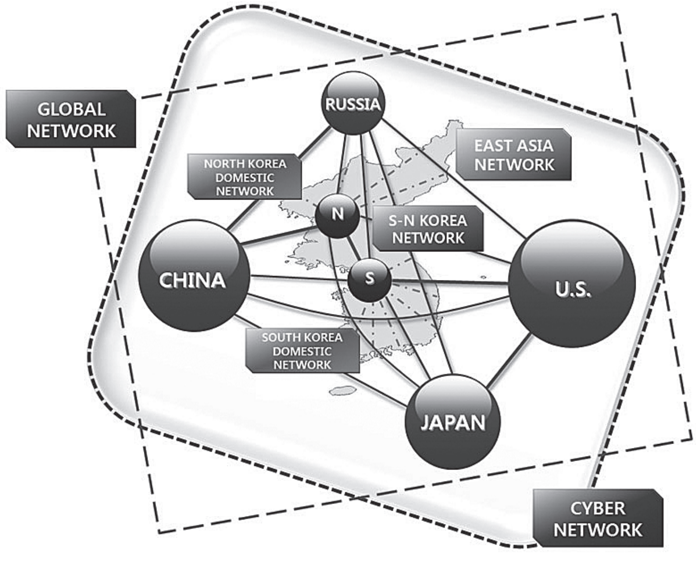
첫째로 네트워크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거미줄을 보다 두껍게 쳐야 한다. 냉전시대에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관계는 21세기 복합네트워크 동맹관계로 심화시키고, 한일 간에도 새로운 복합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하게 쳐야 한다. 둘째로는 거미줄을 최대한 넓게 쳐서 생기는 확대 네트워크력이다. 한국이 네트워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의 기존 그물망을 넘어서서 중국에 복합그물망을 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는 지구 공간과 사이버 공간으로 그물망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을 정보와 지식으로 연결해 주는 지식 중개인(knowledge broker)의 역할이다. 동아시아 그물망 중에 남 · 북, 북 · 일, 북 · 미 관계는 공식 외교관계가 없어서 구조적 구멍이 나 있으므로 한국은 지식 중개인 역할을 통해서 네트워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천을 잘 이용해서 거미줄을 치면 주변 대국들에 비해 자원력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네트워크력을 키울 수 있다. 한반도는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자원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원력이 강한 대국들보다 네트워크력으로 훨씬 세련되게 힘을

14) 하영선 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복합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결론.

보완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이 힘을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네트워크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18세기 후반 박지원이 『허생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청 네트워크 외교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15] 18세기 초 서울의 변부자가 자신의 친구이자 북벌론을 고민하던 어영대장 이완을 데리고 온다. 허생은 첫 번째로, 지식 외교를 위해 와룡선생 같은 지략가를 천거하면 임금에게 아뢰어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이완이 어렵다고하자 두 번째로,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가 망한 후 조선으로 넘어온 명나라 장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 권귀들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냐고 묻는다. 그것도 어렵다고 하자 마지막 계책으로 청나라를 치고 싶으면 우선 적을 알아야 하니 나라 안의 자녀들을 가려 뽑아 변복, 변발시켜 대거 중국으로 유학 보내서 벼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서민들은 중국에 건너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청의 승낙을 받아 지식인과 장사꾼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중국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청의 중심 세력들과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사실상 천하를 호령하거나 최소한 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완은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허생이 대노하면서 이완을 쫓아 보냈다. 허생은 당시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북벌론을 비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 대안으로서 소프트 파워 외교론인 북학론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림 1〉 한국의 천하 복합그물망 짜기



15) 하영선, 『역사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서울: 을유문화사, 2011), 제1장 연암 박지원의 중국 바로 보기.

21세기 연암 프로젝트는 국내를 포함해서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촌, 사이버공간까지 5중 네트워크 짜기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그중에도 21세기 한반도 그물망 통일은 21세기형 천하 그물망 짜기와 함께 공진해야 한다. 근대 국제질서를 되돌아보면 자원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세계질서의 중심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좋은 예로서 네덜란드는 17세기 세계질서를 주도했다. 21세기 한국도 근대의 숙제인 남북통일을 21세기적 복합그물망 통일의 모습으로 완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와 지구,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과 복합적으로 그물망을 짜고 동시에 국내 그물망 짜기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21세기 천하 복합 그물망 짜기는 새로운 문명 표준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제1회의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한중관계
第一场 中美 新兴大国和韩中关系

- 朴槿惠政府的对中国政策: 期待和展望
  陈峰君 (北京大学)
-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대와 전망**
  천펑쥔 (陈峰君, 북경대)

-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대와 전망**
  전성흥 (全聖興, 서강대)
- 习近平政府的对韩半岛政策: 期待和展望
  全圣兴 (西江大学)

- 中美新型大国关系和东北亚区域秩序
  金强一 (延边大学)
-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동북아 지역질서**
  진창이 (金强一, 연변대)

朴槿惠政府的对中国政策: 期待和展望

<朴槿惠政府对华政策与前景>

陈峰君 (北京大学)

如何准确概括朴槿惠政府对华政策说法不一， 较多的提法是在中美间推行“平衡外交”政策，也有提 “联美和中”战略[1]。笔者以为用 “实质性的全面战略伙伴关系”较为贴切。

一、提升“实质性的全面战略伙伴关系”的表现

客观地说，中韩建交二十年來，韩历届政府均重视对华关系，也均力图在中美间实行一定程度上均衡外交，而且间隔5—6年就上一个的台阶。(1992年善邻友好关系，1998年合作伙伴关系，2003年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全面战略伙伴关系)

“中韩战略伙伴关系”，自李明博执政时期就已拟定，但受诸多内外因素制约，特别是天安舰等事件影响，中韩战略伙伴关系虽然也有进展，但“虚多实少”，甚至在某些方面有倒退迹象。“两国的“战略伙伴”没有任何具体和实质性的内容。2010年之后，中韩之间的战略疑虑甚至在不断上升。”[2] 。虽然从经济和社会这两国角度来说，中韩关系很“紧密”，但处于“一条腿粗、一条腿细”的“经热政冷”状态。

李明博政府对朝政策的失败为朴槿惠修订调整提供了前车之鉴。李明博本想通过韩美同盟压缩朝鲜战略活动空间，以逼迫朝就范，不惜弱化甚至忽视与中国的协调。事实证明，韩美对朝共同施压导致朝鲜与韩美同盟的全面反弹与对立，朝鲜在压力下进一步加强了与中国的关系，弱化和忽视与中国的协调，不仅从根本上使得韩国对朝政策的进一步无效化，而且反过来也使得韩国更加依赖美国的支持。在美国对朝政策无根本变化的

1) 申宗代《中美之间的均衡外交， 要从改善南北关系开始》(미 • 중 사이에서의 (균형외교,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작해야)
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聚焦朝鲜半岛”第25号 (2013-09-06)

2) 朱锋：《中韩关系是亚洲最有潜力的战略伙伴关系》华西都市报2012年08月27日

情况下，李明博的政策实际上压缩了韩朝的谈判空间，显得手足无措，只得进一步依赖美国。[3]

朴槿惠吸取了李明博对北政策的教训，执政后一改前任的状况，直正意义上的战略伙伴关系已初见端倪。中韩关系上升了一个大的台阶。虽然还不能简单说韩中关系与韩美关系已等量齐观，但与“等距离外交”相距已不远。前韩驻华大使李揆亨早在2011年就说过“韩中关系重要性不亚于韩美关系”、“目前的韩中关系比韩国和任何其他国家的关系都要重要”[4]。李大使的说法无疑有些夸大，但今天看來，被他言中了。

朴槿惠在正式上任之前就多次表现出要进一步提升中韩关系的用意。当选总统对外派出的第一个特使就是出使中国，并向习近平转达朴槿惠的亲笔信。朴槿惠在信中说，中国是韩国重要邻邦，也是战略合作伙伴。我高度重视韩中关系，希望与中方深化互信，加强各领域合作，巩固和发展两国战略合作伙伴关系，共同为半岛稳定及东北亚和平繁荣作出努力。[5]这是朴槿惠对华友好关系的最为明确也是最为集中表述，应看做是韩国对华政策的最高指导原则。而朴槿惠访华之行以及取得的成果正是这一指导原则在实践中的具体体现，在中韩关系史上具有里程碑式的意义。[6]香港凤凰卫视何亮亮先生赞称“朴槿惠访华标志中韩关系跨越式发展。”[7]

朴槿惠访华之行取得的重大成果集中体现在双方共同发表了《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和《充实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行动计划》之中。充实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内容具体有三大成果。

成果之一，加强了政治安全领域战略沟通与互信。其中包括两国领导人密切沟通，全方位、多层次推进两国政府、议会、政党、学术界等多种主体间的战略沟通。韩中首脑会谈之后，双方又签订了一项政府间协议、七项部门间协议，这是韩国首脑对中国的访问史上签订协议数最多的一次。双方决定进一步加强两国领导人的沟通，建立青瓦台国家安保室室长和中国主管外交的国务院负责人之间的对话机制，强化两国在政治、安全领域的合作等，使两国“经热政冷”的关系转变为“经热政热”。

成果之二，进一步扩大经济与社会领域合作。朴槿惠访华带来了韩国史上最大规模的经济代表团。。双方再次确认，中韩自贸区的目标应是一个包含实质性自由化、广泛

3) 王俊生：《第三条道路与朴槿惠政府对朝政策走向》《当代韩国》2013年06月26日
4) 李揆亨：《韩中关系重要性不亚于韩美关系》 中国网 china.com.cn 2011-07-02
5)《中国为什么喜欢朴槿惠的4个理由》凤凰网 强国论坛2013-02-27
6) 人民网 韩国频道2013年07月08日
7) 何亮亮：《朴槿惠访华标志中韩关系跨越式发展》凤凰卫视 2013-07-01

领域的高水平、全面的自由贸易协定。双方还对完成模式谈判所取得的实质性进展表示欢迎，并指示两国谈判团队加强努力，使中韩自贸区谈判尽早进入下一阶段。此外，为加强人文纽带，双方决定成立“中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作为政府间协调机构。加强教育、旅游、文化、艺术、体育等领域的多种交流，同时将合作把以上领域交流合作扩大至国际舞台。《首尔经济》用“访中比访美成果大”来总结朴槿惠的此次“心信之旅”。[8)]

成果之三，“朝鲜半岛信任进程”获中方支特。朴槿惠2011年在《面向新的朝鲜半岛》一文就认为“历届韩国政府均往返于软硬两种基调开展对朝政策，并没有产生根本性的变化。韩应该重新制定对朝政策”，表示“将打破之前非黑即白，非绥靖即对抗的方式”。朴槿惠对朝明确要推行所渭“第三条道路”，提出将努力推进半岛“信任建设”[9)]。朴槿惠对朝政策获得了中国的支持。《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中涉及朝鲜半岛问题的内容比以往大幅增加，表明中韩两国在朝鲜半岛问题上的共同点正在扩大。中方欢迎朴槿惠总统提出的“朝鲜半岛信任进程”构想，高度评价韩方为改善南北关系、缓和紧张所作的努力。双方一致认为，南北双方是朝鲜半岛问题的直接当事者，应通过政府间对话等，为解决朝鲜半岛问题发挥积极作用。韩方赞赏中方为维护朝鲜半岛和平与稳定所作努力，希望中方今后继续发挥建设性作用，推动朝鲜半岛发生有利于地区和平与稳定的新变化。中方重申，支持朝鲜半岛南北双方通过对话增进信任、改善关系，最终实现朝鲜民族所期盼的和平统一。[10)]

二、提升“实质性全面战略伙伴关系”要因

提升实质性的关系是中韩两国共同战略利益的需要，是两国共同的选择。

从韩国方面來说，只少有以下三个因素

第一个因素，韩国在经济上韩国末來发展需要中国

韩国新政府正在致力于构建“国民幸福新时代”。中国是韩国最大的出口市场，最大的投资市场，最大的贸易顺差来源国。现今韩中贸易额已超过韩美、韩日贸易额之和。

8) 韩媒:《朴槿惠访华成果超访美 》 新华网 2013-07-01

9)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1
朴槿惠: 《面向新的朝鲜半岛》《外交事务》2011年 9-10月

10)《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人民网 2013年6月28日

2015年贸易额将达到3000亿美元。中韩经济已你中有我，我中有你。在韩国的贸易顺差大部分依赖中国的情况下, 和中国的经济合作是韩国能够实现持续增长的基础。[11] LG电子中国区总裁慎文范在接受《中国新闻周刊》采访时表示。对于去年走过整整20周年历程的中韩关系来说，2013年是中韩合作“下一个20年”的开局之年，而中韩首脑的积极互动也为此开了个好头。[12]

第二因素，韩国急需中国在对北政策上相助。如前所述，朴槿惠执政后在外交核心目标就是改善停滞不前的南北关系，为此提出有别于前任的“第三条道路”与“信任进程”方案。朴槿惠渴望中国能在推行新的对朝政策中发挥独特作用。朴槿惠曾叮嘱访华特使团：“希望中国能够在促使北朝鲜能够做出正确选择并产生变化方面起到重要作用。希望能够将这一立场清晰地传达给中国领导层。”在新政府看來“政策形势急剧变化的状况下，中国的作用比任何时期都重要。”朴槿惠认为，要想改善对朝关系，实现半岛和平与稳定，就需要谨慎而巧妙地在中美间采取较为平衡的政策。[13]

第三个因素，在中美两大国采取极积平衡政策，实质性改善对华关系，有利于韩国的安全与地位的提升。在朴槿惠看來，朝鲜半岛有可能成为美国回归亚洲与崛起的中国间激烈对决的导火线。 而“韩国应该通过改善南北关系，与中美都保持紧密的合作，并主导朝鲜半岛局势能够走向稳定、阻止中美间冲突发生。韩国成为东北亚的强国政治里的维护秩序的人，起到仲裁者作用”[14]。

从中国方面分析，中国高度重视中韩关系，将之放在中国对外关系的重要位置。习近平主席在同朴槿惠总统会谈时指出，“我愿同你一道努力，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更加密切、更加健康、更具活力地向前发展，更好地造福两国人民”[15]。这三个“更加”体现中国对韩关系的高度重视与基本原则 。

特别在现今国际形势下，中国也同样需要韩国的大力支持。

其一，在美国大力拉帮结盟“重返亚太”制衡中国的背景下，韩国成为中美在东北亚校力的重要阵地。在美国众多盟友中，韩国应被视为对华最为友善国家之一，是习近平总书记有关重视周边外交与亲邻睦邻善邻政策的重点对象国，也是在东北亚最能发挥牵制美日作用的国家，中国无疑企图 “拉韩”制美，做为反制美国拉帮结盟“重返亚太”

11)〔韩 〕李 熙 玉:《韩中建交二十周年及今后韩国对华政策的方向》《当代韩国》2012年03期

12)《“中国通”朴槿惠：比李明博更重视对华关系》 中国新闻周刊 2013-07-10

13) 申宗代:《中美之间的均衡外交, 要从改善南北关系开始》(미・중 사이에서의 (균형외교,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작해야) 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聚焦朝鲜半岛”第25号 (2013-09-06)

14) 王俊生:《第三条道路与朴槿惠政府对朝政策走向》《当代韩国》2013年06月26日

15) 新华网 http://politics.people.com.cn/GB/n/2013/0627/c70731-21999037.html

的重要举措。美韩军事同盟关系虽然难破，但使韩国在中美大博弈中保持一定程度的中立是可行的。曾担任六方会谈美国代表的前美国国务院负责东南亚实务的助理国务卿克里斯托弗 · 希尔称“中国的韩半岛轴心从朝鲜转移到韩方”是中国版“重返韩国（Pivot to South Korea）”[16)]。中国深知今日之韩国已非“吴下阿蒙”[17)]， 韩国不仅是今天的亚洲、也是今天全球政治中正在不断上升的国家。看看这几年韩国主办了G20峰会、“无核世界”首脑峰会等重大国际多边会议，韩国人、当了联合国秘书长、世界银行行长等重要职务，今天的韩国是在积极扮演“全球角色”的韩国。正如北京大学朱锋教授所言：中韩关系是“亚洲最有潜力的战略伙伴关系”[18)]。

其二，在日本右翼极度嚣张反华的背景下，韩国是组成反日本右翼联合阵线最为可靠的首选盟友。“中韩在历史问题上保持了高度一致，相互呼应，显示出习近平领导下的中国和朴槿惠领导下的韩国在面对这一重要问题的理念上早就成了同路人。人们不难发现，中韩两国首脑不仅在执政纲领上早已投缘，双方在历史问题或对二战战后国际秩序上的态度更决定了他们将成为天然的同盟”。[19)]

此外，在经贸科技文化社会环保等诸多领域，韩国需要中国，中国也离不开韩国这个东北亚好兄弟、好伙伴。中韩关系的迅速发发展，诧已远超于对朝关系的发展。当然我们也不会“喜新厌旧”，中国依旧会保持与北边这位老朋友的友好关系。

三、提升“ 实质性的战略伙伴关系 ”两大痼疾

第一痼疾，对朝的强武的政策。南北关系改善不仅有利于半岛和平稳定与统一，也将促进中韩关系的发展。中韩关系与南北关系相互促进、相辅相成。但是，在朝鲜弃核与维护韩国安全这一根本问题上，朴槿惠似乎仍继承李明博时期的保守与强硬政策，即继续以强势武力威慑政策。在这种强硬政策下，朴槿惠对朝“第三道路政策”能否走出李明博对朝政策总体框，则大打折扣，很值得怀疑。

近来，朝韩之间本已出现明显缓和、朝鲜改革刚刚有点起色，可恰恰在这种急需韩美国做出正面反应与配合时，却反其道而行之，令世人惊愕与不解。除韩美高调的联合军

16) 希尔：《中国现在现在开始将(外交战略的)中心轴从朝鲜移到韩国》韩国中央日报 2013.10.19 中文网 http://cn.joins.com
17) 吴下：现江苏长江以南；阿蒙：指吕蒙。居处吴下一隅的吕蒙。比喻人学识尚浅。出自《三国志 · 吴书 · 吕蒙传》裴松之注引《江表传》
18) 朱锋：《中韩关系是亚洲最有潜力的战略伙伴关系》 华西都市报2012年08月27日
19)《中国为什么喜欢朴槿惠的4个理由》2013-02-27 凤凰网　强国论坛)

演外，令人瞩目的是韩美正式签订应对朝鲜核威胁的“针对性遏制战略”计划，声言如发现朝鲜有使用核武器的“迹象”就启动采取“先发制人”的威慑战略。这表明：朴槿惠提出的“韩半岛信任进程”与通过协商对话，实际上有可能变成空洞口号与一纸空文。“威慑”与“信任”二者绝然相悖，水火唯融。事情只会变得事与愿违。正如中国学者王林昌所言：“朝鲜半岛呈现的这种状态使人感到，韩国变得对朝鲜越来越强硬，而对美越来越依恋了”，“如果朴槿惠总统在实际上沿袭了李明博的老路，半岛形势的和缓就越加困难了”。[20]

第二痼疾，是韩美同盟。美韩同盟一直是韩国外交政策的核心。今年5月，朴槿惠出访美国，行前她曾称美韩同盟是“历史上最成功的同盟”。早在朴槿惠就任韩国总统前，韩国媒体就分析称，韩美关系很有可能在朴槿惠的推动下得到进一步的升级。朴槿惠希望在韩美同盟的前提下实质性提升对华关系，促使中美共同支持其对朝政策。对后面这段言论自然是我们乐见的。但实际上二者却难以统一与并行不悖。

按理说，韩美双边关系不应成为中韩关系的障碍。实际上二者并非完全对立关系，也有诸多方而共识之处，如中美韩均主张朝鲜无核化，均主张半岛和平与稳定、均主张朝鲜尽早融入国际社会、均主张通过六方会谈解决半岛无核化及相关问题等。这与冷时期截然敌对关系根本不同。但也不能不看到中美之间在半岛问题上仍存在重大原则分歧与阻隔。

其一，在韩美同盟大框架乏下，韩国几乎完全被美国绑架，对华与对韩关系难有突彼。目前半岛南北关系实质上已变味,即由朝韩关系变成了朝与美韩之间关系,美国由外因转变成了内因，而且是决定性主导性因素。正因如此,朝方一直把美国作为最主要的攻击目标与主要敌人,而韩国一直被称为是美国的“傀儡”。这种称呼当然很不雅，我们不赞同这种带污辱性的用词。但在美韩关系中，“美主韩从”则是不争的事实，即使美将主导权交于韩方，也恐难以改变美韩的实质关系。在这种“美主韩从”的大前提下，不仅南北关系依从于它，就是中韩关系同样也要股从于它 。人们不能不担心，“中韩关系会否继续沦为韩美同盟的附属品”，“韩国将对华关系仍设定为韩美同盟的补充”[21]。朴槿惠虽熊表示要改变李明博的对朝政策与对华政策，但在朴槿惠身后有美国这一强大后台与支柱，将会牵制朴槿惠对与华与北政策。朴槿惠改善与朝鲜关系的愿望，很难有较大的作为。[22]正如环球网一篇文章所说，首尔“缺少让自己政策溢出韩美同盟的勇

---

20) 王林昌:《韩国对军事威慑的迷信令人忧》《环球时报》2013-10-17
21) 詹德斌：《韩国不应再把中国放在美国之后_》评论_环球网 2013-01-22 http://www.ahradio.com.cn
22) 韩国女总统朴槿惠对中国的态度 着墨 2012-12-20

气和能力”[23]韩国必须更加自主地应对,以消除将韩国外交捆绑在美国框架内的担忧。因此，韩国首先要确保在韩半岛问题上的主导权。[24]

其二，美国在韩的驻军与核保护伞问题。美国在韩的驻军完全是冷战的战物，早该弃之拉圾桶。如果说美驻日本军队尚有防范军国主义复活的积极意义，那么驻韩美军则早已失去存在价值与合法依据。就美国“核保护伞”政策而言，美国是把它做为对朝核威慑的一大决定性盾牌。美国 “核保护伞”虽然表面上压服了韩国的有核化，但却促进朝鲜的有核化，同时由于美国将自身的核武带进了韩国，从而实际上，整个半岛已逐渐全盘“有核化”了。只不过南北有核的形式、规模、水平不同而已。现今核保护伞依然是美国与盟友韩国维持盟约关系的重要基石，美韩、美日大规模的诸多军演，均配有名目繁多的核武装置。美国“核伞”政策实际上是通过高度强势威慑力量，逼迫压服朝鲜放弃核武，但效果适得其反。这无疑强化了朝方冒险心理与拥核的强硬姿态。

其三，美利用韩国及其它日菲等军事盟友，加大对中国的制衡。“随着中国崛起，美国对半岛事务的战略设计中会加入越来越多围绕中国因素的考量，韩国也越来越像美国在东亚搞战略再平衡的一个棋子”。韩国会越来越深地陷入美国“战略玩偶”的角色，韩国早已失去半岛及东北亚政策的主动权。[25]。韩国始终把韩美同盟看作是外交政策的基石，无论谁当选总统，都不会轻易动摇这个外交政策的根本。正如石源华教授外说：“中韩关系的发展有时会受制于美韩同盟关系，韩国新政府如果与美国的关系太紧密，积极配合美国一些亚太战略，这将在无形中使中韩关系受到负面影响”[26]

四、末來走势与结语

一、根据上述分析，末來中韩关系将会继续沿着“实质胜的战略伙伴”发展，朴槿惠政府对华关系已奠定了中韩未來二十年或更长发展的基础，中韩关系或许会遇到种种波折，但总的友好关系大方向不会逆传，不论谁上台执政都会保持这一基本战略路线行事，这是韩国与中国自身国家利益使然，也是历史必然的选择。中韩关系将是东亚各国关系中的楷模，中韩关系将是亚洲各国关系发展最迅速、潜力最大与活力最强的战略伙伴关系。我们应象爱护眼睛一样珍惜、维护这一关系。

23)《环球时报》社评: 《韩国需要战略上的大智慧、大胸怀》2013-03-12
24)〔韩 〕 李 熙 玉: 《韩中建交二十周年及今后韩国对华政策的方向》《当代韩国》2012年03期
25)《韩国需要战略上的大智慧、大胸怀》《环球时报》2013-03-12
26) 韩国女总统朴槿惠对中国的态度 着墨 2012-12-20

二、韩对华关系中上述两大症结无疑在短期内难解甚至无解。但从长远考量，应是“必解”，对此笔者充满信心。随着国际环境的重大变化，其中首要是中国的真正和平崛起，中美关系格局定会出现重大变异；朝鲜也将会沿改革开放走出困境，南北经济差距也将会缩小；无核化步伐也必将加快，半岛实行统一的愿望迟早会降临。与此同时，韩国对华、对美、对朝政策必将有重大调整。韩国现今的“亲美”、“联美” 为核心的对外政策必将发生实质性或颠覆性变化。

三、中韩实质性战略伙伴关系如再上一更大台阶，即中韩关系全方位超越韩美关系，将取决于南北关系的根本改善，也更取决于韩国对美政策的重大突破，可这非轻而一举。但事在人为，关键在于韩国要有“大智慧、大胸怀”的领军人物。现今韩国已在上世纪创造了汉江的伟大奇迹，我们真诚期待韩国在本世纪也能再创另一个伟大奇迹。朴槿惠在韩国政治舞台的出现已使世界刮目相看，她有胆有智有识，堪称东方与亚洲“女中豪杰”。然而恕笔者真言，韩国却似乎 “缺少一批能在西太平洋复杂局势中看准韩国战略生命线，并有能力引导韩国告别南北长期对峙困局的政治家”[27)]。光有朴槿惠一人尚难成大气，红花还需绿叶配，否则将孤掌难鸣。我们寄希望于韩国政坛能出一批远见卓识、敢于创新的政治家，真正从美国式的思考中走出来，重新思考中国，思考韩国的对华政策，赋予中韩关系更独立、更广阔、更深远的发展空间，[28)]彻底改变半岛的局面，我们拭目以待。

27)《韩国需要战略上的大智慧、大胸怀》《环球时报》2013-03-12
28) 詹德斌：《韩国不应再把中国放在美国之后_》评论_环球网 2013-01-22

朴槿惠政府的对中国政策: 期待和展望 (摘要)

朴槿惠政府对华政策与前景

陈峰君 (北京大学)

如何准确概括朴槿惠政府对华政策说法不一， 较多的提法是在中美间推行“平衡外交”政策，也有提 “联美和中”战略。笔者倾向用提升“实质性的全面战略伙伴关系”。

一、提升对华“实质性的全面战略伙伴关系”的表现

中韩战略伙伴关系自李明博执政时期就已拟定，但受诸多内外因素制约，中韩战略伙伴关系虽然也有进展，但“虚多实少”，甚至在某些方面有倒退迹象。处于“一条腿粗、一条腿细”的“经热政冷”状态。

朴槿惠吸取了李明博对北政策的教训，一改前任的状况中韩关系上升了一个大的台阶。虽然还不能说韩中关系与韩美关系已等量齐观，但与“等距离外交”相距已不远。

朴槿惠访华之行在中韩关系史上具有里程碑式的意义。标志中韩关系跨越式发展。朴槿惠访华有三大成果。1，加强了政治安全领域战略沟通与互信。使两国“经热政冷”的关系转变为“经热政热”。2，进一步扩大经济与社会领域合作。3， “朝鲜半岛信任进程”获中方支特

二、提升对华“实质性全面战略伙伴关系”要因

总的说，中韩两国共同战略利益的需要，是两国共同的选择。

从韩国方面分析，有以下三个因素 1，韩国新政府正在致力于构建“国民幸福新时

代”发展需要中国。2，韩国急需中国在南北关系与对北政策上相助。朴槿惠执政后在外交核心目标就是改善停滞不前的南北关系，为此提出有别于前任的“第三条道路”与“信任进程”方案。朴槿惠渴望中国能在推行新的对朝政策中发挥独特作用。3，在中美两大国采取极积平衡政策，实质性改善对华关系，有利于韩国的安全与地位的提升。

从中国方面分析，中国高度重视中韩关系，将之放在中国对外关系的重要位置。特别在现今国际形势下，中国也同样需要韩国的大力支持。其一，韩国成为中美在东北亚校力的重要阵地。在美国众多盟友中，韩国应被视为对华最为友善国家之一，是习近平总书记有关重视周边外交与亲邻睦邻善邻政策的重点对象国，也是最能发挥牵制美日作用的国家之一，中国无疑企图 “拉韩”制美，做为反制美国拉帮结盟“重返亚太”的重要举措。使韩国在中美大博弈中保持一定程度的中立是可行的。其二，韩国是组成反日本右翼联合阵线最为可靠的首选盟友与天然的同盟。

三、提升对华“实质性战略伙伴关系”两大痼疾

第一痼疾，对朝的强武的政策。在这种强硬政策下，朴槿惠对朝“第三道路政策”能否走出李明博对朝政策总体框，则大打折扣，很值得怀疑。朝韩之间本已出现明显缓和、朝鲜改革刚刚有点起色，可恰恰在这种急需韩美国做出正面反应与配合时，却反其道而行之，令世人惊愕与不解。除韩美高调的联合军演外，令人瞩目的是韩美正式签订应对朝鲜核威胁的“针对性遏制战略”计划，声言如发现朝鲜有使用核武器的“迹象”就启动采取“先发制人”的威慑战略。这表明：朴槿惠提出的“韩半岛信任进程”与通过协商对话，实际上有可能变成空洞口号与一纸空文。“威慑”与“信任”二者绝然相悖，水火唯融。事情只会变得事与愿违。

另一障碍是韩美同盟。在韩美同盟大框架乏下，韩国几乎完全被美国绑架，对华与对韩关系难有突彼。如果说美驻日本军队尚有防范军国主义复活的积极意义，那么驻韩美军则早已失去存在价值与合法依据。美国 “核保护伞”虽然表面上压服了韩国的有核化，但却促进朝鲜的有核化，同时由于美国将自身的核武带进了韩国，从而实际上，整个半岛已逐渐全盘有核化了。只不过南北有核的形式、规模、水平不同而已。此外，美利用韩国及其它日菲等军事盟友，加大对中国的制衡。韩国会越来越深地陷入美国“战略玩偶”的角色，韩国早已失去半岛及东北亚政策的主动权。

四、末來走勢与结语

一、末來中韩关系或许会遇到种种波折，但总的友好关系大方向不会逆传，中韩关系将是东亚各国关系中的楷模，中韩关系将是亚洲各国关系发展最迅速、潜力最大与活力最强的战1121略伙伴关系。

二、韩对华关系中两大症结在短期内难解甚至无解。但从长远考量，应是“必解”，随着国际环境的重大变化，其中首要是中国的真正和平崛起，中美关系格局定会出现重大变异；韩国现今的 “联美” 为核心的对外政策必将发生实质性或颠覆性变化。

三、改变韩美关系南北关系大局非轻而一举。但事在人为，关键在于韩国要有“大智慧、大胸怀”的领军人物。现今韩国已创造了汉江的伟大奇迹，期待韩国在本世纪也能另一个伟大奇迹。朴槿惠在韩国政治舞台的出现已使世界刮目相看，她有胆有智有识，堪称东方与亚洲“女中豪杰”。光有朴槿惠一人将孤掌难鸣。希望于韩国政坛能出一批远见卓识、敢于创新的政治家，真正从美国式的思考中走出来，重新思考中国，思考韩国的对华政策，赋予中韩关系更独立、更广阔、更深远的发展空间。

彻底改变半岛的局面，我们拭目以待。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대와 전망 (요약)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정책의 장래

천펑쥔 (陈峰君, **북경대**)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정책을 어떻게 정확하게 요약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비교적 많은 표현은 중미간 "평행 외교"를 추진하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연미 화중"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글쓴이는 "실제적인 전면전략의 동반자관계" 쪽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1.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전면전략동반자관계를 나타내다

중한전략동반자관계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미 협정되었었다. 하지만 많은 내외요소의 제약을 받아 중한전략협력관계는 발전도 있었지만, 허구가 많았고 얻은 것은 적었으며,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퇴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경제과 정치에서 불균형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의 교훈을 받아들여, 전직의 상태를 바꿔, 중한관계는 더 높은 목표로 상승하게 되었다. 비록 한중 관계와 한미관계가 동등한 관계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머지 않아 "등거리외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중국 방문은 중한관계의 역사상 이정표의 의미를 지니고, 중한관계의 큰 발전의 지표를 나타낸다. 박근혜의 중국방문은 3가지 성과가 있었다. 1. 정치안전영역전략의 소통과 상호신용을 강화하였다. 양국의 활발한 경제적 관계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정치적 관계가 경제와 정치 모든 면에서 활발하게 바뀌었다. 2. 경제와 사회영역에서의 협력이 한 단계 더 확대되었다.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중국의 지지를 얻었다.

2.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전면전략동반자관계의 요소

결론적으로, 중한 양국의 공통전략이익의 요구는 양국 공통의 선택이다

한국측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3개의 요소가 있다. 1. 한국 신 정부는 현재 "국민행복신시대" 발전구축을 위해 중국이 필요하다. 2. 한국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상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근혜 집정 후의 외교핵심목표는 정체 된 남북관계 개선이고 이를 위해 전 정부와는 다른 "제3의 길"과 "신뢰 프로세스" 방안을 제기했다. 3. 중미 양 대국이 평행정책을 채택하고, 실질적으로 대중국정책을 개선하면 한국의 안전과 지위 상승에 이익이 있다.

중국측으로 분석하면, 중국은 중한관계를 고도 중시하고, 중한관계를 중국대외관계의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제형세에서, 중국 역시 한국의 큰 지지를 필요로 한다.

첫째로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의 많은 동맹국 중, 한국은 응당 중국의 제일 우호가 좋은 국가중의 하나이고, 시진핑이 중시하는 주변외교와 주변국과 화친하는 정책의 중점 대상국이며, 미국과 일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이에, 중국은 의심 없이 한국을 끌여 들여 미국을 견제할 것이며, 미국을 반대하고 연맹국을 끌여 들여 "아태로 복귀" 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것은 한국이 중미간의 게임 중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로 한국은 반 일본 우익 연합전선의 제일 믿음직하고 우선적인 동맹국이고 천성적인 동맹이다.

3. 중국에 대한 실제적인 전면전략동반자관계의 두 가지 고질병

첫 번째 고질병은, 대북강경책이다. 이러한 강경정책 하에, 박근혜의 대북의 "제3의 길 정책"이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엉망이 되었고 필요성이 있나 의구심이 든다.

남북관계가 이미 완화되었음이 명확이 나타나지고 있고, 북한의 개혁은 이제 막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미간 협력해야 할 시점에, 상대방과 정 반대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과 이해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미가 긴장을 고조시킨 연합 훈련 외 세인들을 주목시킨 한미가 정식으로 체결시킨 대북 핵 위협을 조준한 억제적 전략 계획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현상이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여 제압한다는 협박적 계획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박근혜가 제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협상 대화를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아무것도 없는 백지로 변할 수도 있다. 위협과 신뢰는 물과 물이 융합될 수 없듯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이러면 일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장애는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의 큰 틀 아래, 한국은 거의 완전히 미국의 인질이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만약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대가 여전히 군국주의부활을 방비하는데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주한미군은 이미 존재의 가치와 합법적인 의거를 잃어버린 셈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비록 표면상 한국의 핵 보유를 압박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촉진시키며 동시에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반도는 이미 점점 핵 보유화가 되어가고 있다. 다만 남북의 핵 보유 형식의 규모, 레벨이 다를 뿐이다. 이외에 미국은 한국과 기타 일본 필리핀 등 군사동맹을 이용해 중국에 대한 제제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점점 미국의 전략적인 장난감으로 빠져들고 있고, 한국은 이미 반도와 동북아정책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4. 중한 외교관계의 향후 추세와 결론

첫째,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우호관계는 변치 않을 것임은 의심치 않다. 또한 양국의 외교관계는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발전 면에서 가장 빠르고 큰 잠재력을 가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며 이는 아시아 외교의 롤 모델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중국과의 짧은 외교기간 동안 많은 문제들이 봉착해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색한다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평화발전의 길을 나아간다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한국의 '한미 동맹'의 기조 하에 이루어진 대미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에 앞서 모든 일은 사람의 힘에 달렸듯이 한국은 큰 지혜와 넓은 포부를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21세기에도 위대한 기적을 새로 탄생시킬 것이라 믿는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무대에 나서 용기와 지혜를 보여 세계를 놀라게 한 '아시아 여걸'로 불리게 되었다. 다만 한 손으로 매듭을 풀 수 없는 법. 박 대통령은 탁월한 식견과 개혁의지를 가진 정치가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관념에서 벗어나 중국을 다시 이해하고 나아가 대중정책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이로써 한중 관계는 보다 독립적이고 먼 안목을 넓히는 발전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대와 전망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논쟁: 대북 정책의 진화 배경과 함의〉

전성흥 (全聖興, 서강대)

I. 문제제기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11월 제18차 당대회와 금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최고 지도부의 권력 교체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 총서기 및 주석의 제5세대 지도부가 과연 어떤 대외노선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다. 특히 미국 등을 겨냥해 '신형대국관계'를 추구하겠다는 비젼을 공식 천명했는데, 그 속내는 무엇인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 들어 공세적 외교 행태를 보여준 중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려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대해 우려와 의혹을 낳게 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작년 연말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금년 초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반도 정세를 긴장국면으로 몰아갔는데, 정작 관심의 대상이 된 나라는 오히려 중국이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예정된 것이었고 문제는 그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핵실험 자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 밖이었다. 중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도 분명한 반대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 등과 북핵 해결에 있어서 공조의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경향과 행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크게 변화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리고 이는 국내외 관련 학자들 사이에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를 둘러싼 열띤 논쟁을 초래했다. 찬반양론에 더해, 제3의 해석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바, 과연 어느 입장이 맞는지? 이는 현 단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면 중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해결 및 동북아질서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관련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본문은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최근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는 주로 중국의 공세적 외교행태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해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관련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 정치시스템에서 정책의 속성과 정책 변화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는 중국의 대외행태 및 대북정책 변화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이다. 넷째, 북핵문제에 관한 한중간의 인식 차이와 그것이 시사하는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세적 외교의 등장

기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은 201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서 신 지도부 등장 이후의 현상만은 아니다. 물론 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중국은 과거보다 강경해진 어조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대외정책의 기조를 피력했다. 미국 등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명기해 거시적 협력을 전제로 하되,[1] 주권과 안보 등 '핵심이익'(核心利益)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2]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보다 공격적인 외교행태를 보이는 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충돌할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위 중국의 '조기 부상'과 함께 중국인들의 자신감과 중화민족주의가 고조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거만한 태도와 공세적인 외교 행태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 그 후 남중국해 및 센카쿠 열도(조어도)의 분쟁, 그리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표출된 중국의 공격적 입장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은 대체로 중국이 과거에 비해 더욱 공세적 성향으로의 외교정책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로서 일차적으로 중국의 힘의 증대에 따른 당연한 예기된

* 이 글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의 한중학술회의(2013. 11. 20)를 위해 준비된 미완성 발표문으로서 인용 및 전재를 불허함.

1) 중국은 기존의 경쟁 및 갈등적 강대국 관계와는 달리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및 공동 승리를 도모하는" 소위 '신형대국관계'를 확대 제시함으로써 그 함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胡錦濤, "堅定不移走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斗," 在中國共産党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12. 11. 8), http://www.xj.xinhuanet.com/2012-11/19/c_113722546.htm.

2) 18차 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중국 외교정책의 경향에 대해선 조영남,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2호(2013), pp. 203-231; 이영학,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아태연구』, 제20권 제1호(2013), pp. 29-58; Tim Summers, "China's New Leadership: Approaches to International Affairs," Briefing Paper, April 2013, pp. 1-12 참조.

귀결이며,[3] 그 이면에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과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상대국의 강경 정책이 중국의 맞대응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국내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혁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민해방군이나 네티즌과 같은 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4]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즉 중국 외교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로 중국 측 논리로서 중국의 최근 행태는 외부로부터의 도발 내지 분쟁 야기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라는 설명이다.[5] 또한 서방 학자 중에서도 이런 '변화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이 과거에 비해 공세적 외교를 펴고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특정 이슈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외교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6]

이밖에 중국의 공세적 행태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미세 조정'이라는 시각, 그리고 공세적 외교가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내부적으로 강한 비판에 직면해 다시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온건 노선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는 관점도 있다.[7]

III. 대북 정책의 변화 여부

이런 중국 외교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해당된다. 물론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동일하지만, 천안함사건 및 연평도 피폭 사건 직후 중국이 보여준 대북 편향적 행태에 비추어 보면 최근 제3차 핵실험 이후 일련의 행태는 분명 중국의 달라진 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여준 이례적인 대응 양상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핵실험 이후 중국은 즉각 강력한 반대 및 대북 비판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발행위의

3) 이는 중국이 기존의 발전도상국가보다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자각하게 됨에 따라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가정하는 그런 대외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차창훈,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1호(2013), pp. 72–73.

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자료에 잘 소개되어 있다.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쉽과 중국의 미래』(서울: 민음사, 2013), pp. 228–242; 김재철,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4호(2012), pp. 29–59 참조.

5) 이는 2010년 12월 외교담당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가 외부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표한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堅持走和平發展道路" 『中國新聞□』, 2010. 12. 7, http://www.chinanews.com/gn/2010/12-07/2704984.shtml (검색일: 2013. 10. 30).

6)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Issue 4 (Spring 2013), pp. 748.

7) 각각 조영남, 『중국의 꿈』 및 김재철,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참조.

중단을 요구했다. 둘째,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안을 제안 및 통과시키는 데 적극 동참했고, 북중 국경지대 통관 검색 강화, 중국 은행과 북한 은행 간의 거래 중단 등 실제 제재안을 비교적 성실히 집행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특히 중국 교통운수부가 관련 산하기관에 결의안의 엄격한 이행을 지시했으며, 미중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지도부가 결의안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과거와는 다른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8)]

셋째, 중국의 최고 지도자 및 외교 담당 책임자들이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거나 경고의 메시지를 연이어 표명했다. 예컨대, 시진핑 주석은 2013년 4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博鳌) 포럼의 공식 연설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지역과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미국의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에게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돌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은 그 어느 누구도 역내에서 도발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중국의 대문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9)]

넷째,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5월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냉대했을 뿐 아니라 핵보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섯째, 2013년 6월 북중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가 개최되었는데, 2차례에 걸친 기존 당 채널의 '전략소통'과는 달리 정부 간 채널로 격하되고, 회담 대표가 상대국의 최고 지도자를 예방하는 기회도 갖지 못함으로써 북중관계의 냉각된 기류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10)]

이런 중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부정적이었고 설령 마지못해 동참하더라도 그 실행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공개적인 대북 비난을 삼갔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크게 달라진 태도라고 하겠다. 북한에 대한 중국 내 여론도 악화되어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조가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관방 언론에 종사하는 한 인사의 "북한 포기" 발언으로 전 세계가 중국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11)]

이런 중국의 대응 태도에 근거해 적지 않은 분석들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에

8) 2013년 3월 채택된 2094호 결의안을 포함해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중국의 이행 행태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이영학.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정덕구 추수롱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서울: 중앙북스, 2013), pp. 175–185.

9) 曾九平, "已三次警告, 朝鮮再挑□將□動北京底線."『多維新聞網』(2013.4.16), http://global.dwnews.com/news/2013-04-16/59164910-all.html (검색일: 2013. 10. 30).

10) 최명해, "중국 내 대북정책 논쟁, 핵심은 무엇인가?" 정덕구 추수롱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p. 144.

11) 그는 중앙당교에서 발행하는 학습시보의 부편집장 덩위원(鄧聿文)으로 "중국은 곧 붕괴될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의 한반도 통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다음 언론에 기고했고, 이로 인해 곧 해직되었다. Deng Yuwen,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Financial Times, February 27, 2013. 이와 유사한 논조로서 "북한이 전략적이든 지정학적이든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국제사회와 공조해 비핵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제 북한을 방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되고 있다. Xie Tao, "What's Wrong with China's North Korea Polic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rch 26, 2013, http://carnegieendowment.org/2013/03/26/what-s-wrong-with-china-s-north-korea-policy/ftjw.

주목하고 있다. 대북 정책 변화의 배경 및 요인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많은 원조와 지지를 제공해 왔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특유의 독립성을 유지해 중국의 입장이나 권유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곤란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너무 멀리 나갔고, 이런 북한에 대해 중국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12)]

이는 중국이 그간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한계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북한 스스로 변화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기존의 정책이 예기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기존과는 다른 강경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한편,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13)]

이와 동시에 상술한 중국의 인식은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실망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인식의 저변에는 중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인민들은 과거 북중관계의 전통이나 사회주의국가로서의 동질감 등으로 인해 비교적 북한에 대해 우호 내지 동정적 태도를 견지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중국의 이해와는 배치된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중국의 미디어나 학계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분명하게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중국 지도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14)]

또한,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미국과의 새로운 강대국관계의 기본 틀로 설정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화답을 받은 상태인데, 북핵문제 해결이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케이스라는 것이다.[15)] 즉 북중관계의 상위 레벨에 있는 미중관계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미국과 북핵문제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재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기존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보호한 이유도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자산을 과소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오히려 중국에게 전략적 손실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중국 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이 중국의 한반도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봤다면 이젠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판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16)]

---

12) 추수룽, "북중관계는 임계점에 도달했는가?" 정덕구 추수룽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p. 31.
13) 한석희, "중국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북중관계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3년 여름호, p. 35.
14) 추수룽, "북중관계는 임계점에 도달했는가?" p. 30.
15) 김흥규, "새로운 북중관계의 시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정덕구 추수룽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p. 44.
16) 이에 더해 중국 내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함정론'이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한다. 김흥규, "새로운 북중관계의 시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p. 46.

이런 인식 전환과 함께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완충지대화하려는 시도를 위해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정책을,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정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중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면 중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17)]

이상의 분석들에 기초해, 국내에서는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응 및 대응에는 기존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북핵 관련 중국의 기본 인식과 기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보수적' 시각에서부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북중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려 북한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는 '급진적' 관측까지 있다.[18)] 그리고 그 사이에, 전술적 차원을 넘어서 전략 차원의 변화까지 암시해 주고 있다는 시각, 후진타오 시기부터 나타났던 대북 인식의 변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는 정책 차원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 그리고 근본 정책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비핵화를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정책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해석 등이다.[19)]

중국 내에서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변화를 강조하는 시각 중에는, "한반도 정책에서 비핵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대북 강압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국제 공조에도 적극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20)] 그러나 대체로 그 주류적 입장은 한국 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대북정책 및 북중관계 자체가 근본 변화된 것은 아니며,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이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는 정도로 변화의 성격과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즉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행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21)] 미국 내에서도 초기엔 '변화'를 강조하는 시각이 우세하다가 최근에는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22)]

17) 한석희, "중국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북중관계 전망," p. 42.

18) 후자의 경우에 대해선 정덕구, "북한을 보는 중국의 본심," 정덕구 추수롱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pp. 8–25를 보라.

19) 이는 각각 다음을 참조. 김흥규, "새로운 북중관계의 시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최명해, "중국 내 대북정책 논쟁, 핵심은 무엇인가?"; 박동훈,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정덕구 추수롱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20) Xiahe Cheng, "The Strained Sino–North Korean Relations under the New Leaderships: A Retrospective Assessment," 『평화를 묻는다』(북경: 2013년 한중평화통일포럼 논문집, 2013. 7. 24), pp. 102–113.

21) 추수롱, "북중관계는 임계점에 도달했는가?" p. 32.

22) 예를 들면, 최근의 미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동참은 북한에 대한 실망을 표시한 것으로 여전히 대북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ma Chanlett–Avery and Ian E. Rinehart,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tional Situ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13, 2013), pp. 1–23.

이런 다양한 시각이 논쟁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첫째, 무엇이 어떻게 되는 상태를 변화라고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기 다른 평가 척도를 적용해 해당 현상을 해석한 결과이다.[23] 따라서 변화 여부에 대한 사실 인식, 변화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평가 등을 각기 달리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전제 하의 새로운 조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로 규정할 것인지가 모호해 지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는 이유는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이고 비핵화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전략적으로 북한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자에 초점을 둔 경우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내지 그 조짐을 강조하고, 후자에 착안하게 되면 대북 정책의 지속성을 지적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런 병존 현상과 이중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해석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중 현상과 이중 정책이 본질이며, 정책 면에서 현실에의 적용은 상대적 강조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으로서는 남북한을 모순의 관계로 보고 그에 대해 각각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켜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에 근거해 정책의 변화를 가늠하는 것은 중국의 정치체제나 정책과정의 특성을 간과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술한 문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 중국식 정책과정과 대북정책의 진화

1. 국가 정책의 속성: 추상성과 일관성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집권 정당이든 아니면 지도자 개인 차원이든 권력이 바뀌면 국정 운영의 기조와 대내외 정책이 그에 따라 변화된다. 대체로 이는 정당정치를 실시하는 민주주의국가에 해당하는 얘기이다. 이런 경험에 기초하면, 중국도 지도부의 교체나 다른 변수에 의해 자주 정책이 변화되는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상술한 논의에서도 변화를 강조한 시각들은 대체로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다.

23) 예컨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중국이 남북한에 대해 균형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바 소위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포기하고 중국이 어느 일방을 중심으로 통일을 추진하느냐의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상숙,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평가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3-26(2013. 9. 11), pp. 8-9.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의 시스템은 이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중국식 권력 교체를 의미하는 지난 18차당대회의 세대교체는 비록 신 지도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책노선의 변화와는 크게 무관하다. 이런 점은 지도부 전체에 대해서나 시진핑 총서기 개인에 대해서나 인적 변화가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바 그 양자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일반적인 인식과 매우 다른 결과이다.

예컨대, “시진핑 시대의 …”, “시진핑 체제 하의 …”, “시진핑 정권(정부)의 …” 등의 수식 하에 용어 그 자체로서 중국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제 중국 상황과는 유리된 우리식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당지배 체제 하의 중국 정치에서, 그것도 당 정 군 3권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당연히 그 어떤 국가의 권력자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리라 짐작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에서는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서기 개인이든 지도 집단 전체이든 정책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제한된 권한을 지닐 뿐이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기존 지도부의 정책과 거의 동일한 노선을 견지할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원적 사고체계 하에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은 획일적이다. 공식 이데올로기와 국가 정책 등은 전체의 의견으로서 단일한 견해만이 존재한다. 다양한 논의들이 결정과정에서 개진될 수는 있으나 한번 결정된 정책에 대해선 일사불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소위 ‘민주집중제’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위해 정권의 교체를 시도할 수 있지만, 정권 교체가 부재한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정책 변화 역시 원론적으론 용이하지 않다. 정책의 변화란 기존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당체제로서 당은 무결점의 위상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스템이다. 정책 변화가 주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 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정책 일관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한 현재는 더욱 이런 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마오쩌둥나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은 지도부 내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누구도 개인의 의견으로써 전체 지도부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당대회 정치보고문의 경우 총서기직에서 물러나는 후진타오가 발표했지만 신임 총서기 시진핑이 사전 준비작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내외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을 거쳤다.[24] 말하자면 정치보고의 주체는 연설한 후진타오도, 준비작업을 수행한 시진핑도 아니라 포괄적 개념의 당

24) 당대회 준비과정에 대해선 Alice Miller, “The Road to the 18th Party Congress”; Cheng Li, “Preparing For the 18th Party Congress: Procedures and Mechanism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6(2012) 참고.

지도부 전체라고 봐야 한다. 즉 제4세대나 제5세대의 단독 견해도 아니며, 현 지도부나 퇴임 원로들 어느 한 쪽의 의견만도 아니다.[25)]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란 매우 추상성과 포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최대한 변화되지 않고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이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어야 하고, 특정 범주에만 적용되는 협소한 것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형태를 띠어야 하는 것이다. 대개 중국에서 정책노선이란 지향하는바 방향성을 나타내거나 고수하고자 하는바 원칙 내지 방침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현재 중국이 견지하는 대외정책의 기본 노선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이다. 이는 1982년 제12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미 30년이 경과되었다.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것은 '평화'라는 두 글자가 추가된 것밖에 없다.[26)]

2. 정책 운용의 방식: '진화'의 메커니즘

그렇다고 중국에서는 정책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다. 중국도 국내외 상황이나 주변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 변화를 잘 용인할 수 없는 체제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이다. 다시 말해 정책 변화에 경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의 양상이 민주주의 체제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서 새로운 정책의 등장이란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정책의 추가 내지 보완으로 나타난다. 흔히 정책 변화는 하나의 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정책을 채택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즉 정책이 대체 내지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존재할 때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내용을 기존 정책에 추가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기존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상황이 변화되어 기존 정책이 다시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27)] 즉 '정권 교체에 의한 정책 변화'가 없는 제도적 특징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1990년대에 급속한 발전을 구가하는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주변국의 우려가 있었다.[28)] 중국은 이를 불식하기 위해 책임대국론, 평화부상(和平崛起) 내지 평화발전의 이론을

25) 그밖에 국내정치적 요인으로서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니는 중국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 당 간부나 일반 인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잘 이해하는 한편 그 집행에 협조하도록 이들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도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한 이유이다.

26) 중국의 전략문화, 전략적 가치판단 및 그에 기초한 국익이라는 요인에 근거해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설명한 글로는 박병광,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호, pp. 14-26 참조.

27) 국내 정치의 경우, 마오저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을 동시에 견지하고, 삼개대표론과 과학발전관을 추가로 당장에 삽입함으로써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상황 하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및 이론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28) 소위 '중국위협론'이다. 그 후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고, 다른 국가들은 그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에 바빴다. 이에 대해선 Herbert Yee and Ian Storey eds., The China Threat: Perceptions, Myths and Realty (London: RoutledgeCurzon, 2002) 참조.

제기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강대국으로의 부상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조화세계, 핵심이익 및 신형대국관계 등의 논리를 개진하고 있다. 개혁 초 독립자주 외교노선을 제기한 이래 중국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새로운 정책 개념들을 병렬적으로 추가해 오는 가운데 기존 정책은 대체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은 외부 관찰자들로 하여금 정책의 변화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즉 변화와 지속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의 유용성은 기존 정책을 견지하는 전제 하에서도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런 추가 및 보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통상 모순된 관계를 처리할 경우 또는 이중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할 때 중국은 단일의 정책이 아니라 복수의 정책 원칙 내지 방침을 제기해 이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흔히 공식적인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한반도의 안정은 주로 북한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경제적으로 원조한다는 의미인 반면, 비핵화는 원론적으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론 북한 핵개발 저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서로 상반된 정책 목표라는 지적이다. 동북아 국제질서 및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이 비핵화에 우선하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비핵화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대북 정책 변화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복수의 정책 원칙 내지 목표 중에서 특정 지향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도 변화의 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다. 소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설정함으로써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분석의 적실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북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강조의 차이이지,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회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세 가지 구성요소 중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여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든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추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외형상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각기 서로 다른 정책 기능을 가진 유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지해야 할 ‘대전제’이며, 비핵화는 추구해야 할 ‘목표’인 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은 그 ‘방법 내지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다.[29)]

그런 점에서 실제 변화는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의 운용 및 추진 방식에 반영되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즉 대외행태 및 대북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현상은 바로 대응의 '강경성'과 '적극성'으로서 이것이 새로운 측면의 핵심이다. 기존의 방식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화'보다는 '진화'라고 보는 게 더욱 적절할 듯하다. 왜냐하면 정책의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이전 내지 전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가미 혹은 추가된 것이기 때문이다.[30)]

그간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의 중국위협론에 직면해 주로 방어적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이며 주변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애써 변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방관자적 입장이었던 제1차 북핵 위기에 비해 제2차 위기 이후에는 보다 개입적인 자세를 취했었지만 그간에는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에 비해 최근엔 북한에 대해 핵개발 반대와 불용의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존의 온건함과 소극성을 특징으로 한 중국의 대외행태 및 대북정책에 새로운 측면을 부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향후 중국은 강–온 정책을 병행하는 한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운용하는 '정책 혼용'의 경향을 보여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경향은 비록 근본 정책 변화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한반도문제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남기고 있다. 중국의 적극성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의 목표를 수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 및 접근 방식의 변화 없이는 그 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중 간 북핵문제를 대하는 다음과 같은 인식 차이를 더욱 좁히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29) 상황에 따라 특정 정책의 중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우선순위로 정해두면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책의 성격 구분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해당 정책들이 각기 가장 중요한 위상을 변함없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내 정치의 경우,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기존 사회주의체제도 고수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되었을 때, 중국은 4항기본원칙과 개혁개방 노선을 소위 '두 개의 기본점'이라는 논리 하에 동시 견지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4항기본원칙을 견지하는 대전제에서 개혁개방이라는 방법을 통해 경제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추진해 나간다는 식이다. 예를 들어, 천안문사건 시에는 4항기본원칙의 견지라는 측면에서 통제를, 남순강화 이후에는 개혁개방이라는 정책 방침을 통해 제2의 개혁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전성흥, 『전환기의 중국 사회 I: 변화와 지속의 역동성』 (서울: 오름, 2004), 서론 부분 참조.

30) 다른 측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은 구분될 수 있다. 즉 중국의 대북핵 정책은 대북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V. 북핵에 대한 한–중의 인식

중국은 북핵 불용,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등 원칙에 있어선 한국 등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북핵의 위협성, 비핵화의 범주, 폐기 가능성, 해결 방식 등에 있어서는 상이한 인식 및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양국 간에 존재한 전략적 이해의 차이 외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한국은 북한 핵의 존재가 자신의 안보 및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느낀다. 이에 비해 중국에 있어서 북핵은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주로 문제가 된다. 핵개발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이를 빌미로 미국의 역내 개입이 강화되는 부작용,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국가들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도미노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북핵이 한국에게는 최대의 위협 요소인 반면 중국에겐 역내 불안정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 지역에도 적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다. 이런 차이는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북중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되던 2013년 한–중 정상회담 시의 '공동성명' 내용에도 분명하게 반영되었다.[31)] 이로써 중국은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도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남북한 외에 미, 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핵심 당사자이고 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주변국은 보조 및 중재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32)]

셋째, 한국은 북한 핵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에 입각해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어떤 외부 압력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내부 체제 안정,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처, 해외의 경제 원조 등의 다목적용으로 개발된 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설득이나 회유, 압박 등의 수단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다.[33)] 그러나 한국은 현실적인 가능성보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 핵은 용인할 수 없다는 규범적 판단에

---

31) 예컨대, "북한 핵 보유 불용"을 언급할 때는 한국 측의 견해임을, 그리고 "유관 핵무기 개발의 위협...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때는 한중 양측의 의견임을 각기 명기함으로써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통일연구원,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통일정세분석 2013–07), pp. 20–28; "中韓面向未來聯合聲明," 『人民日報』, 2013年 6月 28日,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3–06/28/nw.D110000renmrb_20130628_2–02.htm (검색일: 2013. 10. 29). 이런 평가에 대해선 김한권, "실익을 챙긴 중국과 장기적 포석을 둔 한국: 한중 정상회담의 평가," Issue Brief, No. 62(July 11, 2013), pp. 1–10 참조.

32) 신상진, "중국 외교안보전략의 자산, 북한과 북핵을 읽는 중국의 독법," 정재호 편, 『중국을 고민하다: 한중관계의 딜레마와 해법』(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p. 179–180. 따라서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王俊生, "冷戰後中國的對朝政策: 美國的解讀與分岐," 『東北亞論壇』, 第108期(2013), pp. 19–27.

33) 왕지스(王緝思), "북핵문제 및 당면 한중 관계,"『한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민주평통 한 중 평화포럼 자료집, 2010. 9. 28); 姜龍範 王海凡, "朝鮮的核戰略與核外交," 『社會科學戰線』, 2013年 第4期, pp. 188–197.

기초해 있다.

넷째, 한국은 미국과 함께 그간의 유화적인 접근이 실패로 돌아간 현재 지속적인 대북 압박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간주한다. 대화 및 협상도 북한이 성의 있는 가시적 핵포기 조치를 선행한 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북한 핵이 모든 문제해결의 선제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핵이 다른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북핵에만 초점을 두면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제재란 근본 해결책이 아니며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스스로에 의한 핵 포기 외에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도 그다지 실효성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강한 반발이나 북중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판단한다.[34)]

이런 미묘한 차이는 양국 간의 대북 공조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중국은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강압적 방법은 불가하므로 그 해법으로서, 먼저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화해국면을 조성한 뒤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선행한 뒤, 북한 스스로가 핵이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 폐기하게 만드는 접근법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북핵 해결이 외교 목표 중 하나이긴 하나 매우 장기적 차원의 것으로서, 이를 당면 목표 및 대북관계의 선결조건으로 생각하는 한국과 배치된다. 요컨대, 한국은 당장 북핵을 '해결'해야만 하나, 중국은 현 단계에선 근본 해결이 불가하므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국의 대북 강경 입장은 핵포기를 요구하는 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핵을 통해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한 강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향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의지며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핵을 가지고 주변을 위협하거나 타국에 빌미를 주어 지역 분쟁이 야기되게 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이다.[35)] 즉 핵을 반대하고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언사는 원칙의 표명이지 중국이 "향후 북핵 폐기를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기는 무리라고 본다.

---

34) 진창이, "중국의 대북정책,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정덕구 추수롱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pp. 323-324.

35) 자오밍하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가?" 정덕구 추수롱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p. 61.

Ⅵ. 함의와 제언

이상의 논의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해준다.[36] 첫째,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과 갈등적 관계에 있는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측면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이 북한체제의 안정과 북중관계를 중시함으로써 역내 문제에 있어서 주로 북한을 두둔하고 보호하려는 행태로 나타난다고 이해된다. 즉 중국은 북한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외에, 한중간에는 북한 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적잖은 차이를 나타내고 이것이 근본 해법에 대한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곰곰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않고선 행동의 공조를 이루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방식, 흑백논리에 익숙한 한국인의 경험과 생각으로서는 중국의 정책 경향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이 서로 다른 정책 사이에서 운영의 묘를 부릴 때 한국은 수많은 중국의 정책 변화를 진단하게 된다. 우리와 같다고 전제하고 중국을 바라보면 이해란 요원한 일이다. 2010년 천안함사건 당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중국이 친북 편향으로 기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쟁이 야기된 것은 중국이 북한 견제 내지 압박 정책을 구사하는 한미와 같은 편에 서 줄 것을 기대하는 바램에서이다.[37] 우려나 기대 모두 우리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보다 냉철하게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연 정책 변화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지, 심지어 북중관계 악화가 한국에게 유리한 점만이 있는지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다.

이와 동시에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식 해법 및 접근법이 지니는 문제점도 고민해야 한다. 첫째, 물론 강압적 방법 역시 만약 북한이 제재에 굴복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바, 다른 대안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북핵 자체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문제의 초점을 두고 개혁개방을 유도함으로써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중국식 방법도, 만약 북한이 그로 인한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여 폐쇄성을 지속한다면 동일한 문제에 봉착한다. 따라서 이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 및 균형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지금과 같이 북핵 문제를

36)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은 북핵문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다 넓은 의미의 한중관계 일반 및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있다. 해당 주제 영역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희옥,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4호(2012), pp. 1-28; 김흥규, "한중 수교 20년과 한중관계 평가: 미래 한중관계를 위한 방향과 더불어,"『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집 제3호(2011), pp. 211-240; 조영남, "한중 관계의 발전추세와 전망: 바람직한 중국 정책을 위한 시론,"『국제 지역연구』, 제20권 제1호(2011), pp. 89-123; 정재호,『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37) 이런 기대는 일반 여론 뿐 아니라 정책 당국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김재철,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할 것인가?"『KERI Column』, 2013. 4. 29, p. 2 참조.

장기적 과제로 미루고 현상의 안정만을 추구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북한은 핵보유의 지위를 더욱 굳히고자 할 것이며, 그럴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핵포기의 대가는 증가하는 반면 그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된다. 특히 북핵 해결을 점진적인 접근을 통한 미래의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당면한 위기 즉 핵실험 등 군사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둘째, 그런 점에서 최근의 강경 정책은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우려할 것은 현 국면이 완화되면 중국이 다시 온건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얻게 되는 교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또 다른 북한의 도발행위가 차후 발생한다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38)] 요컨대, 중국은 외부 입력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변화에 의존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바, 이는 문제유발자가 문제해결자가 되어야 하는 모순을 의미한다. 결자해지의 입장이나, 북한이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인 것으로 매우 소극적이고 북한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형국인 셈이다. 중국 역시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견지의 자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를 분리하여 전자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후자는 동북아 지역의 공공재로서 중국이 문제해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과연 비핵화 없이 한반도 안정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비핵화가 중국이 추구하는바 한반도 안정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비핵화 노력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그 사이 북한은 핵 개발로부터 실질적인 핵 보유로 발전했기 때문이다.[39)] 요컨대, 한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연동해 접근하는 포괄적 전략 사고가 필요한 동시에, 중국은 북핵문제의 내부해결 외에 외적해결 방식의 유용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38) 예컨대, 중국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기존의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개입 정책을 취해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2006년 제1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으나, 북한의 태도가 오히려 더욱 강경해지고 북한 변화의 노력도 허사가 되자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다시 "유화적, 소극적, 수동적"으로 되돌아 간 경험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이런 유화적 정책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金燦榮, "朝鮮半島局勢的新動向與中國的應對之道," 『평화를 묻는다』(북경: 2013년 한중평화통일포럼 논문집, 2013. 7. 24), pp. 181–189.

39)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이는 북한의 핵 개발 이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핵을 보유하게 된 현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이라면 중국의 현상유지 정책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핵 폐기를 추구한다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복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논쟁: 대북 정책의 진화 배경과 함의 (요약)

전성흥 (全聖興, 서강대)

이 글은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최근 여러 가지 국제문제에 있어서 소위 공세적 외교행태를 보임으로써 그 배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기존 관행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와 함께 북핵 반대 및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적잖은 논쟁이 야기됐다. 본문은 이상과 같은 논쟁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상이한 분석 결과의 주요 요인을 분석했다. 하나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 상태를 변화라고 규정하는지,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상적으로 기존의 정책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이중성을 설명했다.

이런 이중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 정치체제 및 정책과정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중국은 정치 시스템의 특성상 국가 정책이 보편성과 추상성, 그리고 장기성을 지님으로써 단기 내에 잘 변화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에 따른 중국의 정책 변화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체제 하에 있는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 경향인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는 새로운 상황과 필요에 의해 정책 변화가 요구될 때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유지 하에 새로운 부분을 가미 내지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호 모순된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단일한 정책 목표만을 제시하지 않고 복수의 정책 원칙, 방침 등을 동시에 견지함으로써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당되는 원칙을 근거로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분석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원칙은 최근에 와서 상대적 강조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유사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에 있어서 굳이 '변화'를 찾는다면 그것은 정책 '방향 자체'가 아니라 정책의

‘추진 방식’에 있다고 봤다. 개혁 이후 그간 중국이 행해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은 바로 대외관계에서 중국은 더욱 강경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 정책과정의 특징에 근거할 때, 향후 중국은 상황에 따라 기존의 온건/소극적 자세에 더해 강경/적극적 행태를 혼용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 결과는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 차이에 비추어 다음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해 준다. 우선, 북한 핵의 존재 자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각기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핵 폐기 가능성 및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상이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중국의 대북 강경 태도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반대 및 경고의 의사이지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해선 안 되며, 보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북한 내부의 자체 변화를 통한 장기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사고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제유발자에게 문제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인 동시에, 그간 온건노선의 결과 북한이 핵의 개발 상태에서 보유 상태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유효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방침을 분리하는 기존 정책의 폐단을 개선하는 한편, 대북 외적해결 및 내적해결의 병행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解读有关中国对韩半岛政策的争论：中国对朝政策变化的背景与意义 (摘要)

全聖興 (西江大学)

本文旨在评价（韩国社会中）有关中国对朝鲜政策变化与否的争论，并揭示其意义。近来，中国在多项国际问题中，表现出了所谓攻势的外交态度，引起了各方广泛的关注。尤其是在2013年朝鲜第三次核试验后，中国对朝鲜表现出了与以往惯例不同的强硬态度，并对朝鲜核试验表示了强烈的警告。针对这一问题，相关领域的专家之间展开了对中国政策变化的争论。本文在简要介绍上述争论的同时，指出各方提出不同分析结果的原因。其一是，各方对什么可以称为“变化”这一问题没有一个标准的共识，因此意见也出现了分歧。其二是，从中国政策的表现形式来看，具有一定的双重性，即在现有的政策没有得到废除的情况下，出现了新的倾向和变化，因此大家比较容易产生不同的理解。

为了充分认识这种双重性与复杂性，我们有必要了解中国国际政治体制及其政策过程的特点。社会主义中国的政治体制的特点是，因为其政策具有普遍性、抽象性及长期性，因此短期内不会有太大变化。从这一角度考虑，我们试图分析习近平政府的上台对中国政策带来的变化，这种思维方式本身就源于我国的经验，而导致这种经验产生的正是（与中国的体制完全不同的）我国的体制。中国在面临新的状况与需要时，并不是废除既有政策而选择新的政策，而是在维持既有政策的前提下，通过添加新的内容，对既有政策进行补充。同时，在处理相互矛盾的关系时，中国并不是提出单一的政策目标，而是坚持多个政策原则、方针，根据需要随时进行调整，具有较强的灵活性。在这一点上，虽然最近中国对韩半岛政策的三大原则的侧重点有所变化，但根本的方向是没有变的。今后中国完全有可能根据状况的变化重新调整政策。

如果说中国的政策一定有什么“变化”的话，这种变化并不是在政策的“方向本身”，而是在政策的“推进方式”上。改革以后中国在外交关系上较以前的新变化是，中国表现出更强硬、更积极的态度。因此，根据中国政策过程的这些特点，可以预测，

中国今后会根据具体的情况，表现出稳健/消极这一既有姿态与强硬/积极的形态相结合的立场。

考虑到两国在认识朝核问题上差异，这种分析具有如下几点意义。首先，韩国与中国对朝鲜持核武器这个问题的认识是不同的，同时，双方对朝鲜放弃核武器的可能性及解决方法的立场也是不同的。例如， 中国最近强硬的对朝态度是对朝鲜挑衅行为的反对和警告，并不能把这种态度视为中国对废除朝鲜核武器的具体措施。因此，韩国不应迷茫于对中国政策变化的错误的期待与担忧之中，而应该更加冷静客观的认清状况。此外，我们还有必要重新分析中国对朝核问题解决方案的战略性思考，即中国认为解决朝核问题是一个长期的课题，应该通过朝鲜内部自身的变化来完成。这种态度无疑是将解决问题的权限赋予挑起事端的一方，同时，长期以来的温和路线导致朝鲜已经成为持有核武器的国家，所以，这一政策可以说并不是十分有效的。因此，本文建议，中国有必要改善现有政策的弊端，即在非核化和韩半岛稳定的方针之间存在分离的问题，同时应推进朝鲜内部解决与外部解决相结合的政策。

中美新型大国关系和东北亚区域秩序
<中美新型大国关系的建构与东北亚秩序>

金强一 (延边大学)

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金强一

论起能够在人类命运的选择上起主导作用的大国，可以列举美国、中国、俄罗斯、英国、日本、德国等国家，但是，近来人们关注的焦点常常集中在美国和中国这两个大国身上。这大概是因为，美国是自第一次世界大战以来一直主宰世界的唯一的霸权国家，而中国却是被视为在不远的将来能够挑战美国霸权地位的新兴崛起势力。很多人基于历史的经验对这两个世界级大国将要进行的战略性大博弈予以极大的关切。因为，在人类的历史上所有的霸权国家的崛起均经历了惨烈的权利的转移过程，即以战争的胜负来确定其霸权地位。那么，中美在不远的将来是否也要以军事冲突的形式来决出胜负，以确定由谁来主宰这个世界？尽管人们不会轻易相信中美会发生大规模的武力冲突，但是，这种可能性总是存在的。正是由于这种可能性的存在，人们又以极大的兴趣来关注近来中国的习近平主席提出的建构中美新型大国关系的政策性构想。建构新型大国的设想似乎早已提出，而习近平主席提出的这一思想之所以具有非常大的现实意义，就在于形成了中美两国的初步共识，这的确是鼓舞人心的事情。但是，认真地思索目前在国际上热议的新型大国关系之讨论就会发现，这一讨论并没有摆脱以往思维模式的框架，这就是其立足点常常是自国的利益，或者说，并没有摆脱现实主义理论之框架。这样，所谓建构新型大国的设想本身失去了一个坚实的基础，即缺乏“类本位”的思考。

自冷战结束之后，人类事实上面临的是有别与任何历史阶段的新的历史时期。人类不仅享受科学技术和和平给与他们的幸福，但同时也面临了足以使文明体系坍塌的危机因素。人类所开发的足以使其毁灭几次的大量杀伤性武器的危险性自不必说，所面临的人口、粮食、能源、资源、环境等方面的危机因素也足以把人类社会推入无法自拔的生存危机之中。这就是说，现在人类所面临的问题与历史上所面临过的任何问题都有性质上

的区别，也就需要从人类生存的角度思考现在的危机因素。本质上讲，这是人类进行命运之选择的分岔点，而在这一分岔点上的选择中所谓的大国起着至关重要的作用。也就是说，讨论建构新型大国关系的逻辑起点应当是“人类的命运”，或者说，只有建构“类本位”的思考方式，才有可能建构积极的大国之间的新型关系。出于这种考虑，我曾经提出“主导型大国”的概念[1]，认为，所谓新型大国关系必须基于人类共同利益基础之上的并能够引领世界走向和平和繁荣的大国关系，唯有如此，才有可能彻底摆脱以往霸权国家的行为范式，也才有可能建构所谓负责任大国的关系。

而理论上对大国新型关系的描述是一回事，现实地展开的大国关系则又是另一回事。从现实的层面上看，中国和美国虽然在某种程度上达成了建构新型大国关系的共识，但正在进行全方位的战略博弈又是不争的事实。而这种战略博弈的主战场就是东北亚。这场战略博弈大有“世纪大决战”的意味，因为，如果这场博弈不过是以往霸权国家争霸历史的翻版，那么，世界的未来将是一片混沌的状态；相反地，如果这场博弈能够促成新型大国关系的建构，那么，世界有可能拉开崭新秩序之序幕。如果美国和中国等大国仍然以以往的霸权模式和行为范式来争夺霸权地位的话，东北亚区域有可能变成毁灭人类的一个策源地；而如果大国之间摆脱支配几千年人类历史的行为范式并建构崭新的世界体系，东北亚就会成为世界的和平繁荣的新的动力源。我所说的“世纪大决战”的含义正在于此。

一. 建构中美新型大国关系的理论框架

自冷战结束以来，世界从总体上呈现出和平发展的趋势，而且从性质上，这一发展趋势表明着国际体系向世界体系转换的特点[2]。经济的一体化、世界性社会化和民主化思潮的形成、联合国管理功能的扩大等等的现象事实上表明目前世界的总的发展趋势已不同于历史上任何时代国际体系的转换，这一转换已内在地具有一个明显的方向，这就是建构全新的世界体系[3]。当然，世界所呈现的发展趋势并不证明她已进入了崭新的历史时期，而是表明已进入了新旧秩序交替的历史的抉择期。在这一大抉择期里，人类要在方向上进行选择，是建构一个崭新的世界体系并以此消解人类所面临的生存危机，还是延续以往的行为模式把人类推入无法自拔的危机深渊里。事实上世界已从人口、能源、

1) 金景一，金强一：“东北亚国际秩序的转型与大国的角色定位”。东北亚论坛。2013年第二期
2) 金景一，金强一：“东北亚国际秩序的转型与大国的角色定位”。东北亚论坛。2013年第二期
3) 上文。

资源、环境、粮食等各个方面呈现出足以毁灭自身的各种潜藏的危机因素，这些危机因素说明人类文明体系的突然坍塌不是不可能的事情，从这种视角上看，人类事实上已经进入了进行命运之选择的分岔点上。这个分岔点上的选择与以往任何时期的选择具有性质上的区别，这就是要选择共同繁荣还是共同毁灭。在这一选择的重大分岔点上，人类却面临两大不幸：其一是，早在上世纪70年代罗马俱乐部曾经发出严厉的警告，即地球已无法承受人类的发展，但是，到至今没有引起战略家们的足够的重视，这是悲剧性的；其二是，并不是所有国家都能掌握这一选择过程的主导地位，而是由几个称之为大国的少数国家正在左右着人类的命运。这也就是说，关乎人类命运的选择权几乎落到了称之为大国的那几个国家手里。

人类命运之分岔口上的选择，这应当是一个讨论近来热议的建构中美新型大国关系问题的理论框架。或者说，可称之为霸权国家的那些大国应当明确，是把人类引向和平繁荣，还是以以往的行为模式来争夺其霸权地位并把人类推入危机的深渊，在相当的程度上取决于大国所具有的理念和战略指向。但是，建构新型大国关系的讨论并不是把这一重大的问题当作其前提，而是把自国的发展利益当作立论的依据。关于建构新型大国关系的讨论显而易见地形成了两个视角：其一是，现在无论是美国的学者还是中国的学者都基于如何摆脱“崛起大国和守成大国之间对抗的困境”[4]的角度关注建构中美新型大国关系之问题。这种理解基于大国的崛起必定伴随武力来实现权力转移之历史的经验，于是争霸必伤及自国的角度来谈论新型大国关系；其二是，以自国的利益为基点来讨论争霸之路是否行得通的问题。比如，中国的很多学者当论证霸权之路不适合于中国这一论点时，常常以中国的发展仍然需要稳定而合作的周边环境为依据。这种理解显然把稳定和和平锁定在“自国利益”之上，而且，由此引伸出的“中国决不走‘国强必霸’之路”[5]的结论显然缺乏逻辑性。我并不是在指责这种视角的错误，因为，这些视角至少有合乎情理的一面。我想说明的是，在这些议论中几乎找不出以“类本位”的思考方式来进行论证的观点，这就使所谓建构新型大国关系之理论显得苍白无力。我们所处的时代显然与以往的任何一个时代有着本质的区别，如果我们不对潜藏在人类繁荣的深层结构里的巨大的危机因素，那么，地球有可能处于失控状态。

正因如此，似乎掌控人类命运的大国应当明确地认识当代世界不同于以往任何历史时期的特点和趋势，即要正确地为自国在世界体系之中的地位进行定位。事实上，在这一问题上已有很多学者关注到世界的趋势性变化，由此得出霸权之路走不同的结论。如

4) 王缉思：“破解大国冲突的历史宿命—关于中美构建新型大国关系的思考”。北京论坛2013 论文摘要集《构建新型大国关系：机遇与挑战》
5) 吴乐珺：“亲仁善邻共同发展”。人民日报？？

威廉・W.凯勒认为，到二次世界大战为止“大规模武装冲突是大国崛起更为常见的形态”，而当今世界有两个因素有效地限制了大规模武装冲突的爆发，这就是核威慑和全球经济一体化[6]，这一深刻的变化正在限制大国的行为。但是，这种理解忽略了极为重要的另一个变化趋势，这就是世界行为范式的本质性变化，正由于此，很多议论并没有把握大国正确定位的客观的依据。如果说战略性“恐怖平衡”限制了大国间无胜负的大规模战争、经济的一体化使各个大国成了利益的共同体等等的因素促使大国基于自国的利益而进行更为理性的选择，那么，世界行为范式的变化正在促使大国以“类本位”的角度思考和选择其行为的合理性，而这种行为范式的变化说明，大国为所欲为地支配世界的历史正在终结。

关于“恐怖平衡”限制大国的行为、经济一体化形成大国间利益共同体等等的问题已有很多论述，这里仅就世界行为范式的变化是如何改变大国的行为并使世界形成新的演化趋势的问题谈谈我本人的想法。我曾经在“国际行为范式的演变与当代国际关系”一文[7]中较详细地论证了当代国际行为范式形成的过程和特点，以此为基点论证了当代国际关系演化的趋势，这里概述其结论：一是，大国的行为范式已由古代的“吞并扩张型”和近代的“殖民掠夺型”演化为“控制合作型”，这种演化证明人类社会已呈现向世界体系演化的趋势；二是，世界正在形成广泛的以“主权”观念为核心且以民主、平等、法规、正义、公正、共赢等理念为其结构的新的理念体系。这一理念体系的形成极大地改变着大国行为的选择过程，或者说，以往的霸权国家为所欲为的历史事实上已经终结；三是，面对这一时代性的变化，大国应当进行正确的定位，这就是，应当以新的理念体系来引领这个世界，即要变成“主导型”大国，唯有如此它们才有可能成为所谓负责任大国。而其核心就是要确立“类本位”的意识，即其选择行为的依据是解决人类面临的全球性问题和共同繁荣。大国能否形成在人类共同利益的基础上实现自国的利益的行为模式，这将是衡量大国真正成为负责任大国的一个重要标志。

或许我对这一问题的理解更多地倾向于理想主义，但这种理解事实上更多地考虑的是世界所面临的困境与演化路径的现实问题。我所以认为世界已进入了抉择的分岔点是因为，我们所居住的地球已容纳不了大国间无休的争霸，大国的理智的选择就是变成引领这个世界走向共同繁荣的主导型大国。

6) 威廉・W.凯勒：“中国的和平崛起—路线图或者是幻想？”《中国的崛起与亚洲的势力均衡》。上海人民出版社。2009
7) 金强一：“国际行为范式的演变与当代国际关系”，东疆学刊2013年第2期。

二. 中美的战略博弈与大国的定位问题

所谓大国的定位无非是确定其在国际体系之中的角色和地位。影响大国定位问题的因素有国家的实力、国际社会发展的总的趋势、国家在国际社会中的作用、国际社会对该国的评价、对自国力量及作用的自我评估等。在通常的情况下，一个国家确定其在国际体系中的地位和作用的重要的变量是自我评估，这是由于，自我评估是综合其它因素并确定其战略体系的核心依据。通过自我评估，国家战略决策系统将确定自国的实力和在国际体系中的地位和作用，进而建构其战略体系及其目标。而由自我评估所形成的战略目标及其指向事实上表明该国在国际体系中希望得到的地位，由此完成所谓在国际体系中定位的逻辑过程。这里有一个极为重要的问题，即这一定位过程所形成的战略目标的性质和方向将对国际体系产生极大的影响，甚至它可以重组世界格局。比如，希特勒发动第二次世界大战可视为德国错误地自我定位的结果，而这一定位给世界格局产生了深远的影响。现在我们谈中国和美国在国际体系之中的定位问题事实上也将对未来的世界格局将产生深远的影响。如果这些国家进行自我定位的主要依据是自国的利益，那么，其结果只能是与其它的战略对手进行博弈，以确立其霸权地位，这就会出现历史上争霸模式的翻版，世界也就不会有安稳的日子；而如果这一定位的主要依据是人类共同利益基础上的和平发展，那么，其结果只能是构筑和平发展的共赢模式，由此，这些国家有可能成为主导新的历史时期的强大力量。正因如此，如同冷战时期的美国和苏联那样，中美两国能够成为主导世界秩序和格局的两个极的话，这两个国家如何定位将对世界格局的演化产生决定性的影响。

现在，我们应当确定议论的前提，那就是中美正在进行战略性博弈这一事实。从美国的角度谈，它在短期内无法摆脱霸权历史的惯性，也就不可能容忍其它挑战势力的崛起，这就形成了对全球实施战略性控制的战略体系。近两年来，美国借美韩、美日同盟得以强化之势加快了实施“重返亚太”战略的步伐。尽管美国声称这一战略举措并不针对中国，但是，不会有战略家们愚蠢到了天真地相信美国的这些表白。倒是日本真正读懂了美国的用意，公开声称加入遏制中国的行列。这就是说，美国的“重返亚太”战略事实上摆开了遏制包括中国在内的未来挑战势力的架势。客观地说，自冷战以来美国的“霸权治理”在相当的程度上考虑到了“类层面”的问题，这是美国所起的积极的作用，但在能否维持其霸权地位的问题上美国几乎把自国的利益视为唯一的准则，这就产生出一系列的问题。而从中国的角度谈，其改革开放以来所取得的惊人的成就是在短短的30余年的时间里实现的，因而，中国的发展并没有深厚的历史积淀，并没有达到与美国一比高低的程度，因此，在中美正在进行的战略性博弈中中国常常处于守势。于是，

很多高明的战略家们构思与美博弈的路径，这就是避开与美国的正面冲突，确保自身的发展所需的和平环境，用一句话来概括，这就是韬光养晦。但是，这里有一个必须回答的逻辑问题，即现在处于劣势的中国为了自身的发展需要和平环境，而发展到足够强大时中国会不会在世界体系中争霸权地位？更直接一些说，中国从其理念体系上是否具有力量不足时韬光养晦而力量强大时争霸的可能的倾向？当然，现在有一些学者和政界人士宣称中国不会走霸权之路，但如果这种表白并不基于“类本位”的意识，也就有可能变成一个空洞的和不能令人信服的政治口号。

很显然，现在正在展开的中美战略博弈的战略框架内我们还不能清晰地看出出自“类本位”意识的战略思路。如果中美两国正确地理解人类所面临的诸多现实的问题，并形成以“类本位”为基点的战略框架，那么，建构中美新型大国关系的构想就会具备非常坚实的基础，相反地，如果中美两国只着眼于各自的眼前利益，那么，建构新型大国关系的构想有可能流于空想。现实地说，中美两国的战略事实上更多地出自自国的利益，而较少关注类层面的问题，于是就出现了美国更关注如何遏制中国而中国更关注如何实现和平崛起的博弈状态。当然，任何一个国家制定其战略体系的出发点在于自国的利益，这似乎是无可非议的自古以来的铁的定理，但是，就中美这样的大国来讲，问题并不出自这些国家是否关注自国的利益，而是出在是否把实现自国利益与人类的共有利益有机地结合了起来，即在实现人类共有利益的过程中实现自国的发展利益。如果明确地理解这一问题，那么，中美两国就有可能与其它的国家一道建构和平、共赢、共荣的世界体系，也就有可能以“主导型大国”为自国在国际体系中的地位和作用定位。

我并不乐观地评价中美正在进行的战略博弈，遏制与反遏制的博弈状态有可能延续相当长的历史过程，而且，很难预测这种博弈状态所能导致的后果。这是因为，这两个国家的战略在短期内不可能一改以往的行为模式而更深切地关注人类的命运。但是，如果这两个国家的决策具有充分的理性，或许不致于出现危及人类生存的情况。那么，有必要一步一步改变以往的行为范式，由此建构全新的国家间的行为范式。就中美关系而言，当面的问题是如何对待中国崛起的问题。现在中国的很多学者讨论中国如何和平崛起的问题，其实这不是中国单方面能够实现得了的。“和平崛起包含一个双向进程：崛起国使其自身适应国际社会规则与结构；与此同时，其他大国以适应新的权力与身份分布状况的方式调整这些规则和结构中的一部分。”[8]也就是说，中国能否和平崛起是一个关系到中国的战略指向和其它国家能否容纳中国的崛起的双向的问题。一方面，美国及周边国家能否平静地接受中国的崛起并与中国形成一个共赢的体系结构是问题的关

8) 巴里·布赞：“中国能和平崛起吗？”。《中国崛起与世界秩序》第33-34页。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1年。

键。这种状态需要美国等国家抛弃以往的霸权模式，建构全新的行为范式；另一方面，中国是否从主观上确立“类本位”的思考方式并以更为积极的姿态与国际社会一道建构崭新的世界体系和秩序也是极为重要的一个问题。

从中美两国在国际体系中自我定位的角度谈，从现在起将进入一个选择的分岔点，如同在前面所叙述的那样，这一分岔点的选择将具有决定性意味。“以美欧债务危机、美欧关系重塑和‘新型大国’的崛起与联合这两个并存的进程为标志，世界可能正在迎来新的国际规则制定期”[9)]。换言之，这一分岔点上世界要选择新的、能够使所有的地球的成员都能接受的规则。制定新的规则可能相当复杂，但有一点应当清楚，这种规则应以人类的共同利益作为其最为核心的议题。应当说，围绕全球问题正在出现各国合作的政治群体化趋势和机制，如“新兴大国气候政治群体化”[10)]就是其中的一个。这也是制定新的规则的一种努力，而在制定这种规则时，大国应当成为引领世界的主导者，即要成为全球治理、世界体系的建构的引领者，也要成为全球民主化和社会化的倡导者。这也是中美两国自我定位的方向。

三. 世纪大战略博弈的前沿：东北亚

从全球的经济和政治的结构上看，东北亚是最具吸引力而又最具危险性的区域，也就成了大国间战略性大博弈的重要场所。从经济上看，东北亚已经形成了资本、技术、资源、人口密集的优势，成为最具发展潜力的区域；而从政治上看，东北亚又是冷战结构尚存且军事大国林立的区域，也就成了最具危险的区域。正由于东北亚区域所具有的两重特性，引发大国之间的战略博弈是非常自然的事情。我在前面已经阐述，人类已进入了选择的分岔点，而这一分岔点有可能正是东北亚。这是由于，如果我们在东北亚区域建构一个和平的国际性经济体并为世界的发展提供一个新的动力源，那么，人类有可能向建构新的世界秩序和世界体系迈进一大步，而如果这一区域出现大规模的冲突，将无法预测人类的命运。这也就是说，未来全球的走向有可能取决于东北亚的状态，或者说，东北亚将是决定未来世界演化的方向的重点区域。正由于此，在这一区域正在进行的大国间的博弈具有了“世纪大决战”的意味。

在东北亚区域，美国和中国所进行的战略博弈已成了世界瞩目的关注点，而这两个国家

9) 庞中英：“全球治理：中国的战略应对”。国际问题研究。2013年第4期
10) 赵斌：“新兴大国气候政治群体化的形成机制”。当代亚太。2013年第5期

的博弈具有霸权国家与崛起的新兴势力相互对峙的性质。中国的崛起或许是引发这一战略博弈的原因，但至少从表面上看，美国的“重返亚太”战略事实上拉开了这一战略大博弈的序幕。从全球政治结构上看，东北亚正在成为新旧势力遭遇并争夺主导地位的主战场。东北亚之所以成为大国间战略博弈的主战场有两个方面的原因：一是，东北亚区域特定的政治结构给大国的介入提供了理由。当今世界已形成了被国际社会广泛接受的“无理由不能介入”的行为准则，由此美国等周边国家广泛介入东北亚事务就需要足够的理由，而规定东北亚冷战结构的朝鲜半岛问题和日本问题等给美国以广泛介入的理由；二是，东北亚区域各大国的战略目标与指向发生了冲突。美国的维持霸权地位的战略指向和中国的发展并崛起的战略指向本质上具有冲突的性质。由于这种战略指向的冲突，美国和中国事实上进行着遏制与反遏制的战略博弈，而东北亚的特定的政治结构为这一战略博弈提供了平台。美国正在利用朝鲜半岛的分裂状态和局势挤压中国的发展空间，并利用日本和韩国等同盟国来牵制中国。而从另一方面看，日本的右倾化倾向有可能形成东北亚区域的一个新的热点，如果日本继续激化与周边国家的关系，日本也有可能成为东北亚区域冲突的一个策源地。

由于在美国与中国的战略博弈中美国显然占据了主导权，所以东北亚的局势更多地左右于美国的战略。美国的“重返亚洲”战略并不简单地是在亚洲扩张其军事存在，从其战略目标上美国更着眼于防止新崛起的中国在亚洲区域建构自己的某种秩序并尽可能地挤压中国等挑战势力的战略空间，这也就是所谓遏制中国的内含。但是，美国在这一问题也深感力不从心，由于此，美国希望日本、韩国、澳大利亚等盟国投入更多的力量来共同遏制中国。美国的一些政治家们已经公开表示，支持这些盟国在遏制中国的问题上扮演更为积极的角色[11]。美国的这种战略举动无疑激活日本右翼政治家们的政治野心。正由于美国给日本打气，安倍在接受美国《华尔街日报》的专访时称，“外界期待日本担起更大的角色来抗衡中国影响力”。安倍的这种直指中国的言论自然引发中国的警戒。于是，有些中国的学者日本的军事大国化倾向视为未来十年内亚洲区域最大的安全问题[12]。

就目前东北亚区域所出现的政治结构的变动可以提出这样一个问题：如果说东北亚是最具发展潜力的区域，那么，这一区域内的各国为什么不能全身心地投入到国际合作事宜，反面形成了多角警戒态势？我认为，目前东北亚区域所有问题的症结在于朝鲜半岛。正由于朝鲜半岛所具有的冷战结构，各国形成了相互冲突的战略指向，也出现了足以改变东北亚格局的各种问题。比如，美国的“重返亚太”战略的重要依托就是朝鲜半岛问题。朝鲜半岛的分裂、朝鲜的核问题、朝鲜半岛南北对峙等等的问题不仅为美国

11) “美议员力推亚洲盟友遏制中国”。环球时报。2013年10月31日。
12) 刘江永：“东北亚局势面临的机遇和挑战”。成均中国研究所《中国观察》。2013年第四期

提供了广泛介入东北亚区域事务的理由，而且也形成了美国遏制中国等新兴崛起势力的战略性支撑点。尽管美国在包括朝鲜核问题在内的朝鲜半岛问题上起着相当大的积极作用，但美国正在利用朝鲜半岛的局势也是不争的事实。又如，日本也正在利用朝鲜半岛问题来促进其正常国家化战略。近二十多年来，日本的右倾势力实现正常国家战略的努力一直以朝鲜威胁论为借口，而且以历史问题为切入点把矛头逐步扩大到韩国和中国，形成了其“自陷困境”的战略指向。我们可以以反证法来说明美国和日本的这些战略与朝鲜半岛问题有直接的关联。为了说明问题，我们可以假设这样一种状态，这就是朝鲜半岛处在和平统一的状态。此时，美国事实上丧失其广泛介入东北亚区域事务的理由和战略支撑点，进而很难实施以遏制中国等国家为目标的所谓“重返亚太”战略。届时，美国会遇到与美韩同盟及美日同盟的延续直接相关的问题，即美国在东亚区域的同盟体系将失去重要的理由根基。这也就是说，对于美国来讲，朝鲜半岛问题是个问题，但朝鲜半岛全然没有问题也是个问题。而日本的右倾化也与朝鲜半岛的状态相关。如果朝鲜半岛实现和平统一，日本将失去推进其右倾化的周边环境，如果此时日本为其右倾化寻找借口的话，那只能是中国威胁论，而当矛头直指中国时将对日本也产生极大的负面效果，这是因为，如果朝鲜半岛和平统一，美国的战略体系就面临重新改的问题，此时美国不可能为日本的右倾化提供更多的支持。如果没有美国的撑腰，日本不可能选择四面楚歌的自杀式战略。更为可能状态是，朝鲜半岛和平统一将会导致中国、俄罗斯、朝鲜半岛之间的广泛的经济合作，美国和日本不可能放弃这一块肥肉，届时美国和日本将一改现在的战略而加入这一经济合作的过程并争夺这一过程的主导权。尽管这是一个假设，但朝鲜半岛问题的解决将会出现的逻辑过程就是如此。

如果以上述的视角分析在东北亚区域正在进行的大国间的战略博弈和政治格局的重组等问题就会发现，这些问题均与朝鲜半岛问题相关，因为，朝鲜半岛问题事实上规定着周边国家的战略利益的结构，也规定着它们的战略指向。从这种意义上可以说，朝鲜半岛问题正在规定着东北亚格局演化的方向，进而，对世界发展的方向产生非常大的影响。换言之，目前的朝鲜半岛对于世界未来的方向性选择上扮演非常重要的角色，其问题的解决与否将会带来完全相反的世界之两个图景。而对于中美两国建构新型大国关系而言，朝鲜半岛的重要意义更为凸显。如果朝鲜半岛问题得以解决，所产生的极大的波及效果将是东北亚区域各国的战略关注点的转移，即由原来的冲突的战略指向转移到合作的战略指向，这就会形成一个新的巨大的世界经济发展的体系和动力源。这种状态将会给中美两国以建构新型大国关系的现实的前提。由此我们也可以得出一个极为重要的结论，这就是朝鲜半岛问题不仅将考验中国和美国等大国的战略智慧，而且也将考验人类的战略智慧。

中美新型大国关系和东北亚区域秩序 (摘要)

金强一 (延边大学)

美国是自第一次世界大战以来一直主宰世界的唯一的霸权国家，而中国却是被视为在不远的将来能够挑战美国霸权地位的新兴崛起势力。很多人基于历史的经验对这两个世界级大国将要进行的战略性大博弈予以极大的关切。近来中国的习近平主席提出的建构中美新型大国关系的政策性构想。建构新型大国的设想似乎早已提出，而习近平主席提出的这一思想之所以具有非常大的现实意义，就在于形成了中美两国的初步共识，这的确是鼓舞人心的事情。但是，认真地思索目前在国际上热议的新型大国关系之讨论就会发现，这一讨论并没有摆脱以往思维模式的框架，这就是其立足点常常是自国的利益，或者说，并没有摆脱现实主义理论之框架。这样，所谓建构新型大国的设想本身失去了一个坚实的基础，即缺乏“类本位”的思考。

自冷战结束之后，人类事实上面临的是有别与任何历史阶段的新的历史时期。人类不仅享受科学技术和和平给与他们的幸福，但同时也面临了足以使文明体系坍塌的危机因素。人类所开发的足以使其毁灭几次的大量杀伤性武器的危险性自不必说，所面临的人口、粮食、能源、资源、环境等方面的危机因素也足以把人类社会推入无法自拔的生存危机之中。这就是说，现在人类所面临的问题与历史上所面临过的任何问题都有性质上的区别，也就需要从人类生存的角度思考现在的危机因素。本质上讲，这是人类进行命运之选择的分岔点，而在这一分岔点上的选择中所谓的大国起着至关重要的作用。也就是说，讨论建构新型大国关系的逻辑起点应当是“人类的命运”，或者说，只有建构“类本位”的思考方式，才有可能建构积极的大国之间的新型关系。

中国能否和平崛起是一个关系到中国的战略指向和其它国家能否容纳中国的崛起的双向的问题。一方面，美国及周边国家能否平静地接受中国的崛起并与中国形成一个共赢的体系结构是问题的关键。这种状态需要美国等国家抛弃以往的霸权模式，建构全新的行为范式；另一方面，中国是否从主观上确立“类本位”的思考方式并以更为积极的姿态

与国际社会一道建构崭新的世界体系和秩序也是极为重要的一个问题。

任何一个国家制定其战略体系的出发点在于自国的利益，这似乎是无可非议的自古以来的铁的定理，但是，就中美这样的大国来讲，问题并不出自这些国家是否关注自国的利益，而是出在是否把实现自国利益与人类的共有利益有机地结合了起来，即在实现人类共有利益的过程中实现自国的发展利益。如果明确地理解这一问题，那么，中美两国就有可能与其它的国家一道建构和平、共赢、共荣的世界体系，也就有可能以“主导型大国”为自国在国际体系中的地位和作用定位。

从全球的经济和政治的结构上看，东北亚是最具吸引力而又最具危险性的区域，也就成了大国间战略性大博弈的重要场所。从经济上看，东北亚已经形成了资本、技术、资源、人口密集的优势，成为最具发展潜力的区域；而从政治上看，东北亚又是冷战结构尚存且军事大国林立的区域，也就成了最具危险的区域。正由于东北亚区域所具有的两重特性，引发大国之间的战略博弈是非常自然的事情。人类已进入了选择的分岔点，而这一分岔点有可能正是东北亚。这是由于，如果我们在东北亚区域建构一个和平的国际性经济体并为世界的发展提供一个新的动力源，那么，人类有可能向建构新的世界秩序和世界体系迈进一大步，而如果这一区域出现大规模的冲突，将无法预测人类的命运。这也就是说，未来全球的走向有可能取决于东北亚的状态，或者说，东北亚将是决定未来世界演化的方向的重点区域。正由于此，在这一区域正在进行的大国间的博弈具有了“世纪大决战”的意味。

目前东北亚区域所有问题的症结在于朝鲜半岛。正由于朝鲜半岛所具有的冷战结构，各国形成了相互冲突的战略指向，也出现了足以改变东北亚格局的各种问题。朝鲜半岛问题事实上规定着周边国家的战略利益的结构，也规定着它们的战略指向。从这种意义上可以说，朝鲜半岛问题正在规定着东北亚格局演化的方向，进而，对世界发展的方向产生非常大的影响。换言之，目前的朝鲜半岛对于世界未来的方向性选择上扮演非常重要的角色，其问题的解决与否将会带来完全相反的世界之两个图景。而对于中美两国建构新型大国关系而言，朝鲜半岛的重要意义更为凸显。如果朝鲜半岛问题得以解决，所产生的极大的波及效果将是东北亚区域各国的战略关注点的转移，即由原来的冲突的战略指向转移到合作的战略指向，这就会形成一个新的巨大的世界经济发展的体系和动力源。这种状态将会给中美两国以建构新型大国关系的现实的前提。由此我们也可以得出一个极为重要的结论，这就是朝鲜半岛问题不仅将考验中国和美国等大国的战略智慧，而且也将考验人类的战略智慧。

중미 신형대국관계와 동북아 지역질서 (요약)

진창이 (金强一, 연변대)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국가로 부상하였고, 중국도 머지않아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신흥국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두 대국의 정세에 대해 중 · 미 대국 간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경쟁이 패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조명되었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중 · 미(中美) 관계의 정책적 구상은 마치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구상이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특히 중 · 미 양국 간에 형성된 기초적 공감대는 양국 국민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사건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정책 제시가 과거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자국의 이익이 앞세웠거나 현실주의적 이론에만 입각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처럼 두 강대국의 정책구상은 견고한 기초를 상실하고 범 인류적 사상(human race)이 결여되었다는 결과만 낳았다.

과거 냉전이 종결된 후 인류는 숱한 역사적 단계를 거쳐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맞았다. 현 인류사회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평화로운 삶을 통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문명체계를 붕괴시키는 파괴적 요소가 잠식해 있었다. 인류가 만들어낸 대량 살상무기는 물론 인구 · 식량 · 자원 · 환경 변화와 직결된 문제들이 인류사회의 생존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리스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때부터 인류는 현재 직면한 문제와 역사적 문제를 개별적 성질로 구분하고, 인류의 생존본능에 따라 리스크를 대처하는 사고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인류는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그 기로의 선택은'대국'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각인시켜주고 있었다. 새로운 대국관계에 대한 논점이 '인류의 운명'에 달렸다거나, 대국 간의 능동적인 외교관계는 '휴머니즘'의 명분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해석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싶다.

중국의 평화발전은 중국의 전략적 지향점과 주변국가의 중국발전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본다. 한 측면으로 볼 때, 미국과 주변국가가 안정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다자간 윈윈 전략 체계로 협력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전의

패권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세계질서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측면으로는 중국이 능동적으로 '휴머니즘'의 이념 하에서 국제사회와 혁신적인 세계질서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냐는 점이다.

국가마다 제정한 전략적 체계의 출발점은 자국의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래로부터 전해져 온 불변의 법칙임에 더 논할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해 중국과 미국 같은 대국은 주변 국가의 이익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국의 이익과 인류의 공동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이해했다고 가정한다면, 중 · 미 양국은 주변국가와 평화 · 공동번영의 세계체계를 구축하거나 대국으로서의 입지에서 국제체계의 지위와 역할을 주도할지도 모른다.

세계의 경제 · 정치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은 발전잠재력과 리스크가 가장 많이 산재한 지역이면서 중 · 미 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벌어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 볼 때 동북아 지역은 자본 · 기술 · 자원 · 인구 밀집으로 가장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손꼽히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냉전구조의 잔재가 남아있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동북아 지역이 이 같은 두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국 간의 전략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인류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그 기로는 아마도 동북아 지역을 뜻한 것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중국이 동북아 지역을 평화적 국제경제체제로 발전시킨다면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며 이로써 인류는 새로운 세계질서 · 체계 면에서 진일보하게 되겠지만, 만일 동북아 지역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난다면 인류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지 모른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미래지향점은 동북아 정세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을 두고 벌어지는 중 · 미 간의 전략적 경쟁은 '세기의 결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동북아 지역이 직면한 모든 문제는 한반도에 달려있다.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구조가 주변국가 간의 이익충돌을 일으켰고,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한반도 문제는 사실상 주변국가의 전략적 이익구조와 한반도의 전략적 방침에 귀결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이끌고 세계발전의 방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는 한국 · 북한이란 상반되는 두 세계가 현 과제의 해결여부를 두고 세계의 미래지향점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셈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중 · 미 양국의 대국관계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동북아 지역까지 뻗어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기존의 전략적 충돌에서 벗어나 전략적 협력으로 유도되어 새로운 세계경제발전의 체계와 원동력을 구축하게 되며, 이로써 중 · 미 양국의 대국관계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바로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미국, 나아가 전 인류의 전략적 지혜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제2회의 한중관계의 미래비전과 한반도 통일
第二场 韩中关系的未来愿景和韩半岛统一

- 对于韩半岛统一的中国的认识和对应
  金景一 (北京大学)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진징이 (金景一, 북경대)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안정: 비전과 과제**
  전재성 (全在晟, 서울대)
- 韩半岛统一和东北亚的和平稳定
  全在晟 (首尔大学)

- **동북3성과 한반도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
  퍄오동쉰 (朴東勛, 연변대)
- 东北三省和韩半岛经济协力愿景和课题
  朴东勋 (延边大学)

对于韩半岛统一的中国的认识和对应

<韩半岛和平统一进程与中国>

金景一 (北京大学)

自近代史以来，东北亚国际秩序的几次变化都是通过战争完成的。1894年的“中日甲午战争”导致以中国为中心的东亚秩序崩溃，1905年的“日俄战争”成为日本建构所谓“大东亚共荣圈”秩序的开端，1950年的“朝鲜战争”则固定了东北亚冷战秩序的格局。这些战争都始于或发生在韩半岛，并且对中国政局产生深远的影响。

冷战结束之后，东北亚重又进入新秩序的构建期，而东北亚构建的新秩序依旧以韩半岛为核心区域展开。“朝核”问题引发的东北亚地区安全困惑，不仅影响着东北亚新秩序的建成，而且严重影响着中国周边环境的稳定，开始危及中国的核心利益。“朝核”问题源于韩半岛残存的冷战结构，而韩半岛残存的冷战结构根源在于韩半岛的分裂。

韩半岛的统一终究要解体韩半岛冷战结构，淡化“地缘政治意义”，凸显“地缘经济意义”，使“消极的和平”变为“积极的和平”，变“不确定因素”为“确定因素”。对中国而言，韩半岛的统一意味着近代以来一直影响中国的韩半岛问题彻底得到解决，韩半岛名副其实地成为海洋经济圈与大陆经济圈的连接点，为东北亚区域经济一体化，为东北亚新秩序的构建发挥巨大的正能量。

韩半岛与中国关系的历史定位

很多学者认为韩半岛自古以来就是中国抵御外敌的“缓冲国”[1)]。但是，我们知道海洋势力通过韩半岛企图征服中国大陆以前，韩半岛的重要性并非体现在它的地缘上的缓冲作用上。在古代的中原政权而言，威胁主要来自北方的少数民族。中原政权防范的是朝鲜和与这些少数民族联手攻打中原政权。就中原政权而言，“与朝鲜保持和平关系，

1) 美国］Rober R. Simmons：《朝鲜战争与中苏关系》(日文), 林建彦、小林敬尔译, コリァ评论社, 1976年, 第6页.

确使受益匪浅”。[2]

纵观古代中国与韩半岛关系的历史轨迹，我们不难发现，在古代中国的局势对韩半岛影响巨大。大体上讲，当中国统一而繁荣的时候，韩半岛也保持相对稳定，两国关系也保持密切关系，盛唐时期的唐朝与统一新罗的关系便是如此。当中国政局出现混乱或王朝交替的时候，韩半岛也往往陷入混乱或政权交替，两国关系也出现波折。中国的元明交替时期是这样，明清交替时期也是如此。

中国与韩半岛建立稳定发展的关系，始于中国的盛唐与韩半岛的统一新罗时期。可以说，以中国为中心的“天朝礼治体系”的形成，也得益于此时两国的密切关系。其后中国与韩半岛的“辅车相依”关系便是在这一体系内展开的。对中国来说，维护这一体系，至关重要，它本身就是维护中国封建王朝的利益。这一体系实际上就是当时的国际秩序。对朝鲜来说，它们是希望“在中国大陆上，有一个强大的政府，在它的周围地区，提供某种国际秩序，维持朝中边界和平及整个东北亚地区的和平。”[3]

但是，这一体系的发展并非一帆风顺，当中国政局发生变化，改朝换代，新旧朝代交替时，固有的体系总是要震荡一次，两国关系往往发生变化，冲突随之而来。如唐朝灭亡之后的五代十国时期，高丽国与宋朝保持友好关系，以牵制契丹和女真，结果高丽与契丹发生冲突。到了元朝统一中国，元朝更是欲以武力征服高丽，高丽进行抗元斗争，最终还是被征服，两者关系变为征服者和被征服者的关系，已不是过去体系内的关系了。加上“蒙古人不是儒学、儒术、礼治主义的赞赏者和支持者”，也很难在文化上沟通，双方的关系“很大程度上不是在‘天朝礼治秩序’的宏观架构之内展开的。”[4]

到了元明交替时，高丽朝的恭愍王主张反元，实施亲明政策，但是由于亲元派的反对，高丽王朝分为亲元和亲明两派，而此时，明朝对高丽施加压力，两国关系又处于紧张，高丽王朝决定进行辽东征伐，而反对派李成桂率军撤回，随即发动政变，促使高丽王朝灭亡。

到了明清交替时，刚开始朝鲜朝在明和后金间实行中立的外交政策，但后来“仁祖反正”后，实行亲明排金政策，为此，后金到清初，有了两次对朝鲜的征伐。

这些历史证明，朝鲜与中国的关系，虽然自唐中叶以来同在一里，但它经常受中国政局的影响，几乎每次改朝换代时都要经历阵痛，而后编入新的体系中。但归根结底，这些阵痛都是以维护其旧的体系或建立新的体系为目标而引发的冲突。这种维护旧体系建立新体系的努力最终还是以中国为中心的新的体系所替代。尽管朝代不同，但其礼治体

2) 黄枝连: 《东亚的礼仪世界-----中国封建王朝与韩半岛关系形态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4年, 第27页.
3) 同上书, 第109页.
4) 同上书, 第183页.

系的性质没有发生本质的变化。一旦体系确立，双方都为维护其体系而努力。作为体系的中心国，中国更是把这种体系看作是王朝利益的一部分。[5)]

但是到了近代，随着中国开始沦为半殖民地半封建社会，国际地位急剧下降，“天朝礼治体系”名存实亡，加上列强开始涉足韩半岛，中国与韩半岛关系也发生了很大的变化。1880年代初，清朝驻日公使馆参赞黄尊宪在《朝鲜策略》中，劝朝鲜注意提防俄罗斯，为牵制俄罗斯，朝鲜要“亲中国，结日本，联美国”。就像1881年朝鲜儒生万人上诉中惊呼的那样已经是“上国不能令天下”，在当时的中国看来，朝鲜问题已非中国一国所能左右，中国开始在复杂的国际关系中考虑与朝鲜的关系了。

之后展开的历史表明，步入近代史以后，在中国周边国中，影响中国政局最深的便是韩半岛。1894年，始于韩半岛的“甲午中日战争”，导致以中国为中心的东亚国际秩序崩溃，中国退出朝鲜舞台，中国与韩半岛开始形成为“唇亡齿寒”的关系。1905年，也是始于韩半岛的“日俄战争”将使日本加速吞并朝鲜的步伐，并以朝鲜为脚踏板侵略中国大陆。1950年发生的“韩国战争”，导致中国付出沉重的代价，失去解放台湾的机会，并与以美国为首的西方世界隔绝数十年。

从历史的经验看，韩半岛稳定与否，韩半岛能否成为独立自主国家，直接关乎中国的安全，也关系到东北亚地区的和平与安定。这既是历史的总结，也是对未来的展望。

战后韩半岛问题的历程与中国

战后美国和苏联为争夺势力范围，人为地分割韩半岛，韩半岛南北政治势力最终走向了分裂。对战后的韩半岛最为关注的应是中国，中国经历甲午中日战争、日俄战争、中日战争深刻认识到韩半岛地缘政治的重要性。二战时期，中国的国共两党各自扶持自己支持的韩半岛独立运动势力，开始构思和安排战后的韩半岛与中国关系。而战后美苏把韩半岛纳入自己的战略范围，又一次提升韩半岛地缘政治意义，这是中国本所不愿意看到的，也是最为担心的地缘政治环境。这最终导致中国之后被卷入韩国战争，与西方阵营进行长达几十年的冷战。

而1948年南北韩各自建立政府的时候，双方的目的并非在于保持均势，维持现状。双方都不能容忍具有几千年历史的统一国家就此分裂，统一自然成为双方追求的至高无上的目标。南北双方所持的强烈的统一愿望，使得南北关系成为“零和关系”。南北都把

5) 参见金景一：“中国参加朝鲜战争的起源”，2005年，论衡出版

对方看作是“非法团体”或“傀儡集团”，朝鲜提出实现统一的“国土完整论”，韩国则提出恢复失地的“北进统一论”。[6] 甚至朝鲜在宪法里把首尔定为首都直至1970 年代修改宪法。朝鲜战争就是这种“零和关系”带来的热战。冷战时期，朝韩双方展开了另一个“零和博弈”，即所谓的“体制竞争”。某种意义上讲，朝韩双方在冷战时期力量对比发生变化也与此有关。

由于朝韩处于“零和关系”，即便是在冷战时期双方就统一问题展开了漫长的博弈。朝鲜战争结束后的第二年，日内瓦会议就和平解决韩半岛问题进行过讨论。分属美苏两个阵营的朝鲜和韩国，也发表过各自的建立统一政府的方案。但是，南北双方发动的和平攻势，实际上重复了朝鲜战争前各自所持的立场，双方都还是想用自己的方式统一对方。表面上看，1950年代有关韩半岛和平统一的争论是围绕着如何建立统一政府的问题展开的，但它本质上是零和博弈，双方实际上并未放弃武力统一的方针。

到了1960-1970年代，南北双方进入上述的所谓“体制竞争”，展开了另一种方式的“零和博弈”，双方在经济建设、国防建设等方面展开激烈的竞争。韩国的朴正熙政府提出了“先经济，后统一”的方针，朝鲜则提出“经济与国防并进”的方针。可以说，韩国朴正熙政府实现“汉江奇迹”，重要动力来自朝韩的“零和博弈”。朝韩双方，一方面加强经济建设，另一方面摸索着另一种性质的“统一”。朝韩在1972年签订“7.4共同宣言”，首次提出和平统一的三大原则。这是一个具有划时代意义的宣言，它表明朝韩双方开始放弃“武力统一”的方针，开始摸索着“和平共处”。[7] 同一年，朝鲜提出朝美是朝鲜战争实际上的当事者，并首次提出与美国签订“和平协定”。[8] 尽管如此，在美苏冷战的大格局下，南北的真正和解、朝美间的关系正常化，由此实现和平统一是超现实的，它只是反映了另一种形式的对抗。

冷战结束之后，影响韩半岛和平进程的美苏对抗消失，随着俄罗斯与韩国、中国与韩国建交，冷战时期的所谓“北方三角”解体，但美日韩的“南方三角”一直与朝鲜处在对抗状态，形成了残存的“冷战结构”。在南北对决中，处在劣势的朝鲜急欲摆脱“冷战结构”，加速了与美日韩改善关系的和解步伐。它包括，与美国进行高方会谈，与日本进行8次邦交正常化谈判，与韩国签署“南北基本合意书”和“韩半岛无核化宣言”，南北又同时加入联合国，似乎韩半岛冷战结构解冻在即。但是，第一次朝核危机的爆发，把和平氛围一扫而光，韩半岛重又乌云密布，重又走近战争的边缘。

第一次朝核危机反映了一个问题，即朝鲜要摆脱冷战阴影，与韩国和平共处，并非只

6) 参见金景一：《中国参加朝鲜战争的起源》，2005年，论衡出版
7) 金景一：“韩半岛和平机制的构筑与展望”，《北韩学研究》，创刊号，2005年，p.9
8)《人民日报》，1974年3月26日

是韩半岛南北间的问题，它牵涉到韩半岛周边大国的利益关系，尤其牵涉到美国在本地区的战略利益。冷战结束后，美国继续加强冷战时期的“南方三角”即美日、美韩同盟关系，继续在朝鲜问题上做文章，是出于自身的战略利益考量的，它所针对的不仅仅是朝鲜。对美国而言，和平解决韩半岛问题，意味着美国在本地区最重要的支撑点消失，也许它会成为美国退出本地区事务的前奏。而1994年美朝间签订的“日内瓦协议”，美国是基于两方面考虑签订的，一是，美国希望朝鲜“软着陆”，二是，判断朝鲜即将崩溃。但对朝鲜而言，“日内瓦协议”是鼓舞人心的，是具有划时代意义的成果。朝鲜立即提出，为了履行该协议，朝美之间签订“临时协定”，以取代“停战协定”。此时，对朝鲜而言，1953年签订的“停战协定”，只是朝美间签订的协定而已。朝鲜执意要把“停战协定”转换成“和平协定”，并执意只跟美国谈，其用意显然也还是在与美国改善关系上。

这一时期美韩建议召开四方会谈，以讨论建立和平机制问题，值此中国重又开始参与有关韩半岛问题的国际协商。而当时，中国尽管已与韩国建立外交关系，并与韩国保持良好的政治关系，但中国在政治上还是倾斜朝鲜。在四方会谈中，中国主张有关各方结束对抗，改善关系，和平共处，使半岛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敦促各方以和平手段解决一切争端，在平等互利原则基础上发展交流与合作，建立军事信任措施，分阶段裁减军备。[9] 四方会谈先后召开6次，但美朝韩三方各自的目的不同，朝鲜重点放在与美国的对话上，采取所谓“通美封南”政策，韩国则利用四方会谈的机会欲与朝鲜展开双边对话，美国则由此掌握在韩半岛问题上的主动权，也并没有急于促成朝韩改善关系。四方会谈最终不了了之，与这几个国家追求的目的不同不无关系。

如同第一次核危机发生在韩半岛南北关系出现缓和、朝日关系有解冻迹象之际，第二次核危机爆发，也正值首次朝韩高峰会谈和朝日高峰会谈先后举行，朝鲜的外交战略重点从美国转向更为积极的全方位外交。但美国极不愿意朝韩、朝日关系在美国设定的框架外得到改善。美国要关起与朝鲜改善关系的大门解决朝核问题。但是发生9.11事件之后，美国开始在朝核问题上与中国探索合作，中国也开始积极介入地区事务，可以说中美合作演绎出六方会谈机制的产生。中、美、俄、日及南北朝鲜坐在一起讨论互相关心的问题，六方会谈开了地区历史之先。在这里，朝核问题是“媒介”，动力则是各方利益关系的互动。从东北亚建立新的秩序的角度而言，六方会谈实际上就是为和平建立东北亚新秩序而各方进行较量的平台。可以说，冷战结束后东北亚新秩序的建立是以解决朝核问题为契机拉开了序幕。而标志六方会谈最辉煌成果的“9.19共同宣言”则勾画出

9)《光明日报》，1999年1月24日

东北亚新秩序的轮廓，谈到了以和平方式实现韩半岛无核化；朝美、朝日采取步骤实现关系正常化；通过双边和多边方式促进能源、贸易及投资领域的经济合作；共同致力于东北亚地区持久和平与稳定；建立韩半岛永久和平机制；加强东北亚安全合作。由此可见，如同近代史以来韩半岛一直成为东北亚秩序变化的震源一样，此次东北亚新秩序的建构也还以韩半岛为核心区域展开。但是与以往的战争方式不同，东北亚要以和平方式建构新秩序，这就需要漫长的反复和磨合过程。东北亚新秩序以朝核问题为媒介，以六方会谈为载体进行磨合，各种因素都有可能对朝核问题的解决设置障碍，韩半岛统一进程及东北亚新秩序的进程也由此遭受重创。

朝核问题的根源之一就是美国一直把韩半岛纳入自己的战略范围，把韩半岛作为其东亚战略的支撑点，维系韩半岛冷战结构。所以说，朝核问题折射反映着东北亚大国关系，是东北亚国际政治的缩影。实际上朝核问题已经超出“朝核”本身，也超出“朝美关系”范畴，它引出的是“大国关系”的互动，六方会谈正是这一互动的结果。所以要解决引发朝核问题的根源，就需要大国关系在“磨合”过程中逐步消除其战略在韩半岛的互动，逐渐淡化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

而这些进程是在各方力量的较量中展开，有时要经历相当激烈的较量，有时要经历艰难的磨合。如今六方会谈空转多年，正是反映其较量与磨合的艰难。朝鲜先后进行三次核试验，使朝核问题一次次进入新的困境。第三次核试验更是引发东北亚地区新的动荡，韩半岛经历韩国战争以来最为严重的危机。而中日关系、韩日关系、朝韩关系、朝美关系、朝日关系日趋紧张，表明朝核问题的解决与东北亚国际政治的运行是联动的。朝核问题引发的危机影响东北亚国际关系，东北亚国际关系又影响朝核问题的解决。东北亚由此进入新一轮的较量和磨合。

韩半岛统一进程的走向与中国

韩半岛的分裂是在美苏外因和南北内因相互作用下形成的，因而韩半岛问题本身既是南北问题，又是国际问题。南北关系和国际关系交错着形成相互影响、相互作用的互动关系。而南北关系紧张的时候，与之相对应的国际关系也发生变化。“天安舰事件”和“延坪岛炮击事件”时，韩国与中国的关系陡然紧张就是一例。而南北关系走向缓和的时候，围绕着韩半岛南北也发生国际关系的变化。众所周知，两次朝核危机都发生在南北关系走向缓和的时候。就此意义上讲，韩半岛走向统一，它既是朝韩间和解的问题，

又是国际关系重新调正定位的问题。

纵观近代史以来的韩半岛历史，我们不难发现韩半岛问题的核心在于韩半岛在各个时代所具有的“地缘政治”意义上。我们所理解的地缘政治意义不是“静态”的，而是“动态”的，它指的是“某些地理环境进入某些国家战略目的的框架或视野而显现的价值”，可理解为“自然因素和人为因素的有机结合”一个区域显现所谓的地缘政治意义,与人类发展的时代、该区域的政治状况、国家间战略指向的冲突状态等因素相关。[10] 也就是说，自近代以来，韩半岛进入诸列强战略目的的框架或视野，因而其地缘政治意义凸显，也因而演绎出一幕幕大国间的冲突和战争。19世纪末，俄罗斯为从远东进入太平洋制定南下战略，韩半岛由此进入俄罗斯战略的框架之中；日本为侵略中国大陆，制定“北进战略”，韩半岛也进入日本战略的框架之中，成为日本侵略中国大陆的脚踏板；中国为维护在韩半岛的传统地位，把韩半岛纳入到自己的战略之中；连远在欧洲的英国也为遏制俄罗斯南下出兵占领韩半岛的巨文岛。至此，至少俄、日、中三国的战略框架交汇在韩半岛，演绎出“甲午中日战争”、“日俄战争”。而二战结束后的韩半岛悲剧则始于韩半岛进入美苏战略利益的框架。美苏为各自的战略人为地分割占领韩半岛，最终导致韩国战争和六十多年的分裂。

冷战结束之后，韩半岛重又成为东北亚国际政治的焦点，其源于大国战略依旧停留在韩半岛。至少对美国来讲，韩半岛是其推行东亚战略的支撑点。如美国欲利用这一支撑点强化美日、韩美同盟以牵制正在崛起的中国，那么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还会凸显。实际上当今的东北亚国际政治就是如此展开的。而大国战略能够在韩半岛得以施展，关键在于韩半岛还处在分裂状态，为大国提供介入空间。而如果韩半岛得以实现统一，大国的战略就很难在韩半岛落脚，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将呈现出明显的弱化或消失。[11] 就此意义上讲，韩半岛的和平统一进程将对中国非常有利。因为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越凸显，越会限制中国在东北亚的发展空间。冷战时期是这样，如今也是如此。 美国依托韩半岛这一支撑点强化美日同盟、美韩同盟，又执意促成“韩日军事协定”，对中国将形成巨大的压力。在“天安舰事件”和“延坪岛炮击事件”后美国以震慑朝鲜为由，把第7舰队开进被外界称为“中国最碰不得的地方”黄海，美国搞黄海航母威慑，有人甚至怀疑“项庄舞剑”真实意图别有所指。由此可见，韩半岛地缘政治意义的凸显显然有利于美国施展其战略，对中国而言，它会重复近代史以来拖累中国、危及中国核心利益的局面。

10) 金景一、金强一：“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及其对我国的影响研究”，《中国外交》，2008年第11期，p.38
11) 同上，p.42

如前所述，近代以来韩半岛问题的核心是“韩半岛地缘政治意义”的强化和凸显，而解决韩半岛问题的核心应该是淡化“地缘政治意义”使得它逐渐消失。而韩半岛地缘政治意义最终的淡化和消失，是要通过韩半岛的和平统一去完成。而对中国而言，韩半岛最理想的状态便是“地缘政治意义淡化和消失的状态”，也就是说，一个稳定的、和平的、统一的韩半岛最符合中国的国家利益。[12)]

过去我们讲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讲的多的是海洋势力与大陆势力在韩半岛的交错、冲突甚至是战争。而我们要淡化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讲的多的应是“海洋经济圈”与“大陆经济圈”以韩半岛为桥梁得以汇合、融合、发展。也就是说要大讲特讲韩半岛的“地缘经济意义”。凸显韩半岛的“地缘经济意义”，实际上就是凸显合作、共赢、发展。可以说，韩半岛的和平统一进程就是淡化“地缘政治意义”，凸显“地缘经济意义”的过程。

“地缘经济意义”与“地缘政治意义”不同，“地缘政治意义”强调综合国力的对抗和博弈，而“地缘经济意义”强调利用地缘经济手段去摸索国家利益和国际关系。如今世界趋势是地缘政治向地缘经济转换，对经济利益的需求超过政治、军事和意识形态。[13)] “地缘经济的角逐”也正替代“地缘政治的角逐”。[14)] 凸出韩半岛“地缘经济意义”符合世界发展的趋势，也符合朝韩逐渐淡化“地缘政治意义”，在经济交流与合作中实现双赢。

谈到韩半岛和平统一的进程，其主体是韩半岛的韩国和朝鲜。朝韩是韩半岛问题的内因，别的国家只是外因，外因是通过内因起作用。中国一直主张，韩半岛问题要由朝韩对话解决。朴槿惠总统访华时习近平就表示，“中方欢迎朴槿惠总统提出的“半岛信任进程”构想，支持南北改善关系，实现和解合作，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15)] 而朴槿惠总统提出的“半岛信赖进程”能否取得成功，很大程度上取决于南北经济交流与合作。

如前所述，朝韩关系本质上就是“零和关系”，靠“零和关系”实现“政治信赖、军事信赖”非常艰难。加上朝韩体制不同，难上加难。即便是建立了一定的“信赖关系”，随着政权交替，也有可能前功尽弃。金大中、卢武铉政府与朝鲜建立的“信赖关系”，到了李明博政府一扫而光便是一例。但是，经济合作就不同。经济本身就是基于信赖运作，无信不立。以朝韩共建的开城工团为例，在李明博政府时期，南北关系

12) 同上，p.44
13) 韩银安：〈浅析地缘经济学〉，《外交学院学报》，2004年3月总第75期，第73页。
14) 韩银安：《浅析地缘经济学》，外交学院学报，2004年3月，第70页。
15) 新华社，2013年6月28日

一触即发，但工团却安然无恙。到了朴槿惠政府，开城工团濒临关停，但朝韩还是鼎力挽救，表明政权交替会影响政治关系、军事关系，但经贸关系有可能保持连续性。可以说，实现“半岛信赖进程”，最好的切入点便是经济合作。

凸显韩半岛“地缘经济意义”，对中国而言，可以使进入振兴进程的东北地区经济得到巨大的弹力，而且也将极大地激活日本和俄罗斯等周边大国参与东北亚区域经济活动的欲望，届时东北亚区域大规模经济合作或国际性高层次合作体系的建构将具备现实的可操作性，中国也有可能接近所设定的战略目标。[16]

在韩半岛和平统一进程中，恢复和发展朝鲜经济是至关重要的一环，某种意义上讲，朝鲜经济发展与否决定韩半岛和平统一进程能否顺利进行。要扶持朝鲜的市场经济因素，促使朝鲜融入到国际社会。促使朝鲜变化，还是需要淡化地缘政治的因素，更多地讲地缘经济的因素，而且要更多地讲靠自律的变化。如果对朝政策里多了地缘政治的因素，那么讲的更多的是可能是施压、制裁、对抗甚至是冲突。 而如果从地缘经济角度靠近朝鲜，讲的更多的可能是交流、合作、双赢和发展。[17] 近年来中国按照“政府引导、企业为主、市场运作、互利共赢”的原则，进一步深化在贸易、投资、基础设施建设、资源开发利用、农业等领域，与朝鲜的务实合作，就是强化地缘经济的因素。

今年朝鲜在强行第三次核试验后提出“核武与经济建设并进”的路线。过去朝鲜曾在1960年代提出过“国防建设与经济建设并进的路线”。说是并进，但朝鲜是向国防建设倾斜的，朝鲜的军费开支在国民生产总值中所占的比重剧增，从1961年的2.8%提高到1967年的30.4%。而今朝鲜重又提出“核武与经济的并进路线”，但两者相互制约，难以并进。搞“核武”需要对抗的紧张局面，“经济建设”则需要合作的稳定局面，两者不相容，朝鲜只能倾斜某一方。就目前局势而言，朝鲜当务之急是发展经济，朝鲜也有动力凸显半岛的“地缘经济意义”。而朝鲜自2000年以来把国家的战略重心逐步转移到经济建设上，到了金正恩时代更是凸显经济建设的重要性。但是朝核问题成为挡住经济发展的拦路虎，朝鲜所处的国际环境，使朝鲜难以具备经济建设所必需的各种因素，实现“经济强国”目标困难重重。

朝鲜进行第三次核试验后，中国赞成联合国安理会对朝鲜的制裁决议并认真加以履行。外界尤其是韩国的主流媒体很多认为中国的对朝政策发生质的变化。有的认为，李明博政府的对朝政策之所以未能见效，是因为中国的对朝政策没有变，而如今中国有了变化，所以即便是同样的政策效果却不同。在他们看来，朝鲜从制造危机突然转向对

16) 同注释12，p.45

17)

话，与中国的变化不无关联。有的专家甚至主张，中国已同意韩国主导的统一。似乎韩国的对朝政策是基于中国的对朝政策而制定。 如何正确解读中国的对朝政策，防止判断失误和误判是目前中韩关系中解决的一个重要课题。

中国的对朝政策发生一些变化是事实。但它是对朝鲜进行第三次核试验的反应式变化。所以中国的这种变化很难说是一些韩国学者讲的那种战略上的变化。将来朝鲜再而三进行核试验的话，中国的对朝政策还有发生变化，也许会发生所说的质的变化。在解决朝核问题上与美国不同，中国主张通过对话和谈判加以解决。中国不会像有些韩国学者期待的那样，与韩国携手对朝施加压力让它就范。对韩半岛统一问题，正像今年六月份习近平主席同朴槿惠总统会面时讲的那样，中国是一如既往支持南北实现自主和平统一的。中国主张自主和平统一，强调两点，一是，强调统一的过程必须是和平的，反对用武力方式；二是，统一必须是自主的，反对外来势力主导统一进程。

自1840年的鸦片战争，中国沦落到半封建半殖民地地步，被称为“东亚病夫”。近一个半世纪，东亚及韩半岛没见过繁荣强盛的中国。而韩半岛则在20世纪初被沦落为日本殖民地，战后又分裂成南北至今未能统一。也就是说，一个多世纪以来，东亚及中国没见过自主的或统一的韩半岛。而今中国正崛起，韩半岛进入统一进程，双方正在体验近代以后未曾体验的经验，免不了相互间感到一种“威胁”或“担心”，这就需要重新定位双方关系。

如同前述，历史上强大的中国对韩半岛没构成威胁，反而混乱而贫弱的中国危及韩半岛的政局。同样统一的韩半岛对中国不是威胁，分裂的韩半岛才危及中国的安全。崛起的中国与统一韩半岛的关系是东北亚地区最为稳定的双边关系，两国关系的正确定位将对东北亚新秩序的构筑产生巨大的正能量。

对于韩半岛统一的中国的认识和对应 (摘要)

金景一 (北京大学)

自近代史以来，东北亚国际秩序的几次变化都是通过战争完成的。1894年的“中日甲午战争”导致以中国为中心的东亚秩序崩溃，1905年的“日俄战争”成为日本建构所谓“大东亚共荣圈”秩序的开端，1950年的“朝鲜战争”则固定了东北亚冷战秩序的格局。而这些战争都始于或发生在韩半岛，并且对中国政局产生深远的影响。

而纵观近代史以来的韩半岛历史，我们不难发现韩半岛问题的核心在于韩半岛在各个时代所具有的“地缘政治”意义上。我们所理解的地缘政治意义不是“静态”的，而是“动态”的，它指的是“某些地理环境进入某些国家战略目的的框架或视野而显现的价值”，可理解为“自然因素和人为因素的有机结合”一个区域显现所谓的地缘政治意义,与人类发展的时代、该区域的政治状况、国家间战略指向的冲突状态等因素相关。也就是说，自近代以来，韩半岛进入诸列强战略目的的框架或视野，因而其地缘政治意义凸显，也因而演绎出一幕幕大国间的冲突或战争。19世纪末，俄罗斯为从远东进入太平洋制定南下战略，韩半岛由此进入俄罗斯战略的框架之中；日本为侵略中国大陆，制定“北进战略”，韩半岛也进入日本战略的框架之中，成为日本侵略中国大陆的脚踏板；中国为维护在韩半岛的传统地位，把韩半岛纳入到自己的战略之中；连远在欧洲的英国也为遏制俄罗斯南下出兵占领韩半岛的巨文岛。至此，至少俄、日、中三国的战略框架交汇在韩半岛，演绎出“甲午中日战争”、“日俄战争”。而二战结束后的韩半岛悲剧则始于韩半岛进入美苏战略利益的框架。美苏为各自的战略人为地分割占领韩半岛，最终导致韩国战争和六十多年的南北分裂。

冷战结束之后，东北亚重又进入新秩序的构建期，而东北亚构建的新秩序依旧以韩半岛为核心区域展开，其渊源在于大国战略依旧停留在韩半岛。至少对美国来讲，韩半岛是其推行东亚战略的支撑点。如美国欲利用这一支撑点强化美日、韩美同盟以牵制正在崛起的中国，那么对中国而言，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依然重要。而大国战略能够在韩

半岛得以施展，原因在于韩半岛还处在分裂状态，为大国提供介入空间。而如果韩半岛得以实现统一，大国的战略就很难在韩半岛落脚，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将呈现出明显的弱化或消失。而韩半岛地缘政治意义最终的淡化和消失，是要通过韩半岛的和平统一去完成。对中国而言，韩半岛最理想的状态便是“地缘政治意义淡化和消失的状态”，也就是说，一个稳定的、和平的、统一的韩半岛最符合中国的国家利益。

过去我们讲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讲的多的是海洋势力与大陆势力在韩半岛的交错、冲突甚至是战争。而我们要淡化韩半岛的“地缘政治意义”，讲的多的应是“海洋经济圈”与“大陆经济圈”以韩半岛为桥梁得以汇合、融合、发展。凸显韩半岛的“地缘经济意义”，实际上就是凸显合作、共赢、发展。可以说，韩半岛的和平统一进程就是淡化“地缘政治意义”，凸显“地缘经济意义”的过程。

“地缘经济意义”与“地缘政治意义”不同，“地缘政治意义”强调综合国力的对抗和博弈，而“地缘经济意义”强调利用地缘经济手段去摸索国家利益和国际关系。如今世界趋势是地缘政治向地缘经济转换，对经济利益的需求超过政治、军事和意识形态。“地缘经济的角逐”也正替代“地缘政治的角逐”。凸出韩半岛“地缘经济意义”符合世界发展的趋势，也符合朝韩逐渐淡化“地缘政治意义”，在经济交流与合作中实现双赢。

谈到韩半岛和平统一的进程，其主体是韩半岛的韩国和朝鲜。中国一直主张，韩半岛问题要由朝韩对话解决。朴槿惠总统访华时习近平就表示，“中方欢迎朴槿惠总统提出的“半岛信任进程”构想，支持南北改善关系，实现和解合作，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而朴槿惠总统提出的“半岛信赖进程”能否取得成功，很大程度上取决于南北经济交流与合作。如前所述，朝韩关系本质上就是“零和关系”，靠“零和关系”实现“政治信赖、军事信赖”非常艰难。加上朝韩体制不同，难上加难。但是，经济合作就不同。经济本身就是基于信赖运作，无信不立。以朝韩共建的开城工团为例，在李明博政府时期，南北关系一触即发，但工团却安然无恙。到了朴槿惠政府，开城工团濒临关停，但朝韩还是鼎力挽救，表明政权交替会影响政治关系、军事关系，但经贸关系有可能保持连续性。可以说，实现“半岛信赖进程”，最好的切入点便是经济合作。

凸显韩半岛“地缘经济意义”，对中国而言，可以使进入振兴进程的东北地区经济得到巨大的弹力，而且也将极大地激活日本和俄罗斯等周边大国参与东北亚区域经济活动的欲望，届时东北亚区域大规模经济合作或国际性高层次合作体系的建构将具备现实的可操作性，中国也有可能接近所设定的战略目标。

在韩半岛和平统一进程中，恢复和发展朝鲜经济是至关重要的一环，某种意义上讲，

朝鲜经济发展与否决定韩半岛和平统一进程能否顺利进行。要扶持朝鲜的市场经济因素，促使朝鲜融入到国际社会。促使朝鲜变化，还是需要淡化地缘政治的因素，更多地讲地缘经济的因素，而且要更多地讲靠自律的变化。如果对朝政策里多了地缘政治的因素，那么讲的更多的是可能是施压、制裁、对抗甚至是冲突。 但是从地缘经济角度靠近朝鲜，讲的更多的可能是交流、合作、双赢和发展。近年来中国按照“政府引导、企业为主、市场运作、互利共赢”的原则，进一步深化在贸易、投资、基础设施建设、资源开发利用、农业等领域，与朝鲜的务实合作，就是强化地缘经济的意义。

朝鲜进行第三次核试验后，中国赞成联合国安理会对朝鲜的制裁决议并认真加以履行。外界尤其是韩国的主流媒体很多认为中国的对朝政策发生质的变化，有的认为，李明博政府的对朝政策之所以未能见效，是因为中国的对朝政策没有变，而如今中国有了变化，所以即便是同样的政策效果却不同。

中国的对朝政策发生一些变化是事实。但那是对朝鲜进行第三次核试验的反应式变化。在解决朝核问题上与美国不同，中国主张通过对话和谈判加以解决。中国不会像有些韩国学者期待的那样，与韩国携手对朝施加压力让它就范。对韩半岛统一问题，正像今年六月份习近平主席同朴槿惠总统会面时讲的那样，中国是一如既往支持南北实现自主和平统一的。中国主张自主和平统一，强调了两点，一是，强调统一的过程必须是和平的，反对用武力方式统一；二是，统一必须是自主的，反对外来势力主导统一进程。

韩半岛的统一终究要解体韩半岛冷战结构，淡化“地缘政治意义”，凸显“地缘经济意义”，使“消极的和平”变为“积极的和平”，变“不确定因素”为“确定因素”。对中国而言，韩半岛的统一将意味着近代以来一直影响中国的韩半岛问题彻底得到解决，韩半岛名副其实地成为海洋经济圈与大陆经济圈的连接点，中韩合力为东北亚区域经济一体化，为东北亚新秩序的构建发挥巨大的正能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요약)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과 중국

진징이 (金景一, 북경대)

근대사이래, 동북아 국제질서의 몇 차례의 변화는 모두 전쟁을 통해 완성된 것이었다. 1894년의 "중일갑오전쟁"이 초래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질서 붕괴, 1905년의 "러일전쟁"은 일본이 만든 "대동아공영권"의 시작이 되었고, 1950년의 "조선전쟁"은 동북아냉전질서의 구조를 공고히 했다.

이런 전쟁은 모두 한반도에서 시작, 발생했고 중국 정치 국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근대사 이래의 한반도 역사를 역사적으로 관찰할 때 우리는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각 시대에 있었던 "지연주의"내 한반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는 지연정치의의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것이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지리환경이 어떤 국가전략목표의 틀이나 시야에서 진입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치"라는 것이다. "자연요소와 사람이 요소가 되는 유기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드러나는 지연정치의의라고 불리는 것은 인류발전의 시대, 그 구역 정치상황, 국가간 전략지향적인 충돌상태 등 요소와 관계 있다.

곧, 근대이래, 한반도는 모두 열강전략목적의 틀이나 시야에 진입했고, 그 지연정치의의는 부각되었는데 그런 까닭에 묵묵히 대국간의 충돌, 전쟁이 전개된 것이다.

19세기말, 러시아는 먼 동쪽에서 태평양이 지정한 남하전략에 진입했는데, 한반도는 이에 근거하여 러시아 전략의 틀에 진입했다. 일본은 중국대륙을 침략했고 "북진전략"을 제정했는데 한반도 또한 일본전략의 기본틀에 진입해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한 발판이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 내의 전통지위를 유지해서 한반도를 자신의 전략 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유럽의 영국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와 출병해 한반도와 거문도를 점령하는 것을 제지했다. 여기에 이르러 최소한 러시아, 일본, 중국 삼국의 전략의 기본틀은 한반도에서 합류해 "갑오중일전쟁" "러일전쟁"등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한반도 비극은 곧 한반도가 미소전략의 이익의 기본 틀에 진입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전략인은 지분을 한반도 점령함으로 나누고 최종적으로 한국전쟁과 60년이 넘는 남북분열을 초래했다.

냉전이 끝난 후에, 동북아는 반복적으로 새 질서 형성기에 진입했고 동북아가 만든 새로운 질서는 여전히 한반도가 핵심구역이 되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국전략이 여전히 한반도에 멈추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미국으로 말하자면 한반도는 동아시아전략을 수행하는 지지대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미일, 한미동맹을 강화해 솟아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면, 중국입장에서 한반도의 지연정치적 의의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대국전략은 한반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원인은 한반도는 아직 분열상태에 머물러있고, 대국이 개입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대국의 전략은 한반도에서 발걸음을 멈추기 힘들 것이고 한반도의 지연정치의의는 명확하게 약화, 소실될 것이다.

한반도지연정치의의는 최종적으로 약해지고 소실되는 것은 한반도의 화평통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중국으로 말하자면 한반도가 가장 이상정인 상태는 "지연정치의의약화 및 소실의 상태"이고 곧 하나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이고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과거의 우리는 한반도의 지연정치의의에 관해 이야기한 적 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한반도에서 교차, 충돌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했던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연정치의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많이 이야기 되어야 할 부분은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이 한반도가 다리가 되어 회합, 융합, 발전했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반도의 "지연경제의의"는 실제로 명확한 협력, win-win, 발전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화평통일과정은 "지연정치의의"를 약화시키고 "지연경제의의"의 과정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연경제의의"와 "지연정치의의"는 다르고, "지연정치의의"는 종합국력의 대항과 게임을 강조하고 "지연경제의의"는 지연경제수단을 이용해서 국가이익과 국가관계의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 세계 추세는 지연정치가 지연경제로 전환되고 있고 경제이익의 수요는 정치, 군사, 의식형태를 초월한다.

"지연경제의 각축" 또한 "지연정치의 각축"을 대체한다. 한반도 "지연경제의의"는 세계발전추세와 부합하고 남북이 점진적으로 "지연정치의의"를 약화시키는 것에 부합한다. 경제교류와 협력 중 win-win을 실현하면서 한반도평화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하면 그 주체는 한반도와 조선이다. 중국은 한반도문제는 남북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누차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방중 시기 시진핑은 "중국측은 박근혜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환영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지지하고 화해협력을 실현해 최종적으로 자주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공할지 여부는 남북경제교류와 합작에 달려있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남북관계는 본질상 "Zero-Sum관계"이고 "Zero-Sum"에 의거해서 "정치신뢰, 군사신뢰"를 실현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남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합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경제합작은 다르다.

경제 자체는 운행을 신뢰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불신하면 경제가 설 수가 없다. 북한 남한이 공동으로 건축한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 이명박정부 시기 남북관계 일촉즉발상황에서 공단은 평화 무상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개성공단은 자주 문을 닫았다. 그러나 남북은 여전히 힘껏 구제했고 정권교체가 정치관계, 군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표명했다. 그러나 경제무역관계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합작이다.

한반도의 "지연경제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중국으로 말하자면 진흥과정의 동북지역경제에 진입해서 거대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대국이 동북아구역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고 그 때가 되어 동북아구역대규모경제합작이나 국제성이 높은 단계합작체제의 구축이 현실의 조작성을 구비할 수 있게 하고 중국 또한 설정한 전략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한반도 화평통일과정 중, 회복과 북한경제를 발전 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환인데, 어떤 의의에서 설명하자면 북한경제발전 결정여부는 한반도화평통일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결정된다. 북한의 시장경제요소를 돕는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융합되는 것을 촉진 시킬 수 있다

한반도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지역정치의 요소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연경제요소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자율적인 변화할 수 있게 한다.

만약에 북한정책안에 지연정치의 요소가 더 많다면 더 많이 이야기 될 것은 압력, 제재, 대항, 충돌일 것이다.

그러나 지연경제의 측면에서 북한에게 있어 더 많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 부분은 교류, 합작, win-win, 발전이다.

근래에 중국은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의 원칙에 입각해서 무역, 투자, 기초설비시설, 자원개발이용, 농업 등의 영역과 북한의 실무합작을 심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연경제의 의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제 3차 실험 후에 중국은 연합국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제결의안에 찬성하고 열심히

실행했다. 외부세계 특히 한국의 주류매체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현재 중국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대북정책 중 변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것에 대한 반응식 변화이다.

북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과 다르고 중국은 대화와 담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중국은 어떤 한국학자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한국과 손잡고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그가 복종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올해 6월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중국은 지난 날과 다름없이 남북자주화평통일을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자주평화통일을 주장하고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통일하는 과정은 평화로워야 하고 무력방식의 통일에 반대하고 둘째는 통일은 자주적이고 외래세력이 통일과정을 주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결국 한반도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지연정치의의”를 약화시키고 “지연경제의의”를 드러내서 “소극적인 평화”를 “적극적인 평화”로 변화시키고 “불확실한 요소”를 “확실한 요소”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으로 말하자면 한반도의 통일은 근대이래 지속적으로 중국의 한반도문제에 영향을 미쳐 철저하게 결정된 것이고 한반도는 명실상부하게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연결점이 되며 동북아신 질서의 형성은 거대한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중한이 힘을 합쳐 동북아시아구역 경제일체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안정: 비전과 과제

전재성 (全在晟, 서울대)

I. 서론

한반도 통일은 남과 북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사건이기도 하다.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전략적 동의가 있을 때 더욱 수월하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한국의 통일 전략을 수행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 관계 속에서 한국의 통일이 어떠한 지역적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해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1년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베를린 장벽 이후 동독 내의 변화가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구소련 간의 협상,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국들의 동의가 결국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동북아는 탈냉전 초기의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심화되는 민족주의적, 전략적 갈등의 와중에 놓여있다. 각 국가들은 군비경쟁과 민족주의적 열망 속에서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고, 동북아를 지구적 세력전이의 경쟁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의 분단은 지역적 갈등의 어려움을 체현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모두가 극심한 분단비용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미중 간의 경쟁, 동북아 국가들 간의 민족주의 갈등 속에서 분단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분단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현재의 지역 안보, 경제 구조를 일신하고 새로운 지역협력을 도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적 이익을 살펴보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과 강대국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논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조와 한반도 통일의 총괄적 의미를 우선 살펴보고, 둘째,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이 어떻게 고양될 수 있는지 살펴본 이후에, 셋째,

통일 이후 한반도 외교 전략의 방향설정을 통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현재 어떻게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현재 한국이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조와 한반도 통일의 의미

1.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의 특징

동북아는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갈등성이 높은 지역이다.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갈등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 해묵은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갈등의 지속성도 높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갈등 이슈의 다양성이다. 미중 간의 세력전이, 국가들의 전략적 협력망에서 비롯된 세력균형 경쟁, 다양한 영토분쟁, 북핵 문제, 양안관계 및 남북한 관계, 일본 구제국주의 청산문제, 역사해석을 둘러싼 민족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서구에서 발전된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들로 동북아 국제정치 갈등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각각의 갈등에 관한 중범위 이론의 설명은 가능하되, 문제의 본질을 총괄적으로 꿰뚫고 이를 해결하는 이론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실주의는 국가들 간의 세력과 이익의 경쟁으로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역사문제나 민족주의 갈등은 비단 세력과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주의 이론은 다자적 협력의 제도화 발전 정도가 약한 것을 문제 삼지만,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한 지역과 지구의 제도들을 창출하면서도 제도적 균형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민주화 정도가 높아지더라도 시민사회의 민족주의적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시민사회 간 반목과 충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구성주의 이론은 국가들의 다양한 정체성의 정치에 주목하지만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동북아 국가들의 정체성이 중첩적으로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 내용 있는 가설을 그 자체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는 전형적인 서구 국제정치이론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긴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질서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큰 특징은 근대 이전의 지역질서가 근대 이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했고, 독특한 근대로 정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동북아 근대 질서는 완전하고 단일한 전형적 조직원리를 기반으로 하지 못하였고, 불완전한 이행 과정과 지속적인 전통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동북아 질서의 전통적 원형은 사대질서로서, 하나의 제국 속에 동북아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위계질서였다.[1] 그러던 것이 19세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탈이 일어나고 일본은 스스로가 제국주의적으로 변모하면서, 무정부상태의 근대 조직원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정복과 식민지 복속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동북아 단위들은 주권국가로 재탄생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주권국가들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두 개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 그리고 일본은 모두 완전치 못한 주권국가들이다. 중국은 전통적 사대질서의 역사적 전통을 지닌 공산주의 제국으로 등장한다. 이후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시장사회주의의 정체성을 함께 지녀 결국 전통유교적 중화의 정체성, 공산주의 정체성, 그리고 시장사회주의의 정체성을 함께 지닌 복합국가로 등장하였다. 중국의 자기정체성과 외교정책에는 시진핑 주석이 표방한 바대로 중화의 꿈이 녹아있으며 이는 영토경계설정, 북한과의 당 대 당 관계, 문명의 중심으로 스스로를 설정하는 소프트 파워 외교 등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지구적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의 정체성은 근대 이전부터 이어오는 다양한 정체성의 중첩적 구조에 발을 디디고 있고, 중국인들은 강대국화되는 중국의 미래에 과거 중국을 투영하여 바라보고 있다.

반면 대만은 주권국가로 출범했지만 근대 국가들 간의 세력경쟁, 그리고 냉전이라는 독특한 세력배분구조 속에서 주권성을 상실했다. 양안 관계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생존은 하고 있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서는 주권적 지위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다. 양안관계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로 변모되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단 상황을 새롭게 강화되는 미중의 경쟁논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대만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 속에서 중국이 통일을 통해 서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한다. 중국이 전통적 민족관과 영토관의 관점에서 하나의 온전한 주권국가로 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동북아 국제정치구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단위의 특성이 발생하게 된 원인, 경과 모두가 동북아 지역질서의 역사적 진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아베 정권 하에서 보통국가, 군사대국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한국 정부의 논평처럼 일본이 보통국가화되는 것은 국제연합 가입국가인 주권국가 고유의 권리이며,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협의 속에서 결정해야 할 일본 나름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9세기부터 추구한 제국주의 때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만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근대 이행 과정에서 지나친 성공으로 스스로 제국으로 탈바꿈하였고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 그리고 미국과의 동아시아 지역 경쟁 및 전쟁을 통해 정상적 주권국가의 지위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다. 일본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1) 위계질서에 대해서는 David Lake,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보통국가의 지위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주변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지 못하는 양상은 역사적 전개과정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유럽 근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의 주권성은 국제사회의 동의 속에서 승인 받는 과정을 거쳐 정착되는 것인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이 주권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 때문이다.

결국 21세기 중국과 일본을 보면 제국의 그림자 때문에 주권국가 간 상호존중과 합의에근거한 국제사회의 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전통질서 속의 제국,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주의 속의 부분적 제국성,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대주권국가의 틀 속에서도 비공식적 제국성을 가지고 있다.[2] 일본 역시 과거 제국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보통국가가 된 이후 일본의 행로에 대해 명확한 전략적 계획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19세기 비엔나 체제 이후 근대주권국가 간 관계가 정착한 것은 제국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막힌 이후이다.[3]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비롯한 18세기 말까지의 제국 건설 경쟁이 마무리되고 제국의 포기가 국제사회적으로 인정된 이후에야 근대 주권국가들 간의 국제사회, 즉 무정부상태 속의 사회(anarchical society)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이후에도 근대 국가의 틀 속에서 비공식 제국을 지향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고, 현실에서도 작동하고 있다.[4] 그러나 동북아의 경우처럼 주권국가의 틀조차 완성되지 못한 채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왜곡된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한반도는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갈등과 피해를 입은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스스로 제국성을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채, 주변국들의 제국적 팽창의 대상이 되었고, 대륙과 해양의 각축 속에서 분단의 위기를 수없이 거치면서 결국 근대 국가를 완성하지 못한 채 현재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전통 시대에는 사대질서 하에서 중화의 주변왕조로 존속하였고, 근대 초입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이후 냉전기에는 미소의 비공식 제국 하의 약소국으로 존속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동북아 강대국들 간의 새로운 각축 속에 놓이면서, 한편으로는 근대의 완성과 국제사회 건설이라는 과제,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한 주권국가로 재탄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단위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왜곡되고 완성되지 못한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근대의 완성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5]

2) William A. Callahan, "Remembering the Future – Utopia, Empire, and Harmony in 21st-Century Internation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0, no. 4 (2004). 참조.

3) Paul W. Schroeder,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참조.

4) Jack Donnelly, "Sovereign Inequalities and Hierarchy in Anarchy: American Power and International Soci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2 no. 2 (2006) 참조

5) 전재성,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참조.

2. 한반도 통일의 총괄적 의미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기초한 한민족의 단위라는 개념을 보존해왔다. 1991년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여 남과 북 모두가 국가성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한민족이라는 민족성도 변화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근대적 국가성과 전통적 민족성 간의 긴장과 갈등이 남아있는 한, 통일을 향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동시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탈국가성도 강화되고 있다. 해외 이민이 늘어나고 한국인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시민권에 대한 개념도 변화된 것이다. 혈연적 민족성이 아닌 정치적 시민성을 기준으로 한국인을 정의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한국인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이중국적도 허용되는 등, 한국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범세계시민주의도 확산되어 민족통일에 못지 않게 보편적 시민주의도 강화되고 있다. 탈근대적, 탈국가적 세계질서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구화시대 통일의 의미는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의 통일은 한편으로는 근대 이행의 완성되는 출발점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개념화된 민족의 단위에 기반한 근대국가를 이루고, 이에 따라 국민, 영토, 주권의 개념을 온전히 한 채, 다른 단위들의 통합적 국가성을 승인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전통적 민족과 영토 개념에 근거한 온전한 국민국가를, 일본 역시 제국성을 온전히 탈각하여 비제국적 국민국가를 이룰 때 서로 간의 주권을 인정한 무정부상태적 국제사회, 온전한 근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근대 이행이 완성된 이후에 지역통합, 더 나아가 탈근대적 거버넌스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제국의 그림자를 탈피하지 못한 채 지역통합을 추진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전통 중화질서의 부활,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제국주의 부활의 정당하지 못한 인식과 비판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을 강화하는 각 단위별의 문제가 존속하는 것도 사실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그러한 자족 위에 타국의 주권적 권한을 상호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동북아인들은 성숙한 국제정치적 근대인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통일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한국이 통일되면 모범적 근대단위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한국은 근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혼동할 만한 역사적 경험이나 주변의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이 통일국가가 된다고 해서 동북아에서 팽창을 추구할 수 있는 국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경험적 기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 일본도 온전한 근대적 통일 보통국가로 재정립한다면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겠지만, 주변의 인식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비공식적

제국을 향한 움직임도 버리고 지역통합으로 나아가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새롭게 성립하는 통일 한국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성숙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단위성 문제가 제기되고 타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통일과 보통국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 위에 서로를 인정하는 국제사회가 성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통합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6)]

Ⅲ. 한반도 통일과정과 동북아 지역 협력의 증진

1. 북한 내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한반도 통일 과정은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함과 더불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성격 규정, 향후 지역 국제질서에서의 역할 설정 등 많은 문제들이 함께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하게 될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대략 북한 내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과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두 가지로 설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북한 내 어떠한 급변사태가 가능할 것인지, 급변사태가 과연 통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인지, 그 과정에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환경이 마련될 것인지, 모두가 가능성으로서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첫째, 급변사태의 형태에 관한 문제로 북한 내 급변사태는 집권세력의 실정으로 인한 쿠데타 등의 정권교체, 그리고 주민들의 산발적, 혹은 조직적 운동으로 인한 정치불안과 집권세력 교체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북한 내 급속한 정치변동이 통일로 이어지려면, 한국과의 통합을 원하는 강렬한 주민들의 열망과 이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만약 북한 스스로 일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태를 수습하여 새로운 정권을 세우거나, 북중동맹을 발동하여 중국의 일방적 도움을 원할 경우

6) 동북아 국가들의 통일, 보통국가화가 근대국가의 최초의 건설인지, 혹은 재통일, 재보통국가화인지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재통일과 최초의 근대국가건설이라는 개념상의 문제가 있다. 재통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통일 상태로 회귀한다는 것인데 이때 말하는 통일 상태가 근대 국민국가 이전의 왕조 상태는 아닐 것이므로 우리 역사상 전범이 되는 근대적 통일 국민국가의 상태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 조선왕조를 마감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한 것은 1897년 대한제국이 최초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불과 8년 만인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긴 반식민상태로 전락했고 이후 1910년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고 만다.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으로부터 온전히 국민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반도 영토 전체에 온전한 근대 체제에 기반한 근대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던 대한 제국은 통일 상태의 근대적 한반도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짧고, 불행한 역사를 겪었다. 일제강점기에 수립되었던 임시정부는, 한국민들의 열망을 대표하는 근대국민국가가 아니었다고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통일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한국민은 스스로의 손으로 온전한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통일을 넘어 새롭게 근대적 국민국가의 체제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국가건설의 과제일 것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각각 신해혁명과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를 건설했지만, 중국은 영토와 국민 전체를 장악한 성공적 통일근대국가를 이루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일본 역시 국민국가 건설과 동시에 제국을 추진했기 때문에 과연 전형적 근대국가 건설에 성공했는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급변사태와 통일은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경우로 북한 내 대량학살과 같은 비인도적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제연합 안보리의 동의를 거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통일로 이어지려면 국제사회의 전반적 승인이 필요하다.

둘째,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이후 통합 과정의 문제로 예기치 못한 급속한 통일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경제적 통일 비용은 다양한 경로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점증적 통일보다 통일 한국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 것임은 확실하다. 몰락으로 인한 통일은 북한 집권세력과 주민들의 좌절감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회, 문화적 통합도 부작용이 따를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여 통합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제발전 지체, 사회통합의 어려움, 그리고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합, 군사화되어 있던 북한의 탈군사화 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국제사회의 전면적 개입과 투자가 상당부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동아시아의 지역 내 경제통합은 상당수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이 동아시아 경제네트워크에 빠르게 편입된다면 통일 비용의 국제적 분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역의 정치, 사회적 안정, 경제발전 기반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에서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승인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북중동맹으로 인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 국제연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찬성을 생각해보면 급변사태 발생 이전, 혹은 사태 진행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 협력은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 구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반드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협력 속의 경쟁' 형태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는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지정학적 공간 중 하나이다. 통일한반도가 미중 간의 경쟁에서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는,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한반도 통일로 이어갈 동인이 부족할 것이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통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향후 한반도의 모습, 북한 집권층에 대한 한국의 처리,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방향, 통일 이후 한일관계의 향방, 통일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한국은 급변사태를 지향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이 아니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되 있을지도 모르는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 이후 통일한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통일을 이룩하려면 통일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고,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한국의 전략적 지향에 대한 동북아 강대국들과의 전략협력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중 전략 협력은 물론이고, 미중 간에도 한반도의 미래를 둘러싼 평소의 전략대화, 그리고 중일 관계의 협력 등이 전제되어야 통일을 향한 전략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이 과정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한국의 통일은 이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남북 교류협력 발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네트워크 작동, 남북 간 사회통합, 이후 정치적 통일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다. 한국의 통일 방안은 시대별, 행정부 별 세부방안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해왔다. 당면과제는 북핵 문제이다. 북한이 핵과 군사력을 통한 생존과 국가발전을 모색하는 한, 한국은 물론 주변국가들의 대북 협력이 불가능하고 통일은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정과 통일과정을 연결하고, 더불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의 협력을 연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구조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이를 연결하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핵은 다차원적 이슈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지구적 비확산 레짐의 문제이자, 북한의 미래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 간 세력균형의 문제이고, 남북 안보경쟁 및 교류협력과 연계된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며, 냉전 종식 이후 불안정한 북한의 미래를 둘러싸고 발생한 문제이기에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은 병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평화적 환경 속에 핵을 버린 북한이 한국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동북아 구조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는데, 이는 한국 외교의 도전이자 기회이다. 한국은 북핵이라는 미시적 문제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 간의 다자적 안보협력의 모델을 정초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북한 문제를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잘 알고 있으며, 외교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해결과정을 동북아 안보협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간의 평화교류 상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진입하면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자동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올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시장사회주의나 다른 형태의 개방, 개혁의 사회경제체제를 이룩하더라도 정치적 권위주의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남북 간의 경쟁은 다른

형태로 계속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려면 북한 체제에 국제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국의 대북 정책과 외교정책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북한이 국제개발협력의 수원국 지위를 얻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존의 통합된 동아시아 경제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도록 무역과 투자 여건을 만들어가며,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자본유입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북한의 개혁개방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한반도의 미래가 동북아 강대국들 간의 협력과 궤를 같이하는 과정을 창출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7]

결국 평화적 과정을 통한 한국의 통일 노력은 대북 전략만으로는 부족하고 동북아 지역을 염두에 둔 외교전략과 결합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현재의 과정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 이후 개혁, 개방된 북한과의 통일 지향 노력 역시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 강대국들의 안보전략과 선순환을 이루며 연결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한국은 대북 정책과 통일정책을 추구할 때, 이를 한반도에 국한된 정책으로 다루지 말고 동북아 지역 구조의 문제와 연결된 지역전략의 일부로 다루어가야,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Ⅳ. 통일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과 지역 구도의 변화

앞서 논의한 바대로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의 근대국가 건설 과제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북아 국제정치의 비정상성, 무정부상태 성립 이전(pre-anarchy)의 경쟁성 극복, 근대 국가들 간의 평화지향적 국제사회 수립, 그리고 근대를 넘어서는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한 미래지향적 노력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안고 있다. 한국의 통일을 인구 8천만의 강대국 출현, 이후 한국의 영향력 확장과 기존의 동북아 민족주의 경쟁에서의 우세 점위 등 한국의 국익에만 국한된 과업으로 상정하면 주변국가들의 도움과 축복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 스스로가 미래 통일 한국의 규범적 의미를 지역 차원에서 설정하는 인식적 성숙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을 불완전한 근대의 경쟁성, 혹은 근대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이나 강대국간 세력전이 차원의 사건으로 상정하는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조심스러운 것은 중국이다. 통일 한국에 주한미군이 여전히 대규모로 주둔하고, 미중 간 안보경쟁이 잠재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진배치가 이루어지고, 한미 간 대중 전략 협력 과정에서 미사일 방어체제 등이 강화된다면 중국은 독립된 북한의 존재, 분단 한반도가 훨씬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일 양국과 통일 한반도의 군사적 협력이

7) 동아시아연구원, 『신대북정책 제안: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3) 참조.

강화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향후 미중 관계에 통일 한국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미국 역시 한반도 통일을 미중 간 세력경쟁의 차원에서 인식할 경우,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문화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한일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으며, 한중 간 경제협력이 불가역적으로 심화되었다고 미국이 느낀다면 통일 한반도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여 소위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취하는 가운데 동맹과 전략 협력 파트너인 일본, 호주,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존재는 미국의 말대로 핵심축(lynchpin)이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아무래도 한국은 동북 3성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동북 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 교통, 에너지, 자원, 인간안보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8)]

일본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중국과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협력하려 하지만 동시에 일본에게 군사적 견제의 역할을 맡기고 싶은 상황이다. 통일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대중 군사견제 역할에서 한일 협력을 원하는 일본의 희망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력이 강화되면 일본과 상대적인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한일 관계가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다면 일본은 한국의 통일이 환영할 만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 한국의 통일을 가장 환영하는 세력은 러시아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미러 관계의 경쟁 속에서 동아시아의 협력 대상을 구하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간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러시아는 극동개발 및 에너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려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도 큰 전기를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존재는 오히려 한러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고, 북핵 문제에서도 러시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 한국은 한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동북아 강대국들의 경쟁 방정식에서 한국이 모든 강대국을 만족시키면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한국이 원하는 지역구도를 독자적으로 내놓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통일이 한국이 원하는 구조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동북아의 상대적 약소국이자 평화세력으로서 현재의 세력균형과 경쟁의 논리를 다자협력, 복합적 네트워크로 변환시켜 가는 데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이다.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 속에서만 번영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강화되는 제국적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8) Peter M. Lewis,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 Anti-Unification Policy or Just Too Many Uncertainties to Account For?"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pp. 79-108 참조.

존재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을 통해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치를 보다 협력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에 동의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통일 한국이 강대국 간 세력균형에서 어느 한 편에 서는 편중의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며, 구체적인 이슈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심어 준다면, 통일 이후 한국의 외교적 정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미래의 그림자가 되어서 현재 한국의 통일 노력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나타날 때, 한국은 통일 과정과 동북아 평화과정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향후 한국의 전략적 노력 방향

최근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이 나오고 있다. 중견국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국력크기에 비추어 제시된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외교적 비전의 형태로 제시된 용어이다. 역사적으로 중견국의 역할은 다양한 변천을 겪어 왔다. 국력 기준에 따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국가이기도 하고, 냉전기 동맹정치에 편중되지 않은 비동맹 국가이기도 하며, 규범적 역할을 자임하여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그룹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중견국 외교는 지구적 차원에서 보편규범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하는 외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동북아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경쟁을 완화하는 대안적 안보 구조를 제시하는 외교이어야 한다. 과연 중견국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역할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대안적 용어가 출현하면 더욱 반가울 것이다.[9)]

핵심은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동북아 중견국, 협력촉진자, 지역질서의 변환자 등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 동북아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 및 지식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공통의 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동아시아 미래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진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대동의 동아시아, 인권과 자유, 시장질서가 실현된 동아시아 등 국가별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 통일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담론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을 때, 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통일한국의

9) Sook-Jong Lee. 2012.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25), pp. 3-4; Andrew F. Cooper, Richard A. Higgott and Richard Nossal Kim.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93) 등 참조.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둘째, 미중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중 삼각관계의 새로운 공식을 고안해야 한다. 향후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결국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통일한국의 위치를 설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서로에 대한 헤징전략, 혹은 양방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중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전략적 경쟁구도를 상정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국은 강화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내적 균형을 통한 군사력 증진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구도를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통일이라는 과제를 놓고 미중의 경쟁의 축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기가 어려운 처지이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 모두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반드시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인식되도록 하면서 한국이 원하는 바, 특히 통일의 목적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외교역량이 필요하다.[10)]

셋째, 동아시아 각국들은 미래 동아시아 주도권을 취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 외교전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일본 역시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를 설립하여 향후의 전략환경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2013년 동북아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 각 국가들은 중장기 동아시아 전략을 내세운 바 있고, 향후에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은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정책조정기능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전략을 구체화할지, 그 전략 속에서 통일전략이 어떻게 연결될지 큰 과제로 남아있다. 주변 국가들의 동아시아 전략이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대국 전략이라면, 한국은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협력과 공존의 원칙에 기반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중견국 외교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0) 전재성,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 『외교』, 107호 (2013) 참조.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안정: 비전과 과제 (요약)

전재성 (全在晟, 서울대)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근대 이행의 완성이라는 총체적 의미를 가진다.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제국주의 영향 하에서 근대 이행을 거친 동아시아 국가들은 1945년 이후 근대 국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간직해온 민족과 영토를 보존하면서 온전한 근대국가를 이룬 동북아 행위자는 극히 드물다. 한반도는 분단되어 두 개의 정치체가 탄생했으며 중국 역시 두 개의 중국으로 분단되었다. 제국주의 물결 속에서 팽창주의의 길을 걸은 일본은 패전 이후 현재까지 보통국가의 위상을 찾지 못한 채 외교정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대적 이행을 완성하는 총괄적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의 통일을 시발로 양안관계의 발전,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이루어져 결국 동아시아 근대 이행이 미래지향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동아시아인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과정에서 동북의 평화와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북핵 문제 해결, 남북 교류협력 증진, 이후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 내 불안 상황이 조성되어 급격한 통일의 기회가 조성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 강대국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로운 통일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통일이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 더 나아가 6자 회담을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한반도의 통일 과정은 남북의 협력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 간의 제도화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은 선순환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설사 북한 내의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변국의 협력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북한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와 협력 없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사실 어려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급속하게 통일하려고 해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경쟁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소위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협력 속의 경쟁을 추구하려는 정책기조에 합의한 바 있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큰 사건으로 미중의 협력과 한반도 통일은 선순환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중요한 행위자이다.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행위자일 뿐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발전에도 중요한 주변국이다. 통일 한반도는 러시아의 극동지방을 거쳐 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통일 한반도의 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 역시 통일 한반도와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한일 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과정은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선순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의 향후 전략은 동북아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 8000만에 달하게 될 한국의 외교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외교전략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미중의 경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통일 한반도가 출현한다면 어느 한 강대국에 치중하는 외교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 안정을 고양하는 한국의 외교가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 간 전략 협력관계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동아시아 세력균형 구도를 평화로운 다자협력구도로 변화시키려는 중견국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 이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 영향 하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급격히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에 치중하는 양자택일의 외교전략을 택해서는 안된다. 미중 간의 경쟁이 지속되더라도 양국의 전략적 불신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갈등해결 메카니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력균형의 변화를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체제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외교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는 고립된 북한을 축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양분되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지역, 극동지역 개발을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미국과 연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대륙과의 경제교류를 위해 먼 길을 돌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통일 한반도가 출현하면 한반도 북부는 교류의 맥을 잇는 중요한 연결점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동북아 강대국들이 상호협력하는 장을 한국이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다차원적 평화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통일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韩半岛统一和东北亚的和平稳定 (摘要)

全在晟 (首尔大学)

韩半岛的统一具有完成东亚国际政治的近代转型的整体性的意义。19世纪中叶以来，在西方帝国主义的影响下，东亚各国开始了近代转型，1945年以后，各国进入努力建设近代国家的阶段。但是在东北亚地区，很少有国家是在保留传统的民族与领土情况下建立完整的近代国家的。韩半岛分裂后，形成了两个政治体，中国也面临着相同的问题。日本在帝国主义的浪潮下，走上了膨胀主义道路，战败后至今还没能恢复普通国家的地位，在外交政策上经历种种困难。从这一点上，韩半岛的统一对东亚国际秩序完成近代转型具有全局性的意义。因此所有东亚人应该为实现韩半岛的统一、促进两岸关系的发展、日本成为普通的国家，而最终完成东亚的近代转型而努力。

韩半岛在完成统一的过程中，可以对东北亚的和平与稳定做出很多贡献。韩半岛完成统一的方式有两种可能。第一种可能是，通过一条解决朝核问题、增进南北交流、最终实现统一的道路来完成统一。另一种可能性是，朝鲜内部的不稳定局势提供一个可以迅速统一的机会。但无论是哪种情况，韩半岛的统一只有在得到周边强国与国际社会的支持与协助时，才有可能实现。如果朝核问题得不到解决，和平的统一过程将是不可能的。而朝核问题只有通过美国与中国的合作，进而通过六方会谈达成东北亚多方安保协议，才有可能实现。韩半岛的统一过程既需要南北韩的合作，同时还需要东北亚各国间的制度性合作，因此，韩半岛的统一与东北亚的多方安保协议只有在良性循环关系的保障下，才可能实现。即使因朝鲜内部发生了重大变化而实现了统一，如果不能与周边国家有良好的合作关系，统一将很难顺利完成。在得不到中国这个既与朝鲜保持同盟关系又任联合国常任理事国的国家的同意与协助的情况下，将很难对朝鲜进行任何形式的干预。韩国与美国想要加速对朝鲜的统一，但必须要保证与中国的战略合作关系。通过这些所有的过程，现在已经开始的美中之间的竞争将会成为重要的问题。美国与中国通过所谓新型大国关系，在形成竞争与合作并存的关系上达成了协议。韩半岛的统一过程是

一个会伴随东北亚地政学上重要变化的事件，因此，美中的合作与韩半岛的统一应在维持良性循环的前提下发展。日本和俄罗斯也是重要的邻国。两国不仅是解决朝核问题的六方会谈的重要参与国，同时对统一后的韩半岛的发展也有重要影响。统一的韩半岛将通过俄罗斯的远东地区，与欧亚大陆相连，所以俄罗斯的远东开发与韩半岛的发展密切相关。日本也可以通过增进与韩半岛的经济交流，寻求共同的利益，发展韩日间的合作关系。因此，韩半岛的统一过程将与东北亚的和平、稳定形成良性循环的关系。

统一后的韩半岛的战略将对今后东北亚的状况产生很多影响。届时韩国的人口将达到8000万，为了不对东北亚的和平与稳定带来威胁，韩国的外交需要确立明确的政策方向。尤其是在美国和中国持续竞争的情况下，如果韩半岛实现统一，那么，有必要建立一种既不倚靠任何一个大国，又促进东北亚整体的和平与稳定的外交政策。现在，韩国通过同时推进韩美同盟和韩中战略合作关系，努力将东亚的势力均衡格局转变成和平的多方合作格局。这种倾向将在统一后得到进一步的强化。韩国在外交战略上既不能选择在美国的影响下牵制中国，也不能选择急剧削弱韩美同盟，转向与中国形成更密切的关系。即使美中之间持续竞争，韩国的外交政策既要做到缓解双方在战略上互不信任的局面，增进双方的合作，同时还要具备灵活性，起到以和平方式促进势力均衡局势发生转变的作用。现在东北亚形成了以朝鲜为轴的海洋势力和大陆势力。中国与俄罗斯在东北地区、远东地区开发时，苦于不能连接韩国与日本、美国。美国和日本也面临着绕一大圈才能与大陆进行经济交流的困难。如果能实现韩半岛的统一，那么韩半岛的北部将会成为交流的重要的连接点。通过这个过程，韩国将会形成一个促进东北亚强国之间相互合作的环境，最终将会为东北亚多层次的和平往来作出重要贡献。

동북3성과 한반도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

〈동북3성과 한반도 경협의 비전과 과제 – 북중 국경협력에 대한 한국의 참여〉

퍄오동쉰 (朴東勛, 연변대)

1. 서론

최근 들어 한국이 중국 동북3성에 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중국정부의 동북진흥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동북3성이 중국 4대 성장축으로 부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 시장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동북3성은 자연 관심지역이 된다. 둘째, 2009년 이래 동북진흥책과 북중경협이 연계되어 협력패턴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면서 북중 간 '경제밀착'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 중 후자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지로 한국은 한반도 특유의 정치구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일단 한국은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필요하지만 북중경협의 지속적 증대는 이러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중경협은 북한 시장세력 확대 및 개방적 사회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 시각 또한 함께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은 상당히 갈등적인 인식 속에 북중경협의 주요 현장인 동북3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엇보다 동북3성과 한반도의 경협문제를 중국–북한–남한이라는 3자간의 상호 연계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북중경협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안고있는 과제들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한중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북중 국경 협력의 국제정치경제

동북3성은 중국 내에서 북한과 가장 긴 국경선(총연장선 1,318)을 접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북중 교류의 주요 창구로 작용해 왔다. 2000년대 이후, 특히 2009년 북한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동북3성과 북한간의 경협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9년 중국이 북중국경지역 개발을 공세적으로 펼치게 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 첫째,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부문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2008년 11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정했고, 이런 맥락에서 2009년 「창지투 규획」·「랴오닝경제벨트 규획」등[1] 국가전략 수준의 지역개발 규획이 십 여건 발표된다. 둘째, 동북지역 국경개발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장기간 추진되었던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UNDP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TRADF)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고 2003년 동북노공업기지 진흥계획과 함께 2005년 대두만강 지역협력(GTI)도 재차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시각은 여전히 관망적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선 일국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강행하여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을 갖게 된 것이다.[2] 셋째, 북한의 지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한반도 정세 불안정이었고,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도 지역개발의 경우 북한이라는 문호를 확보하여 지역 개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3] 물론 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줄곧 외세침략의 발판이 되었었다는 전통인식이 작용했다는 점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환언하면, 중국의 동북 국경지역개발은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장구적인 평화 국면을 조성해야만 국제협력도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중국의 국경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는가. 첫째, 이는 경제 개선의 필요성이 보다 돌출이 되는 시기라는 점과 연관된다. 2009년 제2차 핵실험이후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토대로 정치강국, 그리고 핵무기를 기반으로 군사강국임을 자처할 수 있었지만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강국 건설과업은 오히려 요원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후계체제 구축의 필요성 때문이다. 2008년 8월 와병이후 자신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인지한 김정일은 2009년 1월 김정은 후계자 지명을 하달하고, 점차 후계체제 구축에 들어섰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인격적 리더십을 가지지 못한 김

1)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창지투규획」,「랴오닝경제벨트 규획」을 통칭하여 동북 국경지역개발이라 부르기로 한다.
2)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리종림 교수 인터뷰, 2012년 7월.
3) 「창지투규획」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에 의하면 애초의 개발 계획은 주로 창춘(長春)과 지린(吉林) 지역에만 집중되었다 한다. 그러나 두만강 지역 대외통로 확보를 전제로 한 개방도 제고가 없이는 개발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다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연변–훈춘지역이 포함되면서 '창지투 규획'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정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정일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내, 외부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난과 2차 핵실험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2009년 이래 미국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변함없었고, 남북관계도 MB정부 등장 이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협력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오로지 중국밖에 없었다. 바로 이 시점에 중국이 대규모 국경지역 개발을 제시하면서 북한은 북 · 중 국경지역개발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 · 중 국경협력은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지역 협력국면을 이끌어 냄으로써 동북지역발전과 동북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북한의 경우 핵실험 이후 경제강국 건설, 후계체제 구축 등 내부적으로 대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국경개발 참여는 어찌 보면 중국의 동북지역개발 프로젝트가 하나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처한 국제적 상황 및 내부적 인식 변화가 궁극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Ⅲ. 국경협력의 전개와 북한의 참여

2010년부터 정식 개시된 북 · 중 국경협력은 애초부터 상당한 협조관계를 이루며 진행되어왔다. 중국정부는 2009년 7월과 8월에 이미 인준한 국경개발 규획을 원자바오 총리 방북 이후인 11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대대적인 내부적 동원과 대외홍보를 전개했고, 이 시점(12월)에 김정일은 18년 만에 나선시를 방문하고 이듬해인 2010년 1월부터 일련의 대외개방조치를 실행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북한은 북 · 중 국경개발에 어떠한 참여 형태를 보여 왔는가. 여기서는 주로 국경협력을 위한 북한의 일련의 정책조치와 구체적 영역들에서의 협력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변화

북한은 2010년 이후로 대외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실시해왔다. 북한은 2010년 1월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한 이후 2010년 1월 15일에는 20년 만에 기반시설 · 기초공업 ·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1월 27일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데 이어 7월 8일에는 외국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합영투자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2010년 8월 김정일 제2차 방중을 계기로 10월에는 나진 · 신의주 공동개발에 관한 북 · 중 협정이 체결되었다. 2011년 5월 하순 김정일의 제3차로되는 파격적 대중 행보 이후 6월 8일과 9일에는

황금평 ·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착공식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착공식이 진행되었다.[4] 이를 배경으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은 수정된지 2년도 채 안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다시 거의 신규수준으로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황금평 · 위화도 경제지대법 등 10여 개의 외국인투자관계법들을 신규 공표 또는 수정했다. 이들 법규들은 투자기업 특혜조치, 국제법 기준 수용 등 대부분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친화적' 조치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5]

2010년 이후 북한 경제개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하 '10년 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해외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경영관리 기법 및 해외자본을 받아들여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로 '나선–청진–김책'의 동북축과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축을 중심으로, a, 자원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산업분야), b, 철도 · 도로 · 항만 등 인프라(SOC) 개발 분야와 c, 금융 등 분야에 대한 건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물론 기술과 자본이 극히 궁핍한 상황에서 북한은 주요대상들을 국가예산과는 상관없이 주로 10년간 1,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해 개발한다는 것이다.[6] 개발 사업은 애초 국방위원회 산하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과 내각 산하의 합영투자위원회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7] 그동안 자본유치 실적이 미진하자 김정일 사망이후 대외경제 관련 조직체계가 개편되어 대풍그룹이 합영투위 산하의 국으로 통폐합되었다. 그 대신 2012년 연초에는 합영투위 해외 유일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조선투자사무소'가 중국 베이징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북중 국경협력 실태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된 일련의 경제조치 하에 현재 북한의 국경협력 참여는 어떠한 상황을 보여 왔는가. 여기서는 주로 인프라 건설, 투자유치, 인적교류 영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4) 동 착공식을 통해 황금평□위화도 총 16㎢의 부지에 양국은 정보산업 · 관광문화산업 · 현대농업, 그리고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와 상업센터를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나선무역지대의 경우 주로 원정리–나선시 도로보수 공사, 나진항을 이용한 중국내 화물 운송, 나선 시범농업지대, 연간 생산 100만 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 건설과 나선지역 자가용 운전 관광 항목 등이 약속되었다.

5) 2011년 11월 29일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기업법, 등이 수정 보충되었고 12월 김정일 사후에도 불구하고 12월 21일에는 외국인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파산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법령들이 수정 공표되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 평가는 배종렬, "최근 개정된 북방특구법제의 개혁 · 개방성: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2, 봄호, pp.49–77; 유현정,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정비 평가", 『세종정책연구』,2012–18, 2012, 참조.

6) 박희진, "김정일체제의 경제적유산과 북한경제전망: 거점개방과 반개혁의 이중주," 『KDI경제리뷰』, 2012년 5월호.

7) 조선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수영)은 내각 산하기관, 조선대풍그룹(총재 박철수)는 국방위 산하 기관으로 알려짐. 합영투위는 통상적인 외자유치를, 대풍그룹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목적성 사업을 위한 외자유치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짐. 김치관, "북, 제한조치 대폭 완화된 투자법을 올해 공표," 2011, 『민족21』,

(1) 인프라 건설

중국정부는「창지투규획」에서 일찍 동북 변경지역 경제개발구 건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 및 러시아 원동지역 항만을 경유하는 대외통로 확보를 2012년까지 일차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 항만을 경유하는 대외통로 확보는 중국 동북지역개발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정부는 창지투 선도구 규획 100대 중점추진 프로젝트 중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으로 통하는 도로, 철도 및 통상구 다리 등 교통 인프라건설에 총 160.5억 위안(약 25억 달러)을 투자하여 국내 구간은 2015년까지, 북한 내 구간은 2020년까지 완공할 것을 계획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 · 중을 연결하는 중요 세관인 권하—원정리 교각건설이 이미 완공되었고, 원정리—라선지역을 잇는 2급도로도 2012년 현재 이미 개통되었다. 단동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는 2010년 착공을 시작하여 18억 위안(약 2.8억 달러)이 투자되어 2014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도문—청진 철도(171km), 도문—나진 철도(159km)에 총 32.78억 위안을 투자하는 등 10여개 대외통로 프로젝트가 계획 중에 있다.[8)]

항만개발의 경우, 2012년 9월 1일 연변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은 북한 항만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진항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연간 하역능력 700만 톤인 청진항의 3, 4호 부두를 30년간 공동관리 및 이용하기로 합의했다.[9)] 대련 창리(創立)그룹은 2008년 나선항 제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확보한데 이어, 2009년부터 석탄부두 개조 건설을 진행했다. 2010년 중국 해관총서의 비준 하에 "국내 화물 초국경 운송"(内贸货物跨境运输) 무역형식의 해상운동 통로를 확보하고 2011년부터 훈춘광업집단 석탄 50만 톤을 1호 부두를 통해 중국 상해 등 지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5월까지 7회에 거쳐 총 10.4만 톤이 운송되었지만 석탄 가격의 변동 특히는 권하—원정리 도로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특구건설의 측면에서 보면, 2012년 8월 장성택 방중을 계기로 라선경제무역관리위원회와 황금평 · 위화도 경제구관리위원회가 각각 설립되면서 양 지역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상기 공동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0)] 예컨대, 2011년 '나선특구'에 100만 톤 규모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던 야타이그룹(亞泰集團)이 2012년 8월 14일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와 투자합작 MOU를 정식 체결하고, 합작기한을 50년으로 2013년

8) 중국 연변대 임금숙 교수 인터뷰, 2012.7.3.

9) 청진항은 동항과 서항으로 구분된다. 동항 1, 2호 부두는 아직 대외에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하이화 그룹이 임대한 부두는 조건이 다소 열악한 서항의 3,4호 부두이다. 하이화 그룹은 현재 6천 만 위안을 들여 3, 4호 부두 개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2015년까지 수만 톤에 불과한 청진항 물동량을 100만 톤으로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0) 예컨대 중국 포털사이트 써우후 닷컴은(sohu.com) 2월14일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빌러 "중국지도부는 이번 북핵실험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후 대북 단독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이미 2012년 8월 장성택 국방위원장 방중 시 체결했던 나선, 신의주–황금평 2개 특구 공동개발에 대해 전면적인 재토론에 들어갔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韩媒：中国取消朝鲜罗津特区会议或为制裁朝鲜" http://news.sohu.com/20130214/n366067796.shtml 참조.

부터 생산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9월 현재까지 본 투자항목은 그다지 순리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11)]

(2) 투자유치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서 경제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공장가동률 저하(30% 이하)와 원부자재 및 전력 등 생산요소들의 만성적 결핍으로 경제회생의 내적 동력을 잃은지 오래다. 비록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마련했지만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경제회생의 유일한 대안으로밖에 될 수 없는 상태였다. 앞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북한은 2012년 이후 대중 투자유치를 높이기 위해 대풍그룹을 합영투위에 통폐합시키고 해외 유일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조선투자사무소'를 중국 베이징에 설립함으로써 해외기업 대북투자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실제로 북한이 유치하고자 하는 투자항목들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단동화상해외투자유한공사(中国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에[13)] 공개된 유치계획 항목 158건에 대해 분석해 보면<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실지 계획하고 있는 유치항목들은 광산 · 물류 · 가공/제조 · 어로양식 · 유통 · 금융 · 관광 · 기반시설 · 가공구 등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항목 수로 볼 때 경공업 · 광산업 · 농수산업 · 서비스업 · 화학공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표 1〉 북한의 투자유치 항목 추이(2010-2012.7)

분류	농수산업	광산업	서비스업	경공업	화공업	합계
항목수	18	49	14	68	9	158

출처: 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http://www.cxtzw.com)

경공업의 경우 품목별로 종이/인쇄 · 식품가공 · 의류/신발 · 가전제품/전기기기 · 조명 · 플라스틱 제품 생산 등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내수를 전제로 수출

11) 야타이그룹 소개에 따르면, 2013년 9월 8일, 라선시 인민위원장 조정호 일행이 야타이그룹 방문, "양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야타이그룹 시멘트 공장 건설항목 추진을 가속화 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한다.

12) '조선투자사무소'는 조선합영투위의 대외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신용을 담보로 투자항목의 합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 시장, 투자항목, 투자유치 관련 정책 · 법규에 대한 설명과 시장고찰 등 대북투자 제반 절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자 한다. 朝鲜投资事务所, http://www.cestcenter.com/firm.aspx(검색일: 2013.9.30).

13) 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는 대북 경제협력 민간단체와 대북경협 사업단위(事业单位, 국가기관 성격)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기존의 사업 우세를 빌어 북한 투자유치 항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북한 투자관련 자문, 시장조사연구, 협의 및 계약과정에 방편을 제공하고 있다. 〈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 http://www.cxtzw.com〉, (검색일: 2012년 12월 10일).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 햄버거 · 비누 · 껌 · 조미료 · 생활용세척제 · 태양에너지온실항목 등 상대적으로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생필품 생산은 평양지역에 투자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광산개발의 경우, 철 · 금 · 동 등 10여 종의 광산 관련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개발대상 지역은 주로 함경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현장탐사를 통한 자원량 평가 및 투자기업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투자규모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방식은 북한이 노동력과 자원 및 부분 시설을 제공하고 중국 측이 자본과 기술 · 설비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측이 단순히 광물을 채굴해가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채굴, 가공, 운송 시스템을 구축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은 내수와 대중 수출을 동시에 추구하고 투자금 상환은 보통 보상무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평양지역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현대화 호텔 건설 항목, 육 · 해운수와 물류센터 건설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평양지역에는 택시 · 공공버스 · LPG 충전소 등 항목도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예컨대 중국 측이 100대 정도의 택시 · 버스차량 및 부품을 제공하고 북한이 이를 보상무역 또는 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14] 뿐만 아니라, 북한은 현재까지 도시 교통운영에 관한 합작 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중국 기업 측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상징할 수 있는 생필품 및 서비스항목 투자를 평양시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기득권층에 우선적으로 보다 나은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을 향한 북한의 투자유치 희망항목은 전방위적이다. 그러나 중국을 향한 북한의 이러한 희망사항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政府引导，企业为主，市场运作, 互惠共赢)라는 국내 시장 운영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하면서 무엇보다 시장기제에 기반한 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중국기업들의 시각에서는 북한의 정책 · 정치적 리스크를 항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정부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무엇보다 중국정부에 '대규모 투자'을 요구하고 있지만[15] 중국은 시장기제를 기반으로 기업 참여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14) 실지로 2013년 현재 중국 화타이그룹(华泰集团)은 북한과 1000대 규모의 승용차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미 100대 공무용차량 및 300대 택시용차량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 예컨대 북한 김일성종합대 최영옥 교수에 따르면 "(나선경제무역)지대 내의 하부구조정비와 관련한 투자수요만 보더라도 초보적으로 수십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그의 개별적 계획새상들의 대부분은 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애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실태를 보면 연평균 외국인 투자액은 몇 천만 달러정도이며 그것마저도 계약단계에 있고 실지 실현된 것은 연평균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문별 투자총액의 68.5%가 서비스부문에 27.2%가 생산부문에, 4.3%가 하부구조부문에 투자되었다."고 한다. 최영옥,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현 실태와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 『두만강포럼2013』 발표논문, 2013년 10월21일.

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북한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김정일 시기 나선항 4, 5, 6호 부두 50년 사용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중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설이 회자되었을 때 중국은 직접적 개발원조보다는 기업을 내세워 30억 달러 규모의 나선특구개발 항목을 추진했었다.[16] 2012년 8월 중순 장성택 행정부장 방중 시에도 북한이 중국에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요구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나[17] 중국은 결국 9월 22일 민간기구인 중국해외투자연합회가 대표로 북한 '북경투자사무소'와 협의를 체결하고 30억 위안규모의 '대북투자전문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차원에서 볼 때 대북투자는 항상 '가시 돋친 장미'로 비유된다. 미개척지 북한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으나, 미숙한 제도적 기반과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정책적·정치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장성택 북한 행정부장의 방중에 즈음하여 중국 언론에 공개된 '시양그룹'(西洋集團) 사건이 그 단적인 예였다.[18]

물론 북한도 투자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시양그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명의로 9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관련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으며, 9월 9일에는 홍수로 갇혀 있는 중국 투자자들을 김정은이 직접 비행기를 파견하여 구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전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9월 22일 중국해외투자연합회와 '북경투자사무소'간의 '대북투자전문펀드' 관련 협약에 체결되게 된다. 특히 중국해외투자연합회는 중국 상무부·외교부 및 학자들과 공동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합영투위 주최 하의 북한 투자유치 설명회(광산·도시기반건설항목·CBD상업구 BOT건설[19]·5성급호텔·온천레이저단지 등)에 참석하고, 북한 시장동향 고찰, 정부·기업·금융·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12년 제1차 중조국제경제합작투자 고위층 포럼'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1월 24일 출발 예정이었던 이번 방북프로그램은 북한 위성발사 문제로 세 차례 연기되다가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소극적으로 타진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현재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 및 기존 시설을 토대로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여 생산성 제고 및 인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투자부문에서 보면 북한은 '경제회생'이라는 명목 하에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

---

16) "张成泽访华受关注 传要向中国借10亿美元,"『大公報』〈http://www.takungpao.com/news/content/2012-08/16/content_943432.htm〉 (검색일: 2012년 9월 10일).

17) "10억弗 규모 차관 장성택中에요청,"『조선일보』, 2012년 8월 15일.

18) 중국 시양그룹이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500대 기업 중 하나인 시양그룹(민간기업)은 양국 정부 비준 하에 2007년 북한 령봉연합회사와 계약을 맺고 '양봉합영회사'를 설립하고 황해남도 옹진군 옹진철광에 2.4억 위안(약 3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2011년 4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연간 생산량 50만톤). 그러나 2011년 9월 북한이 토지임대세 1€/㎡, 공업용수 0.141€/㎥ 등 총 16가지 요구를 부가하면서 쌍방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중국기업은 2012년 3월 강제추방 당했다. 2012년 4월 북한은 시양그룹에 이전금 명목으로 3,12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8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辽宁西洋集团投资2.4亿元铁矿项目遭朝鲜毁约," 『中国选矿技术网』, 2012.8.16.

19) BOT(build—operate—transfer), 즉 건설–경영–이전 방식을 가리킨다. 정부가 계약을 통해 사영기업(해외기업 포함) 일정 기한내 특허권을 부여, 특정 공용기반시설 융자건설과 경영을 허가하고, 기업이 경영이익을 통해 투자 회수 및 이윤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특허권 만기 이후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정부에 이전한다.

다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제도 사회주의식으로 '속도전'을 진행하려는 북한 엘리트들의 관습적 사고방식의 반영일 수 있으며, 또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하루 빨리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김정은체제의 '전시행정'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적 차원에서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주요 행위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경협은 무엇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상무부 · 외교부, 해관총국 등 구체기관들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해주고 주로 기업들이 북한사회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기업의 차원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항상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회수가 빠른 광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설령 다른 항목들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대가를 광산자원으로 지불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20] 따라서 북한은 실지로 보다 다양한 영역들에서 중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 여건이 충분치 않고 또한 남북간 교역도 중단된 상황에서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개발과 수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 북한의 대중 수출 대표적 물품은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제품으로 수출액은 16.47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36.4% 증가함으로써 전체 수출액의 67%를 차지했다.[21] 북한 대중국 수출항목 중 석탄 등 고형연료 수출은 2009년의 2.09억 달러에서 2011년 현재 11.41억 달러로 5.5배 증가했고, 철광석은 0.48억 달러에서 3.23억 달러로 6.7배 증가했다.[22]

(3) 인적교류

북중 국경협력 개시 이후 또 다른 변화는 양국간 인적 교류가 그 어느 시기에 비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북중 양국은 정상회담을통해 고위층왕래, 전략적 소통 및 중국동북지역과 북한 간 경제협력 강화 등을 합의하면서 양국간 인적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졌다. 일련의 고위층 상호방문이 연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국경지역 지방관리들 간의 교류활동도 함께 활성화 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동북3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이 진일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5월 이후로 고위층 인사들의 대중 고찰이 증가되었으며 2011년 이후로는 지방정부 관원들의 실무적 방중이 증가했다. 양국 관료들 간의 의례적인 방문보다는 현실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과 고찰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부터 라진특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 기초 관원들이 중국 대학에서 관리경험을 학습한 사례다. 중국 상무부 주관으로 약 200명 규모의 라진특구 및 황금평-위화도경제구 관원들이 중국 길림대학과 대련행정학원에서 각각 두

20) 예컨대 중국 뤼띠(綠地集團)은 현재 라선특구 7㎢에 기반시설 투자를 계획 중이나, 그 투자 대가를 석탄 등 광산자원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 "绿地集团、招商局等国企组团投资中朝经济区," http://business.sohu.com/20120817/n350885423.shtml(2012.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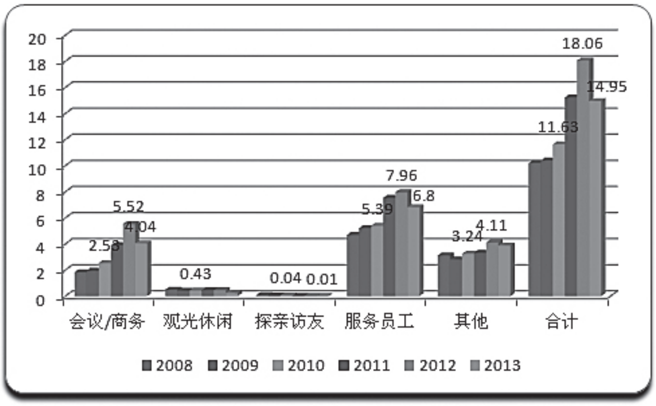
21) 이상국, "북중 경제교류 · 협력 동향과 시사점," 앞의 자료, p. 5.

22) 박윤환, "2011년 남북교역 · 북중무역 동향비교"『Trade Focous』, Vol.11 No.17, 한국무역협회, p.16.

달 간의 학습과 현지고찰을 진행했다. 대학별로 매 회 20명씩 5회에 나누어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중국 측에서는 학자, 기업인, 정부관원 등이 강사로 나서서 주로 노동력시장, 노동력 공급, 도시와 농촌개혁, 세제개혁, 개발구 규획과 관리 등 중국의 경험들을 전수했다.

특히 2010년 이후의 북한의 대중 인적교류는 관리계층의 방중에서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국가관광국(中國國家旅遊局)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인원들의 중국 방문자 수는 201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2009년 현재 북한 주민 중국 방문자 수는 10.39만 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8.12만 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3년 사이에 80%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13년 제3분기까지도 14.95만 명의 북한주민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12.4% 증가했다. 특히 여행목적 별로 분석한 결과 '회의 · 비즈니스'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 수가 가장 선명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참조〉). '회의 ·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은 2009년의 1.94만 명에서 2012현재 5.5만 명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로 늘어났고, '취업'(服务员工)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 수는 2009년의 5.2만 명에서 2012년 8만 명으로 증가했다. 투자유치 · 무역 및 취직 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적왕래가 201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그림 1〉 북한주민 중국 입국 통계(2008-201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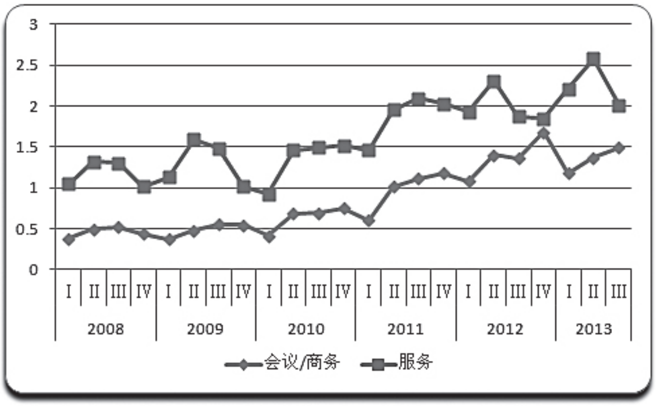


자료출처: 中国国家旅游局 각 년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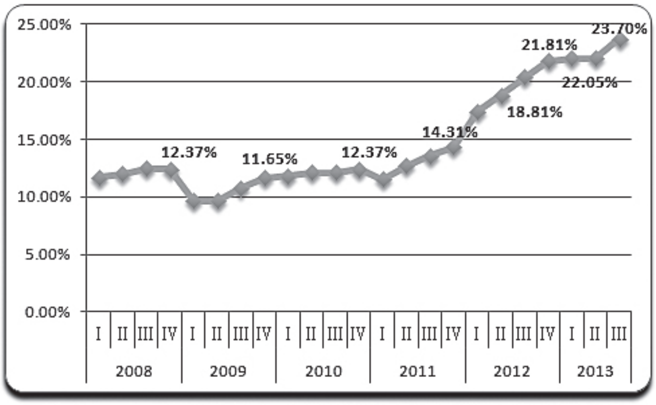
여행 · 친척방문 · 기타 등의 목적의 중국 입국자가 최근 몇 년이래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 · 비즈니스' 및 '취직 · 주재'를 목적으로 한 입국자들의 분기별 중국 입국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 3〉과 같다. 상기 두 유형의 분기별 입국자 수는 2011년부터 선명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회의 · 비즈니스(상용비자)를 목적으로 한 분기별 입국자 수는 2008,

2009년 줄곧 5천명 수준에 그쳤으나 2010년 2분기, 즉 김정일 방중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1년 2분기에 들어서면서 분기별 입국자 수는 이미 1만 명 선을 넘었고 2012년 4분기에는 이미 1.5만 명을 넘어섰다.

〈그림 2〉 북한주민 중국 분기별 입국자 수 변화 추이



〈그림 3〉 입국자 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취업목적의 입국자 상황을 보면 그 증가세는 보다 선명하다. 2010년까지 분기별 취업목적의 입국자 수는 대체로 1만 명~ 1.5만 명 규모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방중이후인 2011년부터 분기별 취업목적의 입국자 수는 약 2만 명 규모에 이르러 전년 동기대비 5천 명 정도 늘어났고 이러한 규모는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자

들의 중국 진출이 대부분 서비스업 및 봉제업 등에 종사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입국자가 전체 입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 10-12% 선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1년 2분기부터 점차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13년 3분기 현재 중국 입국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증가했다.

Ⅳ. 북중 경협의 과제

앞에서 논의 되었듯이 2009년 후반기부터 북중 국경협력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한 협조관계를 이루며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국내 균형발전 및 지정학적인 고려 속에서 북중 국경협력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민생경제 발전을 통한 체제안정에 중심을 둔 북한도 이에 적극 동참해 나섰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북중국경지역은 상당한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위주로부터 공동지대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동개발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관련 법규들도 상당부분 제정 및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 무엇보다 북핵문제 및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정은 여전히 북중경협의 가장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실험 등 한반도의 지속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북중경협을 강행했지만, 국제사회 수준에서는 행동의 정당성 측면에서 수세적 위치에 몰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저지에도 실패했다. 결국 중국은 북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이례적인 강경자세로 나서면서 이는 다시 북중 국경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은 현재 대 한반도 정책순위를 조정하고 비핵화문제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기에 향후 북핵 변수는 갈수록 북중경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경협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북한은 현재 경제회생을 통한 정당성 확보의 차원에서 인프라 및 다양한 산업영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의 원칙하에 지역공동개발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투자여건이 충분치 않은 북한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기업들은 무엇보다 투자회수가 빠르고 수익률이 높은 자원 항목 또는 투자의 대가를 지하자원으로 받고자하는 성향이 높다. 무역의 경우도 대부분 구상무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제품이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하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경우 지하자원의 대중국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 '종속적 발전'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대중 경협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이는

북중경협에 이롭지 않다. 무엇보다 다자협력 구도를 창출해 냄으로써 북한의 현 대외경제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다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열악한 인프라 및 생산구조도 문제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의 시장인식의 결여다. 북한주민들로서는 원초적인 인간의 합리성(또는 이기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서의 확립 및 그에 대한 이행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다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들에 대한 신용도가 상당히 낮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들에게 진정한 시장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중협력의 관점에서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대북경협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북한은 핵개발국가이며 비개방적인 폐쇄국가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사업, 인프라, 제도환경 등 이익 창출에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가진 국가이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북한 제도개혁과 대외개방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우리는 대북경협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일들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1. 북핵문제 해법: 중한미 공조의 선순환 구도 찾아야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한·중·미 3국간의 대북정책 공조체제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관련국들 간의 대북정책은 항상 미스매칭(錯配, mismatching)국면을 초래하면서 북한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보다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환언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역내 관련국들의 이해차이가 발생하면서 '채찍'과 '당근'이 엇갈려(동시적이 아닌) 사용되다보니 '유화'와 '강경'의 효과는 모두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중미 공조를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무엇보다 3국이 각각 우선시하는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전략적 이익들이 상호 만족될 수 있는 선순환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압력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둘째, 대북협상의 조건을 보다 낮은 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중국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북 설득력도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정책적 능동성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설득에 임할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해줘야 한다.

셋째, 한국의 '중견자'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현재 명실공이 '중견국'으로 부상해 왔지만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는 자신의 신분에 부합되는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국제체제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미 양 대국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갈등적 협력' 상태에 놓여 있는 중미 양국도 '제3자 변수'의 중요성을 갈수록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중 vs. 한미라는 틀을 깨고, 한국이 중미 쌍방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대국들에 각인시켜줘야 한다.

2. 대북경협에서의 주도권 확보 중요

앞에서 논의되다시피 2009년부터 급물살을 탄 북중경협은 2012년에 즈음하여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가시적 경제성과가 시급했지만 중국은 민영기업 위주의 대북투자와 시장운영기제 도입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일한 협력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수세적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경제분야에서도 다자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관련국 모두에 이롭다. 남북경협이 추진될 경우 북한 시장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나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북경협에서 한중 간 경쟁의 난맥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력상대가 늘어난 상황에서 북한은 한중 양자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챙기려는 의도가 분명해질 것이다. 결국 북한 내부적 상황은 다소 개선될 수 있더라도, 한중양국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북한의 국제규범으로의 편입 목표에는 한계를 초래하게 된다. 대북경협이 단지 국면전환을 위한 협력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목적에 둔 협력이라는 점에서 목적지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경협의 주도권 문제가 자못 중요해 진다. 따라서 한중양국은 대북경협에 있어서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북 경협의 목표, 원칙, 방법, 절차, 내용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북한사회 변화를 위한 한국사회 변화

중국의 개혁 · 개방 경험을 볼 때 사회적 변화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이었으며, 전방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점진적이었다는 것은 장기간 폐쇄적 정치환경 속에서 단일한 이념적 교육을 받은 중국사회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줄곧 사회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리, 즉 '계획'과 '시장', '평등'과 '성장'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자체적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상(華商)을 선두로 한 해외기업의 진입, 유학생 파견, 서구 사상의 유입 등 외부와의 전방위적 교류가 없었더라면 중국사회는 자체적

의 진화만으로는 오늘에까지 이르기 힘들었을 것이다. 환언하면 교류가 없으면 변화도 힘들다는 의미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60년간의 개인숭배와 독재이념을 받아온 북한주민들로서는 왜곡된 신념과 한계적 합리성 외에 그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 · 개방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조만간 개시될 정부 · 민간적 차원의 대북 경협, 인도적 지원, 문화 · 인문적 교류 역시 험난한 시련과 수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교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우호적 국내외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국경지역에서의 수많은 갈등사안들을 극복하면서도 중국대륙-대만경협, 북중 경협을 오늘까지 이끌어온 중국의 넓은 안목과 깊은 심성을 한국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

동북3성과 한반도 경협의 비전과 과제 – 중한 전략적 협력관계 내실화의 관점에서 (요약)

파오동쉰 (朴東勛, 연변대)

최근 들어 한국이 중국 동북3성 경제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임. 첫째, 중국 국내시장 개척, 둘째, 북중 경제무역협력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임. 후자가 주된 원인이라고 봄. 중한 쌍방의 시각에서 보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경협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반도정세 전환에 이로우며, 쌍방의 이익에도 부합됨.

북중 국경협력의 국제정치경제: 2009년 이후

중국 :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내수시장 확대의 차원에서 4조 위안 규모, 십여개 대형 지역개발전략 추진함. 둘째, 비록 2003년부터 동북 노공업기지 진흥계획을 추진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주변국 역시 관망적이었음. 중국은 일국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게 됨. 셋째, 한반도 지전략적 의미도 중요한 원인이 됨.

북한: 민생경제 발전의 필요성, 후계체제 구축의 필요성, 국제사회 고립적 국면 타개의 필요성.

북중 국경협력의 전개와 과제

원자바오 총리 방북 및 김정일 위원장 나선특구 방문을 계기로 북중 양국은 일련의 개방조치 추진. 북중은 나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구 개발을 주축으로 초국경 경제협력관계 심화 발전시킴. 기반시설, 교역, 인원왕래 등 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냈음.

과제 : 첫째, 북핵문제는 현재 중국의 전략적 선택의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음. 북중경협 발전에도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둘째, 북중 경제협력구조가 개선될 필요 있음.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은 현재 북중 경협의 기본원칙. 그러나 투자특징으로 볼 때, 북중 경제력 차이로 인해, 무역 · 투자 등 영역이 과도하게 지하자원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북측의 불만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짐. 동시에 대북 민간 소규모 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총체적 관

리가 부족함으로써 중국측 기업 투자 리스크 확대, 셋째, 북한은 시장경제 경험이 부족, 특히 시장질서 수립, 감독,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북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 중국 기업들의 투자 원동력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발생.

대북경협과 중한 전략적 협력

북핵문제 해법 : 각자 이익에 기반 한 중한미간 공조관계 강화 필요성. 첫째, 중국은 북핵문제에서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전제하에 북한 추가 핵도발 억지 노력 필요. 둘째, 이를 전제로 한미 양국은 보다 구체적이 세부적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정책적 능동성을 보여줘야 함. 이는 중국의 대북협상력 모멘텀 형성에 도움이 됨. 셋째,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은 자신의 신분에 부합되는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 중미 새로운 대국관계 수립에 긍정적 에너지 부여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대북경협 :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중한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대북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북한사회 변화를 위한 한국사회 변화. 대북정책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이며, 포괄적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교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우호적 국내외 여론조성이 필요.

中国东北三省与朝鲜半岛经济合作的愿景和课题
- 以深化中韩战略合作关系为视角 (摘要)

朴东勋 (延边大学)

近年来，韩国关注中国东北三省经济发展主要有两大原因：第一，拓展中国国内市场；第二，中朝经贸合作日渐成为影响半岛局势变化的重要变量。从中韩双方的角度来讲，加强战略合作，克服对朝经济合作中出现的种种问题，有利于半岛局势的转变，有利于双方各自的利益。

2009年以后中朝经贸关系发展的动因:

中国方面：受全球经济危机的影响，中国政府提出四万亿计划，推动多项大规模地区开发战略；尽管多年来，东北地区老工业基地振兴取得了重大进展，但发展活力仍然不足，周边国家仍持观望态度；朝鲜半岛的地缘战略意义决定。

朝鲜方面：改善民生及发展经济的需要；政权交替的需要；打破国际社会中孤立局面的需要。

中朝经贸合作的现状及存在问题:

— 以温家宝总理访朝以及金正日委员长访问罗津特区为契机，中朝两国推进了一系列开放开发措施，旨在深化中朝经贸合作关系。中朝以罗先经济贸易区和黄金坪、威化岛经济区为主轴，大力推进中朝跨境经济合作与建设，在基础设施建设、贸易及人员往来等方面取得了显著成效；

— 存在的问题：第一、朝核问题正在缩小中国的战略选择空间，对中朝经贸关系发展的负面影响日渐扩大；第二，中朝经济合作结构需要改善。“政府引导、企业为主、市场运作、互利共赢”是新时期中朝经济合作的基本原则。然而就目前投资的特点来看，由于中朝经济实力存在巨大差距，出现贸易、投资过度集中在资源领域这一较为严重的状况，并极有可能引发朝方的疑虑与不满。与此同时，由于中国政府对民间小规模投资

缺乏统筹管理，加大了中方企业对朝投资的风险；第三，朝鲜缺乏市场经济经验，政府对市场秩序的监管与维护意识欠缺，诚信度低，从而导致中方企业投资合作动力不足等问题。

对朝经济合作与中韩战略合作的方向

— 朝核问题出路：加强中韩美之间的协调关系。中国要坚持朝核问题上的坚定立场；韩美要调整对话门槛，在对朝谈判问题上采取灵活态度；作为中等国家，韩国应在外交层面上更加自信，为中美新型大国关系的建构注入正能量。

— 对朝经济合作：打开多边合作之门是推动朝鲜改革开放的必要途径，但需要通过中韩之间的战略沟通，提高双方在对朝合作中的话语权；

— 若要让朝韩经贸关系发生根本性变化，韩国需要“亲、诚、惠、容”的战略眼光。

제3회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 소통과 협력 과제
第三场 为东北亚和平所需要的韩中间沟通和协力

- 동북아 역사인식의 전환적 과제
  박태균 (朴泰均, 서울대)
- 为了东北亚历史认识的转换
  朴泰均 (首尔大学)

- 为了加强韩中人文纽带的课题展望
  张志强 (中国社科院)
-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장즈창 (張志强, 사회과학원)

-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강명구 (姜明求, 서울대)
- 为了进一步韩中文化交流的课题和展望
  姜明求 (首尔大学)

동북아 역사인식의 전환적 과제

박태균 (朴泰均, 서울대)

1. 한중관계의 현재와 역사인식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하게 진화했다. 이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과 연구자 수의 증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기러기' 가족의 자제들이 주로 중국으로 유학을 했지만, 이제 중국의 유명한 대학으로 유학을 가거나 연구년(sabbatical) 또는 post-doc을 가는 연구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정치외교학부의 신욱희 교수가 북경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한중 간에는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역사인식에서는 심각한 온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구려를 둘러싼 한 중 학계 및 시민사회 사이의 역사인식 갈등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사 외에도 한중 간에 또 다른 역사인식의 차이는 장보고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역사가 장협(張峽)의 저서인 "석도(石島)"에는 장보고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장보고는 한국 완도의 측징(側徵)의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장벽익은 신라에 귀순한 중국인이며 적(籍)은 중국 산동성 석도만이다. 지금 석도진 장가촌에 살고 있는 장세웅 선생은 아직도 그 분의 족보를 보유하고 있다. 장보고는 친구 정연과 함께 당헤종 원화 2년(807)에 적산포에 뿌리를 찾으러 왔다가 후에 양주로 유망한다. 그해 9월에 무령군에 입대하여 이기 반란을 진압하는데서 두각을 나타냈다. 11월에는 무령군과 함께 서주에 이전하여 통솔자인 왕지흥의 지휘 하에 복역한다. 그 후 이사도 반란을 반격하고 진압하는데 고을 세운다. 원화 14년에 소장으로 진급되었다. 장보고는 당 목종 장경 3년(823)에 무령군 소장직을 사임하고 적산포에 돌아와 적산법화원을 설립했다"[1)]

1) http://www.minjog21.com/news/articleView.html?idxno=87

결론적으로 장보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은 그가 신라인이지만, 중국인의 핏줄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점은 2004년 당시 국회의원 장영달의 보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2] 한국인들은 장보고가 토벌한 반란군이 고구려를 재건하고자 했던 인물의 자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러한 일부 중국인들의 인식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3]

해상왕 장보고를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최근 중국의 역사인식관은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국가였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13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무섭게 뻗어가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도 정부 및 역사학계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

그런데 장보고에 대해서 일본승려 엔닌은 높은 인의의 덕을 가진 인물로, 라이샤워는 해양상업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무역왕으로 평가하고 있다.[5] 최치원의 경우에도 신라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최치원에 대해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사라졌다.[6]

2. 상호 간의 인식 문제

이러한 역사인식의 문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상호 인식과도 연결된다. 최근(2011년) 중국에서 조사한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에 대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정적이다.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인들의 부정적 인식보다도 더 크며, 미국인들의 인식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7]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8]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은 상대국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은 편(49.8%+6.5%)이며, 중국 청년들의 경우에도 낮은 편(54.6%)과 매우 낮다(19.1%)로 높게 나오고

2) 연합뉴스, 2004년 8월 17일자
3) http://blog.daum.net/brightmoonlight/23
4) http://blog.yonhapnews.co.kr/789678/post/9156/
5) http://www.baekdunet.com/bbs/board.php?bo_table=02_3&wr_id=2658
6) “박대통령 중국서 각별한 환대 받아”, 한겨레신문 2013년 6월29일자
7) 우림걸,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보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산동대 한국학원 워크샵, 2013년 8월
8) “한중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방안”, 한국청소년저책연구원, 2011년 9월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있다. 상대국에 대한 이해 수준 역시 75% 이상이 낮거나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본(27.8%)보다 높은 28.9%로 나타났고, 긍정적 인식 역시 일본(52.9%)보다 낮은 20.0%에 그쳤다. 별 느낌이 없다는 비율은 51.5%로 북한(36.8%)보다도 높게 나왔다. 이는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37.3%)가 부정적 평가(17.7%)에 비해 높게 나온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2중적인 이미지 역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9] 즉, 한편으로는 대국이면서 자본주의 도입 이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 사회의 후진성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갖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대국'이라는 인식에는 그 자체로서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는 강대국이며 점차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가치중립적 인식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지난 한국 역사 전체를 통해 한국을 끊임없이 침입하고 괴롭힌 국가라는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10] 한국 사회 내부에는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이웃나라로부터 끊임없이 피침을 받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조선 500년 동안 1.44년에 한번, 고려 417년 동안 1.09년에 한번 이웃 국가의 침략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11] 한국 역사 전체를 통해 936번의 외침을 받았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에 하나의 피해의식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침략 또는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12] 이러한 주장은 학교 교육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강한 대중국, 대일본 민족주의적 의식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역사인식 전환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인식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역사인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이러한 역사인식의 배경에는 지극히 역사의 근대적 재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특히 국가와 주권이라는 근대적 인식을 과거의 역사에 그대로 대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 과정은 이성시의

9) 진삼,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그 특징: 수교 전후 기행문과 2005-2007 인터넷 기행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논문, 2009

10) 이삼성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침략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위협하거나 중원을 해체한 이민족, 특히 한반도 북쪽 유목민 또는 유목-농경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신라 통일 이후에는 5차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2009.

11) 조선일보, 2004년 5월9일자;

12) http://orumi.egloos.com/v/4206894. 유명한 한 대중가수는 한국의 한 메이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한국이 역사적으로 936번의 침략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중앙일보 2009년 8월8일자

“만들어진 고대”(삼인, 2001)를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성시의 주장은 고대 역사에 대한 논쟁과 해석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 시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논쟁 그 자체에서 과거의 모습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국적’, 그리고 ‘민족’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된다. 즉, 전근대 시대의 인물들에 대해 현재와 같은 국가와 국적, 민족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문제는 위에서 말한 장보고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장보고의 국적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성시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근대 국민국가 형성 이후 일정한 영토와 주권의식을 갖게 된 서양과 달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근대 이전에도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다는 의식은 강하게 존재했던 것 같다. 최치원이나 장보고의 경우에도 ‘신라’ 사람 또는 ‘신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인식이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지역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적’ 개념과 곧바로 연결될 수는 없다. 물론 신라 출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신라방’이라는 지역이 따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근대적 개념의 ‘국가’ 또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는 신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게다가 당시 한중일 사이에 언어의 차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대적 개념이 전근대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남동신 교수의 최치원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12세에 신라를 떠나서 18년 동안 당에서 활동한 최치원의 의식을 신라의 6두품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라 출신이라는 점은 이후 당에서의 관직 생활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국적’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방식의 ‘지역’ 개념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

고구려 문제에 대해도 이러한 점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 지배층과 지식인들이 전근대시대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가 한국 역사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 역사를 ‘한국만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다. 고구려에 살고 있었던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지배층도 동시대 고구려와 함께 한반도에 공존했던 신라나 백제와 동종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에

13) 남동신, 계원필경집의 문화사적 이해, 진단학보 112, 2011, 184쪽
14) 앞의 글, 190-191쪽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백제와 왜의 가까운 관계를 고려한다면 동종 의식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5)]

또한 이러한 인식은 한일 간에서 뿐만 아니라 한중 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래의 그림은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4세기 동북아시아 지도[16)]

이 지도는 한국의 한 민간인이 그린 상상 속의 지도이다. 한국 내에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고대 한국의 영역을 이 지도에서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식민지 시기에 나왔던 "환단고기"와 같은 역사책과 유사한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도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17)]

그러나 이러한 지도에서 역사적으로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곧 이러한 영역표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생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배권이나 관할권을 행사했던 지역이 아니라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활동했던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역으로보면 중국의 동쪽 해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권 내에는 한반도의 서쪽 해안이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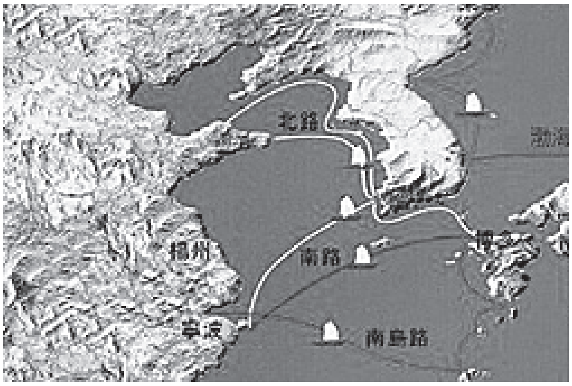
15) 여기에 더하여 고대의 국가들을 지도에 표현하면서 국경선을 긋는 것 역시 정확한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할 수는 없다.

16) http://air1244.egloos.com/m/7556560

17) 최근에 나온 "대쥬신을 찾아서"(김운회, 해냄, 2006)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인종적, 민족적 문제를 들고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거대한 대륙 내에서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들 사이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해상을 통한 연결이 생활,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2〉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림 2〉 고대의 동북아시아 해상교통로[18)]



이러한 수로를 통해서 이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통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근대 이후에도, 특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한반도와 중국의 동쪽 해안 지역과의 교류는 적지 않았다. 한국에 거주했던 화교의 대부분이 산동반도 출신이었으며, 식민지 시기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갈 때 상해는 가장 중요한 진출로의 하나였다. 또한 과거 백제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서의 교류에 통역이 필요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하나도 없는데, 이 역시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해상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내에서 근대 이후 이러한 인식은 매우 드물었다. 이는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냉전시대를 통해 아래의 〈그림 3〉과 같은 형태의 동북아시아 지도와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냉전 시대 동북아시아 지도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이래로 1970년대까지 한중, 중일관계는 끊어져 있었다. 한반도 역시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능했다. 즉, 남한은 '반도'가 아니라 '섬'으로서 존재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인식에서 중국이 빠져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반도와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었겠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다.

18)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Fhmd&articleno=6824867

〈그림 3〉 냉전 시대 한국에서 이용되었던 일반적인 동북아시아 지도[19)]

이는 결과적으로 고대 이래로 계속되었던 생활권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중국 상인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는 만약 식민지 체제나 냉전으로 인해서 과거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단절되지 않았을 경우 한 중 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탈냉전 이후 다시 복원되고 있다.

이 점은 아래의 〈그림 4〉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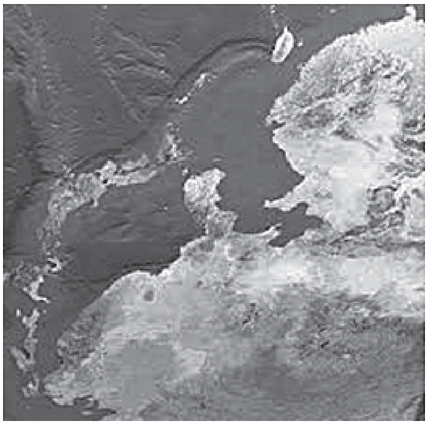
〈그림 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20)]

1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yesinwonder&logNo=86809095

20) 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04/06/11/2004061155237.html

이 지도는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바라본 지도로 이를 통해서 과거 냉전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동북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지도는 동북아시아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다시 아래와 같은 〈그림 5〉의 범위로 축소해서 본다면, 한일 간에서 뿐만 아니라 한 중 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지역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지리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결국 이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 점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동쪽 해안 지역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중국 내 조선족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인식은 아직도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4. 상호 인식의 전환 필요성

이상과 같은 논의를 보면 한중 간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근대 국민국가 안에 닫혀 있는 역사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상호 간의 인식에서도 변화 역시 필요하다. 밖에서 보았을 때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문화적, 생활적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지역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걸 모습도 유사하지만,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는 방식 역시 동일하다. 게다가 3국은 공히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이

차이점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느끼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서로 간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아마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에게 서로가 서로 닮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상적, 생활습관, 가치관에서도 서로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에 대해 '만만띠(漫漫的)', 그리고 일본인들에 대해 '혼네(本音)와 다떼마에(建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서로 간의 차이가 공통점보다 더 많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러한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또는 특이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세계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유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지역과 기후,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활방식과 습관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 게다가 하나의 지역 내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을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 내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 역시 그렇다. 최근 한국 내에서 이자까야(居洼屋)와 꿔바로우가, 중국과 일본 내에서 불고기와 갈비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공통된 식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중일 사이에서 다른 국가 내에 특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상호 간의 편견을 없애는데 있어서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 19세기 이래로 근대화에 가장 먼저 성공한 일본과 그렇지 못한 중국, 한국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식민지 시기 일본 제국 안에서 있었던 한국과 그렇지 않았던 중국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냉전 시대를 통해 한중일의 사회 발전 정도 역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그 차이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이는 현재 한중일의 도시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한중일에서의 학문적 연구는 일국 중심, 또는 양국 사이의 비교 연구를 넘어서야 한다. 지역학의 입장에서 상대 국가에 대한 심화 연구가 상호 간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 물론 현재의 지역학 수준이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대한 연구의 심화 역시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

역사학의 경우 일국사의 수준을 넘어선 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이전 동북아시아의 실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발전이나 연성권력(soft power)에 대한 연구 역시 동북아시아 차원으로 그 단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이론은 일본과 한국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지속적 성장은 냉전시대의 발전국가 이론이 수정되어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은 체계화되는 단계에 있지만,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논의가 한편으로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대응 논리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발전국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연성권력에 대한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이 논의는 발전국가에 대한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리콴유와 마하티르에 의해 제기된 아시아적 가치관(Asian Value)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적 연성권력을 만드는 작업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21] 이는 첫째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웃국가들 대부분이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제이다. 즉, 연성권력이 이웃국가들에 의해 공유되지 못할 때 그것은 연성권력이 아니라 팽창 이데올로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민주주의'가 미국을 거쳐서 이제 세계적으로 연성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라크를 비롯한 국가들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연성권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연성권력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인류 보편적, 아니 최소한 지역 내에서 보편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연성권력으로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이 일본의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연성권력이 되지 못했고, 한국의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반대로 '혐한류'를 만들어내면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렇게 일국의 단위를 넘어선 동북아시아에서의 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평화로운 체제를 가져올 수 중요한 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상호 간의 역사인식과 상호 간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1) 최근 개봉된 삼국지, 초한지, 공자 관련 영화들도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역사인식의 전환적 과제 (요약)

박태균 (朴泰均, 서울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하게 진화했다. 이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과 연구자 수의 증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한중 간에는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역사인식에서는 심각한 온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구려나 장보고를 둘러싼 논란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문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상호 인식과도 연결된다. 서로 간에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무관심 역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 사회 내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서로 모순된 이중적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 내에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인식의 배경에는 지극히 역사의 근대적 재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특히 국가와 주권이라는 근대적 인식을 과거의 역사에 그대로 대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또한 냉전 기간 동안의 관계로 인해 19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탈냉전 이후에도 상호 간의 편견이 계속되고 있다.

탈냉전의 시대는 새로운 역사 인식과 상호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 존재했던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공통의 경제권과 생활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탈냉전 이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상호 간의 이질적 인식에 대한 재인식 역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인식의 형성과 함께 앞으로 동북아시아가 공유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발전국가 이론과 연성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시아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공헌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为了东北亚历史认识的转换 (摘要)

朴泰均 (首尔大学)

1992年韩中建交以后，两国关系得到了迅速的发展。这种变化在经济方面表现的尤为突出，同时，在来韩的留学生人数和学者的人数中也可以充分看到这一点。虽然两国间的关系有了很大的进展，但两国之间还存在很多意见上的分歧。尤其是在历史认识的问题上，表现出明显的差异。关于高句丽和张保皋的争论就充分体现这一点。

这种历史矛盾还与韩国人与中国人对彼此的认识相关。两国人不但对彼此持有否定的观点，而且还表现出漠不关心的态度。此外，韩国社会中存在对中国与日本的相互矛盾的双重认识。这种认识认为，韩国在过去的历史中经历了多次外来入侵，而这种经验起到强化韩国内部民族主义倾向的作用。

但是这样的历史认识的背后存在着从近代的角度对近代以前的历史进行重新解读的思维方式。这一问题在将（近代以来）对国家的主权的认识折射到对过去历史的认识的问题中，表现得尤为突出。同时由于冷战的原因，导致19世纪以前韩国与中国之间的经济圈和生活圈发生了断层，所以在冷战后，相互间的偏见依旧存在。

在后冷战时期，我们要有新的历史认识和相互认识。有必要重新认识东北亚内部过去共同的经济圈和生活圈。当然，进入后冷战时期以来，这些变化已经发生。在此基础上，我们有必要重新认识彼此的异质性。在这一问题上，消除对与“我们”不同的他人的偏见尤为重要。

通过这些过程，我们有必要在形成东北亚地区可以共享的历史认识的同时，形成东北亚地区可以共享的研究框架。在这一点上，我们在形成发展国家论，增强软实力的同时，有必要对我们自认为是“属于我们的内容(或事物)”进行解体和重构。这种变化不仅将对东北亚做出贡献，同时还能为世界范围内的变化做出贡献。

为了加强韩中人文纽带的课题展望

“巨型分断”的超克与理想东亚的可能性
—“加强中韩人文纽带”对于区域未来的意义

张志强 (中国社科院)

一、引言：“ 加强中韩人文纽带 ”背后的时势难局

今年6月韩国总统朴槿惠对中国进行了定位为“心信之旅”的国事访问。所谓“心信之旅”被海外媒体解读为“真诚沟通和增进互信的旅程”，认为朴总统此行的根本意义在于“巩固和加深与中国领导人之间的个人信任，同时要赢得中国人的心，为今后的坦诚对话奠定基础。”同时媒体也指出，“这种互信的提升，也将成为韩中深入合作建立地区新秩序的基础，足以影响未来东北亚的地缘政治形势。”（参见新加坡《联合早报》7月1日文章《朴槿惠访华加强中韩互信》）

这次访华的一个重要成果，是双方为加强中韩人文纽带，成立作为政府间的协调机构“中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同时双方还决定增进历史研究方面的相互交流与合作，努力为两国关系发展作出贡献。“加强中韩人文纽带”这一新提法，据称是鉴于两国民间存在的对彼此的误解，“为使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发展到更高水平，缩短两国国民间心理距离、构筑更加坚实的信任关系”而提出的。

“加强中韩人文纽带”是一个意涵丰富的提法。首先，诚如朴槿惠总统所表示的，“韩中两国历史和文化相通”，这是中韩两国之间切实存在的“人文纽带”，不过“加强中韩人文纽带”这一说法，却也从另一种意义上承认了当前存在于中韩之间的误解乃至不信任的状况。“加强中韩人文纽带”提法的目的，即意在强调通过中韩之间固有人文纽带的强化来消除误解、增进感情、加深互信。因此，在我们看来，“加强中韩人文纽带”这一提法的提出，在一定程度恰恰是对当前存在于中韩之间的愈益严重的情感疏离和互信弱化状况的准确反映。

我们知道，中韩之间目前的贸易额已经相比于建交之初增长了40倍，中国是韩国最大的贸易伙伴，韩国则是中国第三大贸易伙伴，而且这种状况会在今后更加发展。但就是

在经济关系如此热络的状况下，中韩两国民间却出现了需要认真面对的心理距离和相互误解，需要重新强调潜藏于两国之间的人文纽带来重塑信任，这才是“加强中韩人文纽带”这个话题中牵涉到需要两国学者深入思考和严肃对待的问题。

严格说来，这种“政冷经热”的状况是当前中国对外关系当中普遍存在的问题，不过在周边国家，特别是在东亚区域表现地更为突出而已。所谓东亚区域，也常常被称之为汉字文化圈、儒教文化圈，是一个具有高度相同辨识度的区域，正如法国学者汪德迈所说，在前现代历史上，这是一个具有高度内聚力的区域。而在近代历史上，这个区域中的人民也都曾经受过全球帝国主义的压迫，也都经历过民族解放和现代化赶超等大致相同的历史命运。以上这种状况的出现至少说明，在原本应该具有更多文化和历史亲近性的东亚区域，那些原本能够带来区域内聚力的文化因素和历史命运，却并没有在当前带来相应的情感呼应和理解信任。

那么，我们不禁要追问，这样一种悖论现象何以会发生呢?

当然，单就中韩之间而言，如果仅从国际关系的角度来看，正如有韩国学者所指出的那样，很多韩国人对中国未来的远景“既期待又担忧”的矛盾心态的核心在于朝鲜问题，尽管建交20多年来两国关系获得极大发展，但近来的天安舰事件和延坪岛事件却引发了“中国威胁论”。不过，如果是由具体事件引发的“中国威胁论”，当然也可以通过另外的具体事件或加重或缓解。问题在于，何以这些具体的事件总会不断引发类似的担忧呢？在我看来，普遍存在于区域内部的这种“既期待又担忧”的纠结心态，不仅不是具体事件的后果，却可能是一种导引对事件认知态度的基本社会事实。加强人文纽带需要我们深入理解两国乃至区域内部的人文传统和精神世界，而进入人文传统和精神世界的深度，取决于我们对当代现实的理解的高度，以及我们对两国关系乃至区域未来的关心的深切程度，这就需要我们摆脱从单纯因果关系的角度关心现实的认识态度，而是能够深入人文学应该面对的情感、精神和历史世界，给出合情合理地解释，并尝试通过对历史的解释，来导引出我们对于未来的更为深远的想象来。这或许正是“加强人文纽带”向两国人文学者提出的任务。

二、东亚内部的“巨型分断”：对白乐晴观点的阐释

2008年，白乐晴先生在台湾曾做过一个题为《东亚和解的路障》的演讲，他在演讲中讨论了东亚存在着的各种分断状况，这些分断状况当然主要是指冷战后依然存在着的如

两韩之间以及中国大陆与台湾之间的领土分断，我们知道白先生曾把两韩之间的分断状况上升到一个分断体制的高度来加以描述，但在这个演讲中，白先生在此之外特别讨论了存在于东亚内部的他称之为“巨型分断”(acro-division）状况。所谓“巨型分断”，白先生的定义是“具有较长历史根源的大规模分断”。在他看来，在东亚最重要的“巨型分断”有两个，一个是“日本与其余地区”之间的分断，一个是“中国与其余地区”之间的分断。“日本与其余地区”之间的分断，根源于明治维新之后的“脱亚入欧”的国策。“脱亚”意味着摆脱它所在的落后区域，“入欧”则意味着加入一个先进的区域，成为其中的一员。在这里，“亚洲”和“欧洲”已经不仅仅是区域的地理空间，而是一个具有强烈价值意味的意识形态符号。正是在这种先进与落后，甚至是文明与野蛮的对立中，日本思想史上原本具有朴素亚洲感情的亚洲主义终于蜕变为大陆主义，成为侵略和殖民东亚的意识形态。尽管日本帝国主义的历史终结于1945年的败战，但这种意识形态却并没有终结，不过二战后的日本所要加入的先进行列已经不是欧洲，而是美国。正是通过与美国直接的特殊关系，这种意识形态继续被实际落实着。日本通过不断地赶超与学习始终坚持代表着所谓先进的文明世界的世界历史方向，成为那个先进文明世界的代理者。正是因为这种意识形态的持续存在，在我看来，日本与其余地区的分断，实际上也已经构成为一种“体制”。这种体制或许并非如两韩之间的分断体制那样是一种对立面之间相互依存的政治、经济、社会之间的共生结构，但却是在一种意识形态结构的意义上固化为一种认识论“体制”：文明与野蛮、先进与落后的对立结构已经被意识形态的价值标准固化为一种潜在的思维模式，成为一种在一元论普遍主义之下的非此即彼、二元对立的认识论模式。我们知道，这种发生在意识形态领域里的“分断体制”，是经由近代史学和近代社会科学，通过进步史观、实证主义、主体哲学和民族主义等思想装置不断塑造的结果，它不仅是日本社会的意识形态预设，而且也已经成为弥漫于后发展国家内部的自我意识。实际上“日本和其余地区”之间的分断在一定意义上不过是发生在后发展国家自我意识当中的分断现象的象征而已。（与其说这种自我意识分断是现代化意识形态的内容，莫如说它是欧美帝国主义精神霸权的产物。）

关于“中国与其余地区”之间的巨型分断，根据白先生的分析，这主要是由于中国在区域历史上的独特地位以及在地理空间规模上的巨大导致的。在他看来，“中国几乎无法算是一个普通的民族国家。由于中国的大小、历史、内部的多元性等，它跟其他东亚国家相较并不是相等的民族国家，也不可能相等。而当中国带着自己特有的民族主义等特质，开始采取或选择采取普通民族国家式的行动时，它跟其他国家不相等的这项事实，就变成严重不调和与不平衡的来源之一。”（《东亚和解的路障》，《白乐晴：分

断体制、民族文学》台北联经，270页，2010年）也就是说，中国与其余地区的分断，是由于中国这个国家由于其历史传统而带来的独特国家性质以及其地理空间巨大规模而带来的与其余地区之间的不相等、不对称、不平衡状况。这也就是说，在一个以民族国家为构成单位的现代世界里，国际之间遵循的是无论大小主权平等的原则，但中国却由于其自身历史和空间规模上的独特性，在事实上根本无法作为一个民族国家，也不可能完全自我约束以真正遵循与他国完全对等的原则。实际上，这种说法背后的潜台词是，传统中国是中华帝国，是整个东亚区域的中心，尽管它与现代帝国主义不同，但它在现代却仍然无法完全摆脱其帝国的习性，或者说它总是具有成为帝国的潜质。在一个以民族国家为基本政治单位的现代东亚世界里，中国只能算是一个异数，而且是危险的异数。因此，中国与其余地区之间的巨型分断，实际上就是地理空间规模上的大与小之间的不相称，是前现代的国家性质与现代民族国家之间的不适应，是历史上的中心边缘秩序与现代去中心的国际秩序之间的不调和。

如果我们把白先生指出的这两种东亚内部的巨型分断结合起来，我们就会发现，“中国与其余地区”之间的分断中的其余地区当然主要是指日本和韩半岛，而“日本和其余地区”之的分断中的其余地区当然主要是指中国和韩半岛。因此，发生在东亚内部的巨型分断，就其实质而言不过是中国和日本之间的巨型分断，其中韩半岛则处于居中的微妙位置，一方面正如白先生所言，由于亲日与亲美派在南韩统治阶级中占据主导地位，因此“南韩也倾向对亚洲其余地区采取”如日本一样的“暧昧立场”，另一方面，从现代历史来观察，北韩则当然更多地接近于中国的态度。也正是在此意义上，我们或许可以说，发生在中国与其余地区之间的分断主要是以中国与日本之间的分断表现出来。同样，也正是在这个意义上，如果我们接受了“日本与其余地区”的分断背后的意识形态预设，那么我们看待“中国与其余地区”的分断的态度，便会将其理解为一种先进与落后之间的分断，而且是中国与日本之间的落后与先进之间的分断。在一定意义上，中国内部的现代化派们，从晚清直至当代也都是如此看待中日关系的，即使是在遭受日本侵略的时代，那也不过是“落后就要挨打”的铁血证明。

不过，发生在“中国与其余地区”之间的分断，特别是与日本的分断当中，其实还存在另一种分断的内涵，那就是所谓落后对所谓先进的抵抗。正是这种抵抗，其实也同样构成了“日本与其余地区”分断的内涵之一。因此，在看待“中国与其余地区”的分断，特别是与日本和韩国之间的分断时，我们不能忽视另一个重要的历史维度，那就是“革命”的维度，实际上这也构成了一个重要的理解东亚区域现代史的价值维度。没有这个维度，我们便无法理解中国，当然也无法理解北韩。于是，我们可以推导出“中国

与其余地区”之间分断的另一层内涵，那就是关于历史观的分断。这不仅包含着对前现代历史的基本看法上的分断，更包含着对于现代历史的基本看法上的分断。

实际上，正是由于这些历史观、价值观和意识形态上的深刻分歧，使得“中国与其余地区”之间的分断成为一种挥之不去的心理纠结和情感隔阂。那些原本促成了前现代东亚世界的内聚力的文化和历史因素，在当前不仅无法自在地发挥其人文纽带的作用，甚且成为被分断所利用的资源。以儒教这个可以作为区域文化象征的共享资源，在70、80年代“日本模式”风行和亚洲四小龙崛起的时代，则成为解释其成功模式的传统因素，于是有所谓“儒教资本主义”论；同样的，在当代中国则出现了一种“儒教社会主义”的思潮，其思想动机则是为“中国模式”的成功经验寻找历史和文化根据。同样的文化资源却被运用于解释两种截然不同的历史后果，这说明，即使是同样的文化传统不仅不会必定化解“分断”状况，而且还有可能被现实中的“巨型分断”所利用。

这样的事实让我们清醒地意识到，感情上的亲近并不会因为看起来的相似而自发产生，即使自发产生也不会持久。只有经过“感而遂通”的感通力来为其疏通渠道，通过感通中的相互理解，通过感通所启发而来的智慧，来抵达对方历史中的困难与苦痛，感情的兴起才有可能沛然莫之能御，而通达他者情感的能力本身就是一种深刻的关心他者的道德情怀。因此，在我们看来，感通力的培养是加强人文纽带的关键。只有在我们具备了能够通达对方痛苦的能力时，彼此之间的相互认识和理解才会是顺畅的。用儒家的术语来表达，这是由仁达智、以智通仁的境界。因此，为超克东亚内部的巨型分断，我们首先需要一种认识论的变革，重建一种“仁智合一”的感通能力。

三、如何超克东亚内部的巨型分断：“中道主义”智慧与意识形态批判

在这里我们还是要以白乐晴先生的思想工作带给我们的启发来开始我们关于如何超克“巨型分断”的思考。白乐晴先生特别强调“智慧”相对于现代科学知识的优越性，但“智慧”并不是对科学的简单否定，应该说“智慧”是一种对科学知识的调节和制约的能力（柳浚弼语）。或者在我们看来，“智慧”就是导引科学认知的一种道德能力，因为有这样一种道德能力的导引，科学知识才有可能成为对人类生活真正有意义的洞察而不是对人类的异化。在我们看来，“智慧”更是破除以科学的名义而产生的意识形态观念桎梏的工具。白乐晴先生提出一种“变革性的中道主义”就是这样一种智慧，一种“转识成智”的智慧。在我们看来，“中道主义”的认识论具有一种瓦解现代诸种意识形态迷误、超克“巨型分断”的智慧潜能，值得我们深入挖掘和大力阐扬。

所谓“中道”是佛教中观学说中为破除“戏论”（概念或理论）执着而采取地一种准确呈现和认识现实的方式。因此，所谓“中道主义”就应该是一种能够破除任何意识形

态执着，还原意识形态的缘起性质，同时又能够根据现实需要合理安排和运用意识形态的态度与能力。所谓“中道主义”认识论，就是相对化任何一种绝对真理的一元化宣示同时又能够根据条件恰如其分地安顿它的认识论。“中道主义”对一元绝对真理的相对化，并非取消其真理性，而是恰当地安排其真理性。根据这种“中道主义”的认识论，我们是要突破意识形态观念对现实的遮蔽，如其本来地呈现和认识现实，而这就要求我们能够恰如其分地驾驭和把握意识形态对于现实的有限揭示作用，既不会为其有限的揭示所带来的视野局限所蒙蔽，又能够经由意识形态的相对真理性，抵达一定的现实。因此，在我看来，“中道主义”的认识论，更为重要的作用在于开放出了更高地把握现实的主体可能性，使得在对现实更高且更全面的观照中主体能够始终把握价值创造的权能，而不为任何一种意识形态的执着所俘虏，最终成为价值自主自立的主体。这种主体不再是近代哲学自我肯定中的自我同一的主体，而是始终处于无与有的辩证关系中能够无中生有的创造性存在，是一种在价值创造中不断进行着创造的机能性主体，它永远向未来开放着自身的可能性，在创造中尽性知天。

根据这种“中道主义”的认识论，那种曾经主导东亚区域的现代化意识形态强权，便有可能被相对化。在先进与落后、文明与野蛮的现代化意识形态中，先进和文明是通过对自我的简单否定实现的，是奴隶力求改造自我以变成主人的过程。发生在东亚的具有一定普遍性的“脱亚入欧”的赶超逻辑，便是这样一种丧失内在张力的简单自我否定的发展模式。“中道主义”认识论的批判性意义其实在于，它并不是要对这种简单自我否定的赶超意识形态加以简单地否定，而是要从中拯救出能够掌控赶超发展的主体。发展是必要的，但发展不是通过放弃自我来实现的，发展恰恰是对自我的发展。

对现代化意识形态批判性转换的一个历史效应，是将我们从西方所宣示的普遍主义的一元论的世界历史发展模式中解放出来，再次确认自我的位置：亚洲或东方不再是西方或欧洲确认自我的依附性他者；另一个直接效应便是把西方从普遍主义的一元论霸权中回置回西方，只有把西方作为西方来对待，东西方之间才真正有可能在各自文明的根源处，重新寻找对话和沟通的可能性，从而为世界的未来创造更为丰富的可能图景。

对现代化意识形态的批判性转换的另一个历史效应，则是让区域内的各国不再根据普遍主义的价值秩序来安排区域内部的秩序，而是让我们各自放平心态来看待各自的发展模式，认识到不同发展模式是不同主体根据自身条件确立的发展自己的方式而已。

“中道主义”的认识论也可以批判性地转化以“抵抗”为主题的革命意识形态。在东亚近代史上，相对于日本的“脱亚入欧”的意识形态，出现了另一种以“亚洲”为本位的抵抗欧洲和帝国主义的论述和行动。“亚洲”这个地缘空间观念的出现本来是欧洲用

来确认自我时所设定的他者，因此，以“亚洲”为本位进行地反抗，便包含了一种吊诡的逻辑，它既是对欧洲设定自己的接受，但同时又尝试去反抗这种设定的特定内容。相对于欧洲对亚洲的他者想象，这种“亚洲”观念是在“欧洲”压迫下的亡国灭种危机中的反抗连带的联合体，一种“否定性的联合体”（Negative Unity）（参见柯瑞佳Rebecca E.Karl《创造亚洲：20世纪初世界中的中国》）。因此，这样的“亚洲”是一个针对共同的敌人而形成的政治行动的联合体，我们当然可以设想，如果对立面不存在，政治行动的“亚洲”当然也便失去了存在的根据。正如韩国学者柳浚弼所指出的那样，如果被压迫者的抵抗当中缺少了一个自我抵抗的环节，在对他者的否定中丧失了自我否定的环节，那么这种抵抗将不可避免为主奴辩证法所俘虏：奴隶对主人的抵抗仅仅是为了主奴地位的转换。这与那种试图通过变成主人来转换地位的做法并无实质上的不同，同样缺乏价值转换性创造的意义。真正具有价值转换性创造的抵抗，不仅是去抵抗压迫者，更要通过自己的抵抗来彻底转换压迫和被压迫的价值秩序彻底根除压迫，从而谋求对世界秩序的根本改造。而要做到这一点，必须有一种价值的自觉，在抵抗中始终保持着自我抵抗的醒觉意识，这才有可能产生出一种全新的主体和全新的世界秩序。

这种在否定和自我否定中生成的主体，本身即是一种价值和文化的原理。它总是把他者作为自我成长的契机，同时也把自我的成长作为他者成长的条件，这正是“以他为自”的主体生成原理，而它同时也是一种道德的原理。在“以他为自”的道德互动中不断扩展自我生成的广度和厚度，同时也赋予他者的生成以同样的广度和厚度。在“以他为自”的道德互动中真正落实的是一种“齐物平等”的价值秩序。

对这种“以他为自”的主体生成原理的发明，会从根本上瓦解民族主义意识形态的根基。民族主义的意识形态是现代化意识形态的一个伴生物，它是近代主体哲学在民族层次上的展现。它以一个绝对确定性的自我为开端，中间尽管可能经历否定的环节，但最终仍将会以否定之否定的形式在更高的层次上再次确认自我的确定性，它是一个螺旋形的孤立且封闭的结构：起点即是圆满，是包含了所有潜能的圆满，终点也是圆满的，那是潜能实现后的圆满。这样一种主体其实就是神，而这样的民族主体自然是一个神话。这样的主体或民族是历史的前提，而不是历史的结果。而“以他为自”的主体生成原理，则经由一种源流互质的程序，是在源流之间的不断地相互质询中逐渐形成而且变化的主体意识，它是历史的后果，却非历史的前提，因为并没有一种贯穿历史始终虽变而不变的主体，成为历史的前提。

“以他为自”的主体生成原理会要求我们正视历史，因为历史是主体形成的条件，而民族主义的意识形态则只关心民族，历史不过是民族神话展演的舞台。正视历史，就不

会放过任何一个历史的细节，更不会有意回避任何一段历史，因为历史的每个细节都有可能蕴藏着理解我们自身的秘密。就东亚区域而言，正视历史就意味着要关心前现代历史和现代历史的连续，对于现代与前现代的断裂，也必须在历史的连续理解中才能真正获得解释。让我们斗胆以朝鲜历史为例，为了理解现代韩国史，就无法回避五百年李氏朝鲜的历史，在东亚历史上还没有一个王朝可以持续500年以上，这本身就是一个政治成就，值得我们深入地理解，其中一定蕴含着丰富的朝鲜历史和政治的智慧。理解李氏王朝就能够深入认识14-19世纪东亚政治秩序变迁的实质，因而便不会轻易被一种多元封闭的民族主义想象所局限，丧失重建新东亚秩序的智慧。对于中国也一样，只有把对现代中国的理解纵深深入于三、四百年前，才能够真正把握中国现代历史变迁的动力。我们对当代现实理解的高度有多高，就决定了我们深入于历史的深度有多深。在某种意义上我们可以说，未来东亚的本质取决于我们对东亚历史一遍遍诠释的深度和广度。这种历史智慧是东亚文明的重要精神财富。

根据民族主义的意识形态，每个民族都是同质且封闭的，因而异民族之间的异质性便可能导致真正沟通的不可能；在封闭同质的意义上，民族之间是不分高低贵贱一律平等的，但在不可沟通的意义上，民族之间的关系便也有了霸权生长的空间。更为重要的是，民族之间的多元平等是一种抽象的形式平等，它并不能取消民族之间在规模和实力上的实质不平等。民族之间的抽象平等只能是协调国际关系的国际法准则，却不能真正成为协调民族关系的政治准则。在现代条件下强权政治盛行的原因就在于此，民族主义无法真正带来一种公正的国际政治。

公正的国际政治秩序的实现，恰恰需要我们破除民族之间抽象平等的意识形态误区，凭借一种政治智慧的彻底性来正视规模和实力上的大小差别。差别的存在是一种自然的和历史的事实，但差别却并不必然意味着不平等，反而可能是带来真正平等的条件。严格说来，真正的平等不仅不是抽象的“一往平等”意义上的普遍平等主义，也非抽象的“自在平等”意义上的多元平等主义，而应该是发生在个别与个别、具体与具体之间的“不齐而齐”的价值对等性意义上的平等，这是一种因为差异所以平等的平等性，是一种“尽性”而非“适性”意义上的平等。“各尽其性”与“各适其性”的区别，在于是否能够给予个体一种充量发展且自作主宰的条件，在于是否接受和承认外在秩序所规定的“性”的内涵；只有这种意义上的平等性才真正建立起了个体之特别性的价值。（参见张志强《“操齐物以解纷，明天倪以为量”：章太炎齐物哲学的内涵与旨趣》。）

因此，正视差别就成为一种伦理要求，同时它也是一种政治智慧。正视大小的差别，不仅是对小者的伦理要求，更主要的是对大者的伦理要求。大者正视自己的“大”，

意味着大者对“大”的责任的自觉，是大者对自身媒介作用之“大”的自觉。在“不齐而齐”的齐物平等世界里，“大”意味着“媒介”作用之大，同时这也意味着责任的重大。

正视历史，意味着去正视主体形成的复杂条件；正视差别，意味着去正视差别带来的不同伦理要求。正视历史和正视差别，才是产生出创建更为合理合情的政治秩序的智慧根源。

最后，我们还是要回到白乐晴先生的智慧创造上来。白先生曾经提出过一个定义第三世界的方式，他说：

“如何定义第三世界，这点其实一直是不确定的，……我主张，第三世界的用意，或者说把第三世界概念提出的用意，并非在于将世界分成三块，而在于将世界视为一个单一整体，但我们采取的不是所谓第一或第二世界的强盛国家观点，而是从普通民众出发的观点。这就是我试图形成第三世界观点的方式，如此一来，就没有需要去争论哪个国家属于哪一部分的世界。”（白乐晴《全球化时代的第三世界及民族文学概念》，《白乐晴：分断体制，民族文学》，191页。）

在白先生看来，第三世界并非是一种划分世界的方式，而是一种定义整个世界的方式，所谓第三世界是从一种不同于强盛国家的视野和相应的价值出发来定义世界的方式。第三世界意味着一种新的看待世界的方式，一种新的结构世界秩序的价值观点和政治观点。我们期待着，经由我们对东亚内部巨型分断的超克，经由我们对东亚内部人文纽带的再次强化，经由“转识成智”的具有实践效能的认识论转化，能够建设一个理想的东亚，并将理想的东亚作为建设一个理想世界的起点。这或许是我们讨论“加强中韩人文纽带”对于东亚乃至世界未来的意义所在。

为了加强韩中人文纽带的课题展望

“巨型分断”的超克与理想东亚的可能性
—“加强中韩人文纽带”对于区域未来的意义 (摘要)

张志强 (中国社科院)

“加强中韩人文纽带”的提法意在强调通过中韩之间固有人文纽带的强化来消除误解、增进感情、加深互信。因此，“加强中韩人文纽带”这一提法的提出，在一定程度恰恰是对当前存在于中韩之间的愈益严重的情感疏离和互信弱化状况的反映。不过，中韩之间的情感疏离和互信弱化的状况并非偶然，在一定程度上是东亚内部“巨型分断”的征兆性反映。本文尝试对东亚内部“巨型分断”的内涵和效应进行分析，试图建立一种超克“巨型分断”的认识论框架，对塑造了东亚内部“巨型分断”的意识形态基础进行深入批判，来为中韩两国乃至东亚的未来的理想秩序，提供一个理论的和历史的参照。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요약)

"거대분단"의 극복과 이상적 동아시아의 가능성
– "한중인문유대강화"가 지역의 미래에 주는 의미

장즈창 (張志强, 사회과학원)

"중한인문유대의 강화"라는 제안은 중한간 고유의 인문적 유대의 강화를 통해 오해를 불식하고, 정서적 유대를 증진하며 상호신뢰를 증가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중한인문유대의 강화"라는 제안이 제출된 것은 바로 어느 정도에서는 목전의 한중 간에 존재하는, 나날이 엄중해지는 정서적 소원과 상호간 약화된 신뢰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간의 정서적 소원과 상호 신뢰의 약화라는 현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느 정도에서 그것은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 분단"의 증후성 반영이다. 본문에서는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거대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론적 틀을 수립하며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을 조성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초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중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 미래의 이상적 질서를 위해 이론적 역사적 참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시아를 흐르는 문화의 강물: 아시아를 보는 아시아의 시선은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났을까? (요약)

강명구 (姜明求, 서울대)

팔레스타인 출신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란 책을 통해 서구의 문학과 예술이 오리엔트를 어떻게 편견과 왜곡해 왔는지를 밝혔다. 오리엔트에 대한 뒤틀린 모습에 대한 사이드의 비판은 지금도 통렬하다. 그런데 사이드의 저술이 나온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시아인들은 서구가 만들어낸 편견과 왜곡을 벗어나서 스스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어 내기는 한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힌두교, 회교, 불교의 이미지, 타지마할과 뭄바이의 빈곤한 거리장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 그리고 히잡과 이슬람 지하드 등등. 동남아는 발리, 방콕 등등 관광의 장소 정도. 아니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인도 혹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등. “우리나라 60년대 같아요,” “여전히 625 직후 서울 모습 같아요” 몽골과 동남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들. 티벳과 인도에 대한 여행하는 사진이 보여주는 이미지들. 라마교의 어린 승려, 사막과 초원을 이동하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신혼여행지로서 발리, 푸켓 등 동남아 해변의 휴양지들.

‘과거로 간 미래’라든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은 서구가 만든 오리엔트와 여전히 우리 내부와 아시아 사람들 모두에게 지속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 안의 중국,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등에 대한 고정관념(스테레오 타잎)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대단히 부분적이고, 단편적 경험에 근거해 있기에 불완전하다. 또한 다른 인종과 종교, 사람살이에 대한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이건 단순히 이미지, 편견, 인식의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장 좋은 사례가 중국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일본을 합친 교역량을 훨씬 웃도는 경제교역국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를 보노라면, 아전인수와 지극히 파편적인 사실과 사건들로 넘쳐난다. 중국에는 달걀에도 짝퉁이 있다는 조롱, 납 성분이 묻어 나오는 수산물, 어린아이를 위협하는 분유파동 등등. 원산지 중국산 표시가 되면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반으로 뚝 떨어진다. 정말 중국의 농산물, 수산물은 모두 그렇게 형편없고, 위험하고 오염된 것일까. 중국내부에서도 식품안전이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왜 한국의 9시 뉴스는 중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어디에 가도 널려있는 값도 싸고 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은 왜 수입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는 것일까.

중국사회과학원은 중앙정부 국무원 산하에 있는 직할 싱크탱크로 유명하다. 북경대, 칭화대 못지 않은 규모와 예산을 사용하는 사회과학원에서는 매년 청서(藍皮書라고 한다) 시리즈를 3백여권 씩 발행한다. 연감과 이슈보고서 중간쯤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을 보면 〈중국범죄문제 2012〉, 〈중국여론동향 2012〉 〈북경주택문제 2012〉 와 같은 정치사회, 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의 문제를 다룬다. 이런 시리즈를 매년 3백여 종씩 발간하고, 중요한 책들은 100여 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연다. 중국중앙정부의 공식문건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책들이고, 이걸 보면 누가 어떤 문제의 전문가이고, 중국정부가 어떤 정책과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 이런 동향을 알려주고, 공유하는 언론도 학술활동도 내가 아는 한 아직 없다.

'아시아의 세기'라는 말은 1988년 등소평과 라지브 간디 수상이 만났을 때 사용했다고 하는 게 정설로 되어있다. 2011년 아시아개발은행은 2050년에 아시아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명목이 아니라 구매력 지수로 환산했을 때 유럽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3백 년 전 아시아가 가졌던 경제력을 회복할 것이라 예측했다. 만일 이 예측이 맞다면 아시아의 세기라는 말이 나오고 62년 걸리는 셈이다. 그런데 아시아인들은 여전히 서구가 만들어준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인식하고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아시아의 세기를 운위할 수는 있는 것일까.

이 글의 목적은 아시아의 시대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 위에서 중한 문화교류의 새로운 전망을 성찰해 보는데 있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아시아 내부에서 transnational 하면서 trans-local한 문화의 구성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후반부에서는 아시아에 새롭게 흐르는 대중문화 현황을,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대중음악 부분 초점을 맞추어 개관한다. 마지막 절에서 실증적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아시아에 새롭게 생겨나는 trans-localism으로서 새로운 문화의 강물이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流淌于亚洲的文化之河：亚洲人看待亚洲的视线是否摆脱了东方主义？(摘要)

姜明求 (首尔大学)

流淌于亚洲的文化之河：亚洲人看待亚洲的视线是否摆脱了东方主义？

出生于巴特斯坦的爱德华•萨义德在其著作《东方主义》中，指出西方的文学与艺术长期以来是如何歪曲东方，并形成对东方的偏见的。萨义德对东方主义的这种批判至今依然十分尖锐。萨义德的这本著作已经发表了三十多年，但是我们亚洲人是否已经摆脱了西方人编造的偏见与歪曲，形成了自己对亚洲的理解呢？

换句话说，当我们韩国人提到印度、中东、东南亚的时候，会想起什么画面呢？虽然每个人想到的可能会不一样，但大部分内容是共同的。提到印度和中东，大多会想起印度教、回教、佛教的画面、泰姬陵和孟买的贫民街景象、伊拉克和阿富汗的战争、（伊斯兰女性的）头巾和伊斯兰的圣战等等内容；提到东南亚，会想起巴厘岛、曼谷等度假景区或者印度、印尼、缅甸等最近成为我国输出市场的国家。在蒙古和东南亚旅行的韩国人会不经意间说出“（那些地方）就像我国的60年代。”、“（那些地方）就像刚经历了6•25 的首尔。”等等。去西藏和印度旅行的人们最常拍下的画面可能是喇嘛教年轻的僧侣、穿梭于沙漠与草原的中亚游民、充满浪漫与爱意的巴厘岛、普吉岛等东南亚的新婚旅游胜地。

我们看待“成为过去的未来”或“遵循自然规律的生活状态”的视线，如同源于西方的东方主义，依旧存在于我们亚洲人的内心之中。这并不是说，我们对东南亚、西亚、中亚以及（我国所在的）东亚的中国、日本、蒙古的成见（stereotype）是错误的，但这种成见源于局部的、片面的理解，所以必定不是完整的。同时，这种成见将导致对其他人种和宗教、生活产生整齐划一的认识。而这种认识不仅仅局限于想象、偏见、认识层面的问题上，而会成为产生政治与经济矛盾的重要原因。

最好的例子就是我们对中国的成见。中国于韩国而言，早在几年前就超过了美国和日本，成为了韩国最大的经济合作国。但是，韩国媒体对中国的报道依旧局限在极其片面

的事件或情况上。比如，中国连鸡蛋也有假的、水产品含铅、威胁儿童的奶粉风波等等。只要产地是中国，农产品的价格就会折一半。中国的农产品、水产品就真的那么一文不值、污染问题严重吗？虽然在中国内部也存在食品安全问题，但韩国的9点钟新闻为什么不问问韩国不进口中国大中小城市随处可见的既便宜又新鲜的水果的原因呢？

中国社会科学院以中国中央政府-国务院-直属的智囊团著称，拥有不亚于北京大学、清华大学的规模与预算。社科院每年发行300余本蓝皮书。这些蓝皮书的性质介于年鉴与报告书之间。从其标题《中国犯罪问题2012》、《中国舆论动向2012》、《北京住宅问题2012》可以看出这些蓝皮书的内容涵盖政治、社会、经济、文化等有关中国社会方方面面的内容。每年发行的蓝皮书达300余本，其中重要的书籍在发行之前还进行百余次的公开讨论会。将这些书称为中国中央政府的正式文件也丝毫不逊色。阅读这些内容，可以清楚地了解到各个问题的专家阵容和政府对这些问题的看法。但是，据我所知，在韩国国内还没有任何媒体、学术活动介绍和分享中国的这种动向。

“亚洲的世纪”这一词汇一般被认为是1988年邓小平与拉吉夫•甘地会面时第一次使用的。2011年亚洲开发银行预测，2050年亚洲地区的人均国民收入转换成购买力指数时，会达到欧洲的水平，将有可能恢复300年前亚洲的经济实力。如果这一预测是准确的，那么将是在“亚洲的世纪”这一词汇出现的62年之后。但是亚洲人难道不是依旧按照西方人设定的框架来看待自己吗？如果不对自身进行充分的反省，能有效地经营亚洲的世纪吗？

本文的目的是，重新认识亚洲的时代，在这一认识的基础上，重新展望中韩文化的交流。论文主要由两部分组成。前半部分是关于亚洲内部跨国的（transnational）和跨地域的（trans-local）文化构成方面的理论分析。后半部分中，通过对电影、电视剧、大众音乐进行分析，考察亚洲地区新的大众文化的现状。最后一部分内容中，将探讨实证分析的内容能否被称为亚洲地区新兴的跨地域（trans-localism）的文化之河。

PROFILE

● 하영선 (河英善)

서울대학교 문리대 외교학과 학사, 석사
워싱턴 대학 박사
〈현〉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주요 경력]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1980~2012)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공동위원장 (2008~2012)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 (2008~2012)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2013~)

[주요 연구성과]
저서 :
『역사속의 젊은 그들 :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2011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 1991~2011』 2012
편저 :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 복합과 공진(2013)』
『근대 한국 사회과학 개념형성사2』 2012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2012
『한일 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2012

『한일 신시대와 경제협력』 2012
『변환의 세계정치』 2007/2012
『위기와 극복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2011
『12시간의 통일이야기』 2011
『북한2032 : 북한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2010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2010
『근대 한국 사회과학개념 형성사』 2009 등

河英善

首尔大学 文理大学 外交学专业 学士，硕士
华盛顿 大学 博士
<现> 东亚研究员(EAI) 理事长
首尔大学 政治外交学院 名誉教授

[主要 经历]
首尔大 外交学 教授 1980~2012
首尔大 国际问题研究所 所长
首尔大美国学研究所 所长
韩国和平学会 会长
韩日新时代共同研究项目 共同委员长 2008~2012
总统外交安保咨询团 2008~2012
总统国家安保咨询团 2013~

[主要研究成果]
专著 :
『历史里的年轻的他们:18世纪 从北学派到21世纪复合派』 2011
『河英善 国际政治专栏:1991-2011』 2012
编著 :
『2020: 韩国外交 10大课题 : 复合与共进(2013)』

『近代韩国社会科学概念形成史2』2012
『复合世界经济论：战略与原理，还有新的秩序』2012
『韩日新时代与东亚国际政治』2012
『韩日新时代与经济协力』2012
『转变的世界政治』2007/2012
『危机与克服：经济危机以后的世界秩序』2011
『12小时的统一故事』2011
『走进北韩先进化的共进战略』2010
『21世纪新同盟：从冷战到复合』2010
『近代韩国社会科学概念形成史』2009 等

● 송민순 (宋旻淳)

전 외교통상부장관 • 국회의원

[주요 경력]
제9회 외무고시 합격 1975. 05
미국 하버드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1994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비서실 국제안보비서관 1997. 08
외교통상부 북미국 국장 1999. 07
주폴란드대사관 특명전권대사 2001. 05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 실장 2004. 08
외교통상부 차관보 2005. 01~2006. 01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 2006. 01~2006. 10
제34대 외교통상부 장관 2006. 12~2008. 02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08. 05~2012. 0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2010. 06~2012. 05

宋旻淳

[主要经历]
第九届 外交官考试 通过 1975. 05
美 哈佛大学 国际问题研究所 研究员 1994
总统秘书处 外交安保秘书处 国际安保秘书官 1997. 08
外交通商部 北美局 局长 1999. 07
驻波兰大使馆 特命全权大使 2001. 05
外交通商部 计划管理室 室长 2004. 08
外交通商部 助理 2005. 01~2006. 01
总统秘书处 统一外交安保政策室 室长 2006. 01~2006. 10
第34任 外交通商部 部长 2006.12~2008. 02
第18任国会议员（比例代表/民主党）2008. 05~2012. 05
外交通商统一委员会 委员 2010. 06~2012. 05

● 천펑쥔 (陈峰君)

[주요 경력]
오랜 기간 동안 아태평양 분야의 교육과 연구 진행
중국동맹협회이사, 중국아태학회이사, 중국남아시아학회 상무이사 등 역임
〈현〉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

[주요 연구성과]
『아태대국과 한반도』, 『당대 아태정치경제 분석론』
『동아시아와인도 : 아시아의 2개의 현대화 시스템』 등 10여권의 서적 발간
국내외의 중요학술지에 100여편의 논문 발표

陈峰君

[主要经历]

长期从事亚太方面的教学与研究

中国东盟协会理事、中国亚太学会理事、中国南亚学会常务理事等职。

<现>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博士生导师

[主要研究成果]

《亚太大国与朝鲜半岛》《当代亚太政治经济析论》《东亚与印度：亚洲两种现代化模式》等十余部著作。在国内外重要学术刊物上发表百余篇论文

● 전성흥 (全圣兴)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

〈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부교수

[주요 경력]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대학 객원교수

全圣兴

西江大学 大学院 毕业

<现> 西江大学 社会科学部 政治外交专业 副教授

[主要 经历]

中国人民大学 国际关系学院 客座教授

● 진창이 (金强一)

1982년 7월 란저우(蘭州) 대학 철학과 졸업

[주요 경력]
중국 옌볜대학교대학교 정치과 주임교수 외 동북아국제정치연구소 소장
동북아 연구원 원장 등 역임
중국 옌볜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부교수 1982. 09~
〈현〉 중국교육부 고등교육연구기지한반도(한국・북한) 연구센터 주임

[해외 경력]
한국 경희(慶熙)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석좌연구원 (1993. 06~1994. 03)
일본 시주오카(静崗) 국립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객원교수 (2003. 06~2004. 06)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석좌연구원 (2009. 11~2010. 02)

[주요 연구 방향]
한반도문제, 중국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주요 연구성과]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에 대해서』, 『미・일 동북아전략 및 한반도 문제』, 『중미일 동북아전략 속의 한반도 문제』, 『중국의 동북아지역전략과 동북아정치구조』 등 60여편 논문 발표

金强一

1982年7月毕业于兰州大学哲学系。

[主要经历]
历任政治系主任、东北亚国际政治研究所所长、东北亚研究院院长等职。
延边大学国际政治专业担任教授，1982. 09~
<现) 任中国教育部高校重点研究基地—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

[海外经历]
韩国庆熙大学亚太研究所客座研究员, 1993. 06~1994. 03
日本静岗国立大学国际政治学部客座教授, 2003. 06~2004. 06
韩国东北亚历史财团客座研究员, 2009. 11~2010. 02

[主要研究方向]
朝鲜半岛问题、中国东北亚区域发展战略

[主要研究成果]
《论中国的东北亚区域战略》《美日东北亚战略与朝鲜半岛问题》《中美日东北亚战略框架之中的朝鲜半岛问题》《中国的东北亚区域战略与东北亚政治结构》等论文60余篇。

● 이문기 (李汶紀)

[주요 경력]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부교수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학회 발행) 편집위원장

[주요 연구성과]
"국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전략: 공세외교 논란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52집, 2011.
"중국의 기층선거: 선거민주주의인가 선거권위주의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3호, 2012.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백산, 2012) (공저)

李汶紀

[主要经历]
现世宗大学 中国通商学科 副教授
〈现代中国研究>（现代中国学会发行）编辑委员长

[主要研究成果]
“国际金融危机以后中国的国际情势认识与外交战略：以攻势外交争论为中心”，
〈中国研究〉52卷，2011
“中国的基层选举：民主主义或权威主义”《世界地区研究论丛》，
30卷 3号，2012〈中国的兴起与东亚〉，白山，2012

● 장사오밍 (张小明)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학과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현〉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해외 경력]
미국우드로윌슨 센터 (1994), 한국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1998)
미국하버드대학 페어뱅크동아시아연구소(1999~2000)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2000)
일본츄오(中央)대학교 (2005)
영국런던경제대학 (2007~2008)
일본세이케이(成蹊大学)대학 (2009) 방문학자역임

[주요 연구성과]
《조지케넌(George Frost Kennan) 봉쇄사상연구》, 1994년
《냉전과유산》 1998년
《중국주변안전환경분석》 2003년
《국제관계영국학파 : 역사, 이론과중국관》 2010년
《미국과동아시아관계개론》 2011

张小明

获北京大学国际政治专业学士、硕士和博士学位

<现>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海外经历]
美国伍德罗•威尔逊国际学者中心（1994）
韩国高丽大学亚细亚问题研究所（1998）
美国哈佛大学费正清东亚研究中心（1999~2000）
瑞典斯德哥尔摩国际和平研究所（2000）
日本中央大学（2005）
英国伦敦经济学院（2007~2008）
日本成蹊大学（2009）任访问学者。

[主要研究成果]
《乔治•凯南遏制思想研究》（1994）
《冷战及其遗产》（1998）
《中国周边安全环境分析》（2003）
《国际关系英国学派：历史、理论与中国观》（2010）
《美国与东亚关系导论》（2011）

● 신성호 (辛星昊)

미국 터프츠 대학 플레쳐 스쿨 국제정치학 석사, 박사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주요 경력]
미 국방부 아태안보연구소 (APCSS) 연구교수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워싱턴 East West Center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

[주요 연구영역]
연구관심은 동아시아 안보와 국가전략, 한미동맹과 한반도, 인구변화와 동북아 국제정치 등

[주요 연구성과]
"Northeast Asia's Aging Population and Regional Security: Demographic Peace?" Asian Survey Vol 53, No. 2 (March/April 2013)
"박근혜 정부의 4강 외교"〈외교〉 2013년 3월
"미국의 아시아 올인(All-in) 정책" 〈전략연구〉2012년 7월
"Nuclear Sovereignty vs Nuclear Security: Renewing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3, No.24 (June 2011) 등

辛星昊

美国塔夫斯大学弗莱彻学院 国际政治学硕士，博士
现 首尔大学 国际大学院 副教授

[主要经历]
美 国防部 亚太安保研究所(APCSS)研究教授
美 布鲁金斯学会 东北亚研究所 客座研究员
华盛顿East West Center客座研究员 等

[主要研究领域]
东亚安保与国家战略，韩美同盟与韩半岛，人口变化化与东北亚国际政治。等

[主要研究成果]
“Northeast Asia’s Aging Population and Regional Security: Demographic Peace?” Asian SurveyVol 53, No. 2 (March/April 2013)
“朴槿惠政府的4强外交”<外交> 2013.03月
“美国的亚洲All-in政策”<战略研究>2012.07月

● 장달중 (张达重)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교수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일본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1978~1979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1982~1986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 객원교수1983
일본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1985~1986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2000~2004

张达重

<现> 首尔大学 名誉教授
韩国 首尔大学 学士，硕士
美国 加利福尼亚大学伯克利分校 博士
首尔大学 社会科学大学 政治学 教授
统一部政策 咨询委员 , 统一部政策评价委员会 委员长

[主要经历]
日本 东京大学 社会科学研究所 客座研究员 1978~1979
西江大学 政治外交学 助教授 1982~1986
美国 加利福尼亚大学伯克利分校大学院 东亚研究院 客座教授 1983
日本 东京大学 社会科学研究所 客座教授1985~1986
国防部 政策咨询委员 2000~2004

● 진징이 (金景一)

옌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문학학사 학위 취득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경력]
베이징대학교 동방학과 강사, 부교수, 교수, 조선문화연구소 소장 역임 (1992~)
현베이징 동방학과 교수, 중앙민족대학교 985공정 특임교수 겸임

[해외경력]
일본게이오(庆应)대학교 지역연구소 석좌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방문 연구원 역임

[주요연구성과]
《중국의 6.25전쟁참가 의기원》 등

金景一

毕业于延边大学中文系，获文学学士学位
毕业于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获法学博士学位。

[主要经历]
北京大学东方学系任讲师、副教授、教授、朝鲜文化研究所所长。(1992-)
现 东方学系教授。兼任中央民族大学985工程特聘教授。

[海外经历]
日本庆应大学地域研究所任客座教授
韩国学中央研究院、韩国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任访问研究员。

[主要研究成果]
《中国参加朝鲜战争起源》等。

● 전재성 (全在晟)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낸 바 있다.
〈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과 동아시아 연구원 아시아안보센터 소장
〈현〉 외교통상부, 통일부 자문위원

[주요 연구영역]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외교정책 등

[주요 연구분야]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2009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2010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국의 전략 연구" 안보문제연구, 2009 등
〈동아시아 국제정치〉
〈정치는 도덕적인가? :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

全在晟

韩国 首尔大学 外交学 学士，硕士
美国 西北大学 国际政治学 博士

[主要经历]
日本庆应大学访问教授
<现> 首尔大学外交学教授
<现> 首尔大学国际问题研究所所长/东亚研究院亚洲安保中心所长
<现> 外交通商部，统一部咨询委员

[主要研究领域]
国际政治理论，国际关系史，东亚安保论，韩国外交政策等

[主要研究成果]
有关欧洲国际政治近代出现的理论研究”国际政治论丛，2009
考察有关构成主义国际政治理论的脱近代论与现实主义的批判”国际政治论丛，2010
强国的兴起与对应国的战略研究”安保问题研究，2009 等
《东亚国际政治》《政治是道德的吗？：Karl Paul Reinhold Niebuh的超越现实主义》

● 파오동쉰 (朴东勋)

옌볜대학교 외국철학전공(철학석사) 1999~2002
한국 전남대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 박사) 2004~2008

[주요 경력]
한국 서울대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2012~2013
〈현〉 옌볜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부주임, 부교수

[주요 연구성과]
"2010 : 한반도 국세변화와 미국의 아태전략", 《한국년도관찰》, 옌볜대학출판사 2011년
"박정희시대 한국발전형국가 형성과 과정 ", 《옌볜대학학보》 (철학사회판) 2011年 제1집
"중국의 대북 정책논리와 북, 중관계", 《국제문제연구》 2011년 제3집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한 관계 : 천안함사건이후", 《한국과국제정치》 2011년 제2집

"한중간의 실재적국경과 내재적국경의 상호작용 : 황해어업 분쟁을 중심으로,"《국제정치연구》, 제15권 제1호, 2012
"중국의 조어도분쟁에 있어서 대응 전략의 변화,"《한국동북아논총》, 제66권, 2013
"중국에서의 한국정치 연구동향과 과제 :『韓國研究論叢』과『當代韓國』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2013
• "김정은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 포스트마오시기 (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통일정책연구》, 제22권, 2013

朴东勋

延边大学外国哲学专业（哲学硕士学位）1999~2002
韩国全南大学政治外交学部（政治学博士） 2004~2008

[主要经历]
韩国首尔大学中国研究所客座研究员, 2012~2013
<现> 延边大学亚洲研究中心副主任, 副教授.

[主要研究成果]
"2010 :朝鲜半岛局势变化与美国的亚太战略"，《韩国年度观察》， 延边大学出版社，2011年
"论朴正熙时期韩国发展型国家的形成与演变"，《延边大学学报》（哲社版），2011年 第1期
"中国对朝政策内在逻辑与中朝关系"，《国际问题研究》（韩），2011年第3期
"中国的对朝政策与中韩关系: 以天安舰事件为例"，《韩国与国际政治》（韩）， 2011年 第2期
"中韩黄海渔业纠纷探析"，《国际政治研究》（韩），第15卷, 2012
"钓鱼岛纠纷与中国的对应战略"，《韩国东北亚论丛》（韩）, 第66卷, 2013
"中国学界韩国政治研究现状与课题"，《韩国与国际政治》（韩）, 第30卷, 2013
"金正恩时代朝鲜体制改革所面临的问题——与后毛泽东时期（1976~1978）的中国经验相比较"《统一政策研究》（韩），第22卷, 2013

● 조성렬 (赵成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박사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주요 경력]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연구과
게이오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기획실장
국제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

[주요 연구영역]
동북아국제관계론, 일본정치론, 한미동맹론, 한반도평화체제론, 북한외교론 등

[주요 연구성과]
〈정치대국 일본 :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 나비사랑, 1994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공저, 한울아카데미, 2003
〈한반도 평화체제 :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푸른나무, 2007
〈뉴 한반도 비전 :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백산서당, 2012 등

赵成烈

首尔大学 工科大学 毕业
成均馆大学 大学院 政治系 硕士，博士
<现> 国家安保战略研究所 责任研究委员

[主要 经历]
日本 东京大学 大学院 综合研究科
庆应大学 法学部 客座研究员
国家安保战略研究所 计划室长
国际安保室长
青瓦台安保室 政策咨询委员
国防部 政策咨询委员
民族平统 常任委员 等

[主要研究领域]
东北亚国际关系论，日本政治论，韩美同盟论，韩半岛和平体系论，北韩外交论 等

[主要研究成果]
<政治大国日本：日本的政界改革与21世纪国家战略>, 蝴蝶爱, 1994
<驻韩美军：历史，焦点，展望>, 共著, Hanul Publishing Group, 2003
<韩半岛和平体系：韩半岛非核化与北韩体系的展望>, 绿树, 2007
<新韩半岛展望：非核化与统一之路>, 白山书堂, 2012 等

● 한시엔둥 (韩献栋)

중국인민대학 공산당사과 졸업
한국 경남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취득
〈현〉 중국정법대학 국제정치과 부주임교수, 동 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집행주임

[주요 연구 영역]
한반도문제, 동북아국제관계와 정치발전

[주요 연구성과]
《한반도의 안전구조》,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9년

《분단과동맹:한반도안전의 국제정치》, 한국학술정보출판사 2008년
《동아시아국제체제전환 : 역사발전과정과구조의변천사》
《북미관계의 발전 : 회고와사고》
《한국의 외교문제 : 한 개의 종합적 구조 해석》
《한국의 보수주의 : 특징과 영향》
《능력구축과조선 : 중국의경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 중국의각》
《Rethinking China–ROK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 How to Substantialize It》

韩献栋

中国人民大学中共党史系 毕业
获韩国庆南大学北韩学博士学位
<现> 中国政法大学国际政治系副主任、中国政法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执行主任。

[主要研究领域]
朝鲜半岛问题、东北亚国际关系与政治发展。

[主要研究成果]
《朝鲜半岛的安全结构》，中国社科出版社2009年；
《分断与同盟：韩半岛安全的国际政治》，韩国学术情报出版社，2008年。
《东亚国际体系的转型：历史演化与结构变迁》
《朝美关系的发展：回顾与思考》
《韩国的外交困境：一个概括性框架的解读》
《韩国的保守主义：特征与影响》
《能力构造与 朝鲜：中国的经验》
《从停战协定到平和协定：中国的视角》
《Rethinking China-ROK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How to Substantialize It》

● 정형곤 (鄭衡坤)

獨逸 쾰른(Koeln) 大學校 經濟學博士

[주요 경력]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방문학자
國家安全保障會議(NSC) 戰略企劃室 先任行政官
國家安保前略研究所 研究委員
〈현〉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先任研究委員
[주요 연구성과]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한반도 경제공동체 : 그 비전과 전략
체제전환의 경제학

鄭衡坤

德国 科隆大学 经济学博士

[主要经历]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访问学者
国家安全保障会议(NSC) 战略企划室 先任行政官
国家安保战略研究所 研究委员
<现> 对外经济政策研究院 先任研究委员

[主要研究成果]
北朝鲜的市场化与经济体制的变化展望
韩半岛经济共同体：展望与战略
体制转换的经济学

● 홍면기 (洪冕基)

중국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 학위 취득

[주요경력]
통일부 1989~2007
〈현〉 동북아역사재단 정책기획실 2007~

[주요연구영역]
남북한관계, 동아시아평화 및 초국경 협력, 재외한인문제 등

[주요연구성과]
《영토적 상상력과 통일의 지정학 :》 삼성경제연구소, 2006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기원》 논형, 2005 등 의 저역서와 관련논문이 다수있다.

洪冕基

获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博士学位

[主要经历]
统一部 1989~2007
<现> 东北亚历史财团政策计划部 2007~

[主要研究领域]
南北韩关系，东亚和平和超国家协力，在外韩人问题等

[主要研究成果]
《领土的想像力和统一的地政学》三星经济研究所，2006
《中国参战朝鲜战争的起源》论衡，2005 等有诸多的著译书和有关论文。

● 박태균 (朴泰均)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주요연구영역]
〈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2000년)

[주요 경력]
하버드 대학교 옌칭 연구소 방문 연구원 (Visiting fellow), 1997~1999
KBS 〈인물현대사〉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자문연구원, 2000~
《역사비평》 편집위원, 2001~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Pacific Affairs》 편집위원, 2005~

[주요 연구성과]
《현대사를 베고 쓰러진 거인들》 1994
《조봉암 연구》 1995
《한국현대사강의》공저, 1998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공저, 2004 등

朴泰均

大韩民国的历史学家
<现> 韩国 首尔大学 国际大学院 教授
首尔大学 国史专业 毕业，获同大学院的博士学位

[主要研究领域]
《1956~1964年 韩国 经济开发计划的成立过程》，2000

[主要 经历]
哈佛燕京学社 访问研究员，1997~1999
<现> KBS 〈人物现代史〉• MBC 〈现在都能说〉咨询委员团, 2000~
《历史批评》编辑委员, 2001~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的《Pacific Affairs》 编辑委员, 2005~

[主要 研究成果]
《枕着现代史，倒的巨人们》1994 《枕着现代史，倒的巨人们发》
《曹奉岩研究》1995, 《韩国现代史讲义》共著, 1998
《在朴正熙模式与新自由主义之间》共著, 2004 等

● 장즈창 (张志强)

중국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연구원 (교수)
중국철학연구실주임, 북경대학철학박사
중국철학사학회발간잡지『중국철학사』편집부주임
한국 서울대학교 철학연구소 방문학자 (2000)
일본 동경대학 중국사상문화연구소 (2009) 방문학자
대만 교통대학 사회문화연구소 담임 객원교수(2011) 역임
장기적으로 중국 명청 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학술사, 사상사, 근대불학, 유식불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张志强

中国社会科学院哲学研究所研究员（教授），中国哲学研究室主任，北京大学哲学博士，兼任中国哲学史学会《中国哲学史》杂志编委、编辑部主任。
曾在韩国国立首尔大学哲学研究所（2000年）、日本东京大学中国思想文化室从事访问研究（2009年），并曾在台湾交通大学社会文化研究所担任客座教授（2011年）。
长期从事中国明清至近代的学术史和思想史、近代佛学、唯识佛教研究。

● 강명구 (姜明求)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987~
〈현〉 아시아연구소 소장

[주요 연구영역]
아시아 미디어론, 미디어와 문화연구, 질적연구방법론
최근에 냉전과 텔레비전 방송의 문화사, 해방 후 한국소비문화의 형성, 지식생산의 식민성, 훈민(訓民) 공론장의 이론적 구성 등에 대한 연구 수행

[주요 경력]
동경대 특임교수, 베이징대, 전매대 방문교수
세계문화학회 아시아지역 대표이사,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공동대표로 활동
서울대 기초교육원 원장, 자유전공학부 추진단장

姜明求

首尔大学 言论与情报专业 教授 1987-
<现> 亚洲研究所 所长

[主要研究领域]
亚洲 媒体论，媒体与文化研究，定量分析方法论
最近关于“冷战与电视播放的文化史，解放后的韩国消费文化的形成，知识生产的殖民性，训民公论场的理论性构成”等的内容进行研究。

[主要经历]
东京大学 特任教授
北京大学，传媒大学访问教授
世界文化学会 亚洲地区 代表理事，全球 因特网管理 共同代表
首尔大学 基础教育院 院长，自由专业学部 促进团 团长

● 진 쥔(金 俊)

1970년 10월 15일 생
중국 난카이대학교 역사학과 중국사 전공(역사학 학사) 1988. 9~1992. 8
중국 옌벤대학교 역사학과 외교사 전공(역사학 석사) 1995. 9~1999. 7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동양사 (박사) 2000. 4~2006. 3

[주요 경력]
중국 옌벤대학교역사과 조교수 1992. 9~1999. 3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대학원 종합과학연구과 외국인특별연구원 2006. 4~2008. 8
중국 칭화대학 역사학과 보조연구원 2008. 9~2011. 3
중국 옌벤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2011. 4~2012. 5
〈현〉 쩌장공상대학 동아문화연구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겸 연구원장 2012. 6~현재

[소속학회]
중국일본사학회 대외연락부 부장
중국조선민족사학회 부비서장
절강성중한경제문화교류연구회부비서장

[겸직]
중국 칭화대학교 인문과사회과학 고등연구소 겸임연구원
중국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겸임연구원
일본 토아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金 俊

中国南开大学历史系中国史专业（历史学学士）1988. 9~1992. 8
中国 延边大学历史系外交史专业（历史学硕士）1995. 9~1999. 7
日本広島大学 大学院 国际协力研究科 东洋史专业 (学科博士) 2000. 4~2006. 3

[主要经历]
中国延边大学历史系助教授 1992. 9~1999. 3
日本広岛大学 大学院 综合科学研究院科 外国人特别研究员 2006. 4~2008. 8
中国清华大学历史系 助研究员 2008. 9~2011. 3
中国延边大学历史系副教授 2011. 4~2012. 5
<现> 浙江工商大学 东亚文化研究院韩国学研究所 研究员/所长 2012. 6~

[所属学会]
中国日本史学会 对外联络部 部长
中国朝鲜民族史学会 副秘书长
浙江省 中韩经济文化交流研究会 副秘书长

[兼职]
中国清华大学人文于社会科学高等研究所兼任研究员
中国中央民族大学韩国文化研究所兼任研究员
日本东亚大学东亚文化研究所兼任研究员

● 백지운 (白池云)

연세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일본 게이오대학, 중국 칭화대학, 대만 텅하이대학 등에서 수학했다.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주요 연구영역]
「중국 근대성 담론을 통해 본 梁啓超 계몽사상 재고찰」

[주요 연구성과]
「폭력의 연쇄, 연대의 고리 – 오키나와 문학의 발견」
「근대 중국 아시아 인식의 문제성: 동아시아 평화공존을 위한 사상자원을 찾아」

“East Asian perspective on Taiwanese identity: a critical reading of ‘overcoming the division system’ of Taiwan: A Radical Quartely in Social Studies”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공저) 등

白池云

延世大学中文系毕业
获延世大学大学院博士学位

[主要研究领域]
博士毕业论文论述了梁启超的启蒙思想和中国的现代性话语。

[主要经历]
日本庆应大学交换研究员，
北京清华大学高级进修生，以及台湾东海大学研究员等。
<现> 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的HK研究教授。

[主要研究成果]
《暴力的连锁，连带的环节-冲绳文学的发现》
《近代中国亚洲认识的难题：为了寻找东亚和平共存的思想资源”》
《从东亚视角看台湾人的身份认同”,《东亚，翻译近代》（共著）等。

● 왕린창 (王林昌)

[주요 경력]
1968년 북한 김일성대학 어문학부 졸업, 번역업무를 다 년간 하였음.
인민일보사 서울지사장, 특파원 기자 역임. 1997~2002
〈현〉 유럽-미국동학회 중국유학생연합회 부회장, 한반도분회 회장,
중국아태학회 한반도연구회 위원, 중한우호협회 미디어위원회 위원,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겸직 연구원 등.
특파원 생활 기간 동안, 한국의 보도에 관하여 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많은 글들을 인민일보에 발표.
귀국 후, 한반도문제연구하고, 가끔 환치우시보 등의 잡지에 기고 함.

[주요 연구성과]
《외국풍속-한국》 2006년, 세계지식 출판사

王林昌

[主要经历]
1968年毕业于朝鲜金日成大学语文学部，从事翻译工作多年
1997-2002年曾任人民日报社驻汉城（现首尔）分社长、特派记者。
<现> 任欧美同学会中国留学人员联谊会副会长、朝韩分会会长，
中国亚太学会朝鲜半岛研究会委员、中韩友协媒体委员会委员、
北京大学韩国学研究中心兼职研究员等职。
在担任特派记者期间，写有大量关于韩国的报道发表于人民日报，有一定社会影响。
归国后从事朝鲜半岛问题研究，间或有文章发表于环球时报等报刊杂志。

[主要研究成果]
《外国习俗丛书--韩国》 2006年，世界知识出版社出版

● 박장배 (朴章培)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주요 경력]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인천대학교 연구교수

〈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주요 연구성과]
“‘신중국’의 티베트 정책” 『중국근현대사연구』 (39) 2008. 09
“만철 조사부의 확장과 조사 내용의 변화”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43) 2009. 09
『역대 중국의 판도 형성과 ‘변강’ 지배』 한신대출판부, 2008 (공저)
『중국 동북 연구—방법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공저) 등

朴章培

获西江大学博士学位

[主要经历]
韩信大学 研究教授
仁川大学 研究教授
<现> 东北亚历史财团研究委员

[主要研究成果]
“新中国的西藏政策” 『中国近现代史研究 』(39)2008.09
“满铁调查部的扩张与调查内容的变化” 『韩国中国近现代史学会』(43) 2009.09
『历代 中国的版图形成与边疆统治』，韩信大出版部，2008（共著）
『中国 东北 研究-方法与趋势 』东北亚历史财团, 2010 (共著) 等

서 울 대 학 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문화관 151-742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 +82 (0)2-880-4052~4 F +82 (0)2-874-7305 http://tongil.snu.ac.kr